

Prosper with EDCF, Financing for Tomorrow

#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24 NO. 1



• PART 01 국제개발협력 동향

- 주요 공여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상원조 동향과 시사점
- OECD DAC,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발표
- OECD DAC, 우리나라 동료검토 결과보고서 발간

• PART 02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사업기간 편차와 그 원인 분석
- 교량 분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PART 03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케냐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인도네시아)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한국의 개발협력 2024-1

---

발 행 : 2024년 6월

발 행 인 : 윤희성

발 행 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 집 인 : 조정화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 화 : 02-3779-6114(대표)

팩 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http://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CONTENTS

한국의 개발협력  
2024년 1호

## PART 01

### 국제개발협력 동향

---

주요 공여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상원조 동향과 시사점 / 3

OECD DAC,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발표 / 35

OECD DAC, 우리나라 동료검토 결과보고서 발간 / 41

## PART 02

###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사업기간 편차와 그 원인 분석 / 49

교량 분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 / 86

## PART 03

###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111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140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174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209



PART  
01

---

## 국제개발협력 동향

---

주요 공여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상원조 동향과 시사점

OECD DAC,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발표

OECD DAC, 우리나라 동료검토 결과보고서 발간

EDCF





# 주요 공여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상원조 동향과 시사점<sup>1)</sup>

구보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 - 목 차 -

- I. 서론
- II.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현황
  - 1. 독일
  - 2. 일본
  - 3. 프랑스
- III.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상원조 전략
  - 1. 독일의 분권적 개발협력과 삼각협력
  - 2. 일본의 제안형 ODA
  - 3. 프랑스의 금융협력 확대
- IV.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 2. 시사점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이 수행한 '아시아 주요국 경제협력 분석과 유상원조 시사점' 연구보고서 중 필자가 작성한 '제2장 주요 공여국의 ODA 전략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I. 서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경쟁 양상은 원조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호 충돌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은 일본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소위 ‘2류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 환경의 변화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성격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건 위기, 점증하는 기후변화 위기, 글로벌 경기침체, 그리고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변화와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주요 공여국들은 외교 및 개발협력 전략을 통합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양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세안은 한국에 무역 및 투자 규모가 전체 2위로, 상호 강점과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다. 이러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2년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여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ODA 규모 확대 및 정책 선진화 등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2022년 ODA 집행 누계 비율에 따르면, ODA 지원액의

45%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투입되었고, 한국 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유상원조의 36.5%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공여국과 구(舊) 식민지 지역이라는 특수 관계에 있으며, 이를 활용한 공여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공여국인 독일, 일본, 프랑스의 개발협력 현황 및 유상원조 전략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현황

한국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중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ODA를 지원한다. 2021~2022년 동안 상기 6개국에 대한 ODA 규모 면에서, OECD DAC 회원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및 호주가 주요 공여국으로 협력한다. 미국과 호주는 ODA 전액을 무상원조로 지원하는 반면, 일본, 독일 및 프랑스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다.

[표 1] 2021~22년 DAC 회원국 ODA 규모

(단위: USD 백만)

수원국	2021~22년 DAC 회원국 ODA 규모						
	전체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호주	독일
캄보디아	2,151	1,068	268	213	195	149	110
유상원조	1,153	848	148	-	154	-	1.9

수원국	2021~22년 DAC 회원국 ODA 규모						
인도네시아	전체	일본	독일	호주	프랑스	미국	한국
	4,812	1,743	1,435	538	306	273	174
유상원조	2,973	1,494	1,178	-	228	-	72
라오스	전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스위스	독일
	1,436.69	172.88	167.91	127.76	78.05	70.68	65.32
유상원조	482.23	-	13.08	-	-	-	-
미얀마	전체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1,832.88	388.52	135.46	134.36	88.09	81.91	72
유상원조	122.71	-	-	-	-	-	-
필리핀	전체	일본	프랑스	한국	미국	호주	독일
	4,264	2,937	350	321	318	143	70
유상원조	3,282	2,731	300	235	-	-	14
베트남	전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호주
	2,648	903	449	414	293	242	154
유상원조	1,345	679	260	295	-	103	-

출처: OECD, Stat

## 1. 독일

독일의 ODA 정책은 국제적인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협약과 의무에 기초하고, 개발협력의 핵심 사항이 국내외 정책에 일관적으로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SDGs) 및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과 수원국의 빈곤 감소 그리고 범지구적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 기술 중심의 산업화를 이룬 자국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소외층의 빈곤을 해소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 식량 안보, 지속가능한 경제, 기후 및 에너지,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 보장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고 SDGs를 이행한다. 특히, 기아와 빈곤은 항상 독일 개발원조 활동의 최우선순위 분야이다.

독일은 현재 개발협력만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 유일한 DAC 회원국으로<sup>2)</sup>, 독일은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MZ)가 개발협력 정책을 총괄하고, 개발은행(KfW)과 개발금융기관(DEG)이 양허성 원조 및 민간 부문 금융을 지원하여, 정책, 기술, 금융 분야의 이원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독일은 글로벌 공공재와 전문 기술 전수에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 정책을 보완한 『BMZ 2030 개혁(BMZ 2030 Reform strategy)』을 발표하였다. BMZ 2030은 기존의 85개 수원국을 60개국으로 축소하고, 개발협력을 양자, 글로벌, 넥서스·평화 파트너 등 다양한 파트너십 모델로 분류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11개 중점지원분야를 ①평화 및 포용적 사회, ②빈곤퇴치, ③기술훈련 및 고용창출, ④기후 및 에너지, ⑤환경 및 천연자원 등 5개 분야로 축소하고, 모든 사업을 6개의 질적 기준<sup>3)</sup>으로 측정한다.

2) OECD iLibrary.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Germany 2021

3) ①인권, 성평등, 장애인 포용, ②반부패, 통합, ③빈곤 및 소득 불평등 완화, ④환경 및 기후 영향평가, ⑤분쟁 취약성, ⑥디지털 기술

[표 2] 새로운 파트너십 분류 현황

수원국	양자 파트너	글로벌 파트너	넥서스·평화 파트너
내용	공동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협력 추진	기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분쟁 등 위기국 대상으로 안정, 평화구축 지원
국가	39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등 8개국(정치적 지원): 알바니아, 조지아 등	8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 남아공, 베트남, 중국	10개국: 차드, 이라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출처: BMZ 2030 reform strategy

BMZ 2030 정책은 지역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남남협력과 북남 협력을 연결하여 개발계획 및 자금조달 그리고 개발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삼각 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추진한다. 아시아 지역은 여성 및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 기반 접근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TVET)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일자리와 기술을 위한 TVET 시스템 현대화, 재생에너지 분야 교육 강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전문 기술 양성, 녹색일자리 센터 확충,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이 있다.<sup>4)</sup>

2022년 독일은 ODA 규모 측면에서 총 356억 달러를 지출하여 DAC 회원국 중 2위의 최상위 공여국이다. 2020년부터 ODA/GNI 비율이 DAC의 목표치인 0.7%를 초과하였고, 2022년에는 0.85%를 기록하였다.

4) BMZ, 2023. German development policy with Asia

[표 3] 2018~22년 독일의 ODA 추이(증여 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ODA/GNI(%)		0.61	0.61	0.73	0.76	0.85
ODA 총액*		24,975	24,197	28,707	33,272	35,640
양자	총액	18,764	18,581	22,116	24,776	28,318
	무상	17,014	16,702	19,453	22,502	25,834
	유상	1,439	1,096	1,794	1,408	1,896
다자		6,211	5,616	6,591	6,591	7,322

출처: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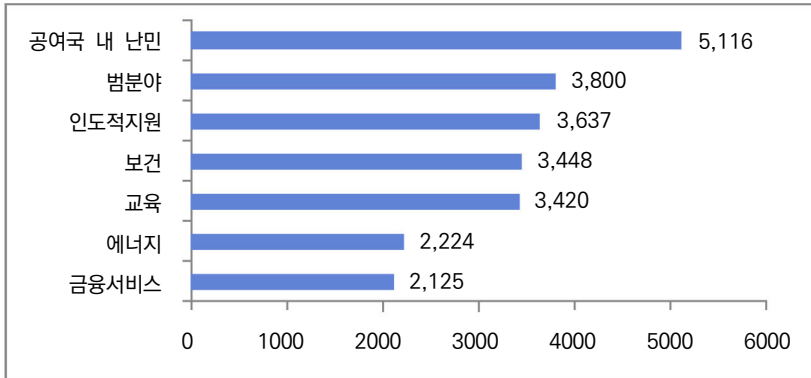
\* ODA+OOF+Private 총액

양자 ODA의 비율은 79% 이상으로, 이 중 약 7%는 유상원조 형태로 지원하였다. 2021년 기준 비구속성 ODA의 비율은 82.4%이고, 총 양자 ODA의 20%는 다자기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예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위기로 인해 2015년 이후부터 독일 망명이 증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자국 내 난민 지원이 확대되었으며(Brettfeld, et al., 2023), 팬데믹 이후에는 교육 분야(직업 및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그림 1] 2022년 독일의 분야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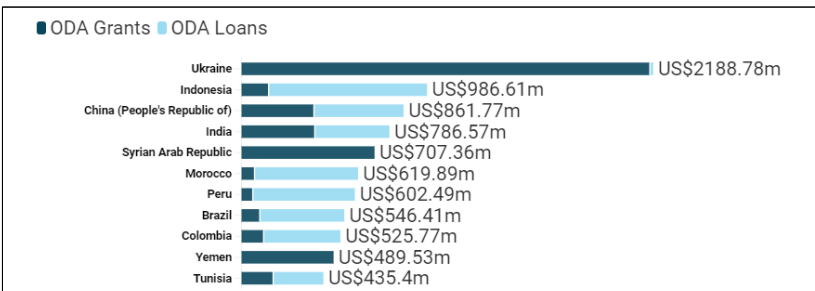


출처: Donor tracker

2022년 아시아에 대한 지원은 전체 ODA의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내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에 대한 ODA 비중 또한 전체 ODA의 13%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 2022년 독일의 국가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Donor tracker



독일은 주로 차관 대출 형태로 지원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다.

## 2. 일본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적극 지원하며, 동시에 자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개발 협력을 추구한다. 2023년 개정된 『개발협력대강』에는 ‘국익’의 실현이 개발협력의 목적으로 명기되어 국익 우선의 제도 설계가 더욱 두드러져 있다. 또한, 『제안형(offer-type cooperation) ODA』를 처음으로 구상하여 ODA의 전략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 불리는 신흥 경제국인 동남아시아,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을 중요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변화를 경계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에 ODA를 활용하여 해양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비군사적 목적을 위한 방위 지원을 가시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ODA의 중점정책에는 질 높은 성장,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강화, 지구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주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민간기업, 공적 금융기관, 국제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민간자금 동원형 ODA 및 제안형 ODA의 도입도 고려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양질의 경제 인프라 개발’을

5) 박명희, 2023.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가 차관을 활용하여 건설을 승인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침체된 일본 경제를 촉진하고자 한다.<sup>6)</sup>

[표 4] 2018~22년 일본의 ODA 추이(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ODA/GNI(%)		0.28	0.29	0.31	0.34	0.39
ODA 총액*		14,163	15,587	16,260	17,635	17,499
양자	총액	10,756	11,793	13,181	13,717	14,877
	무상	5,254	5,278.10	5,469	5,682	5,617
	유상	5,376	6,264.86	7,154	7,485	8,967
다자		3,407	3,794	3,078	3,917	2,622

출처: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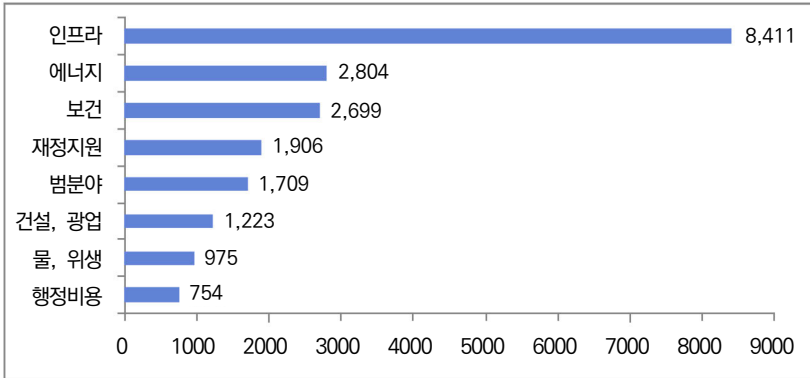
\* ODA+OOF+Private 총액

2022년 일본은 ODA 규모 측면에서 총 175억 달러를 지출하여 DAC 회원국 중 3위의 주요 공여국이다. ODA/GNI 비율은 0.39%로 회원국 중 12위를 기록하였다. 양자 ODA 비율은 85% 이상이며, 이중 차관 비율은 60% 이상으로 DAC 평균인 8%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일본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주로 긴 상환 유예 기간과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총 양자 ODA의 11%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전달(지정기탁금)하고, 2021년 비구속성 ODA 비율은 85.4%이다. 양자 ODA의 56% 이상인 84억 달러가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6) Hiroaki Shiga, 2023.

[그림 3] 2022년 일본의 분야별 ODA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Donor tracker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경제국의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급망, 디지털 혁신 및 인프라 분야를 우선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은행 및 주요 공여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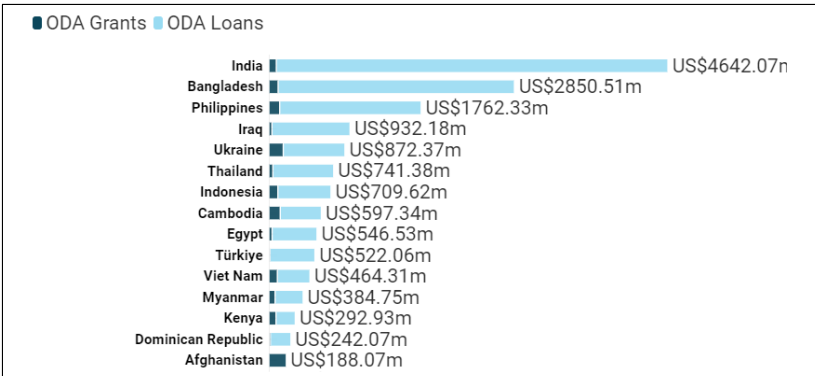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지리적, 정치적으로 밀접하고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2022년 일본 정부는 총 양자 ODA의 65%에 해당하는 90억 달러를 아시아에 배정하였고 아프리카에는 16%에 해당하는 23억 달러를 배정하여, 실질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지역인 아시아(중동 제외)에 우선 지원하는 모습이다.

7) Donor tracker, 2023. At a glance of Japan

국가별로는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유상원조가 90% 이상이다.

[그림 4] 2022년 일본의 국가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Donor tracker

2023년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FOIP<sup>8)</sup>』은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책으로 인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질 높은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 일-아세안 교류 50주년을 기념하여 1억 달러 규모의 통합기금(JAIF)을 추가 지원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AOIP<sup>9)</sup> 비전과 FOIP가 공유하는 분야인 해양 협력, 연계성, SDGs(보건, 기후변화 등) 이행과 경제 협력(물류, 디지털, 식량 안보)을 촉진하여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해양

8)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9)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안보 및 내륙 지역의 연계성 확대를 지원하고, G20 의장국이자 쿼드(QUAD) 회원국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3. 프랑스

프랑스는 빈곤 및 기아 퇴치, 식량 안보, 교육, 건강 그리고 사회적·지역적 불평등 감소와 동시에 부와 고용에 있어 공평한 경제적 개발을 지향한다. 또한, 농업진흥, 공공재 보존, 생물 다양성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 안정적 평화,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파리기후협약 등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안정 및 취약성 해결, 교육, 기후변화, 성평등, 교육, 건강, 식량 안보, 농업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원하며, 인도적 지원과 개발 연계(LRRD)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주로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개도국(LDC) 범주에 속하는 19개 우선순위 국가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및 파리 협정 이행을 중심으로 연대 노력에 집중한다.

프랑스 외무부는 2021년 ‘포용적 개발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The Programming Act on inclusive development and combating global inequalities)’을 제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채택된 국제개발연대법(LOP-DSI)을 대체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제적 과제, 불평등 및 빈곤 증가, 식량 안보, 강제 이주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과 장기적인 노력을 이행하기 위함이다.<sup>10)</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France Diplomacy, 2022. A new ambition for French development policy

[표 5] 포용적 개발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글로벌 공공재 보존을 위한 투자 확대 - 25년까지 GNI의 0.7%를 ODA에 할당 목표
2	우선순위 국가 및 분야에 집중 - 최빈국인 아프리카에 기후 변화, 건강, 교육 및 성평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구성 및 기금 확보
3	파트너십 강화 - 개발 이해관계자(지방자치 단체, 시민사회, 재단, 연구기관 및 민간부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기금 확대
4	조정강화 - 주요 기관 및 중앙행정부 그리고 수원국의 개발 정책 관리 강화, 개발협력청(AFD) 역할 확대, 주프랑스 대사는 수원국의 이해관계자를 융합하기 위해 지역개발 협의회를 주재
5	평가 체계 현대화 -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6	전문 기관 유지 - 국제개발 의제와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단 또는 국제기관 유지
7	개발자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023년 5월 5일 개최된 대통령 개발위원 회의를 통해 프랑스 국제개발협력 위원회(CICID)는 ‘포용적 개발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10가지 우선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sup>11)</sup>

[표 6] 10가지 우선 개발 목표

1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에서 석탄 사용 제한 및 탈원전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
2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숲과 바다의 탄소와 생물다양성 보호
3	개발도상국 교육 및 교사 연수 지원을 통한 청소년 교육 개발
4	1차 보건 시스템을 지원하여 취약한 국가의 보건 인력 양성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회복력 강화
5	유럽과 아프리카 청년들의 교류 확대로 아프리카에서 기업가정신 촉진
6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해 전문지식과 민간·공공 자금 지원

11) FOCUS2030, 2023. CICID 2023: France's new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7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안보 강화,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8	수원국 정부 기관에서 고의로 유포하는 허위 정보와 면책 관행 퇴치
9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 조직 및 기관 지원
10	불법 이주 및 비밀 조직에 대항하는 조직 지원

2022년 프랑스의 ODA 규모는 총 160억 달러로 DAC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0.56%로 DAC 회원국 중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7] 2018~22년 프랑스의 ODA 추이(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ODA/GNI(%)		0.43	0.44	0.53	0.51	0.56
ODA 총액*		12,136	12,211	14,124	15,505	16,014
양자	총액	6,678	7,421	9,146	9,294	9,373
	무상	4,496	5,153	5,374	6,020	6,628
	유상	1,503	1,616	2,733	2,188	2,090
다자		5,457	4,790	4,978	6,211	6,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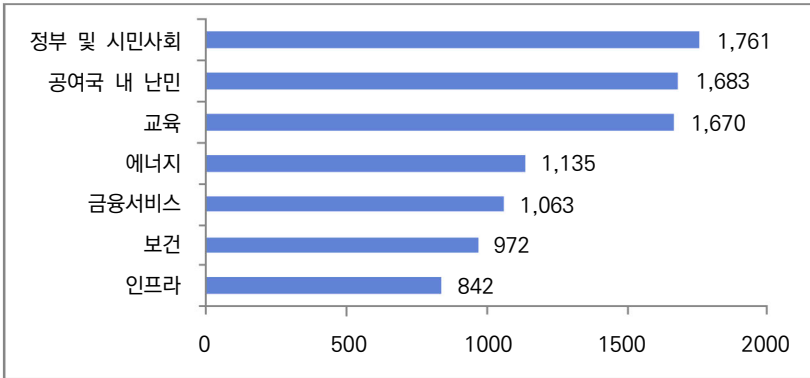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

\* ODA+OOF+Private 총액

프랑스의 양자 ODA 비율은 58.5%이며, 이 중 유상원조 비율은 22.3%이다. 총 양자 ODA의 6%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전달된다. 프랑스의 중점 지원지역은 아프리카로, 신흥 경제국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2021년 비구속성 ODA 비율은 85.3% 정도이다.

[그림 5] 2022년 프랑스의 분야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Donor tra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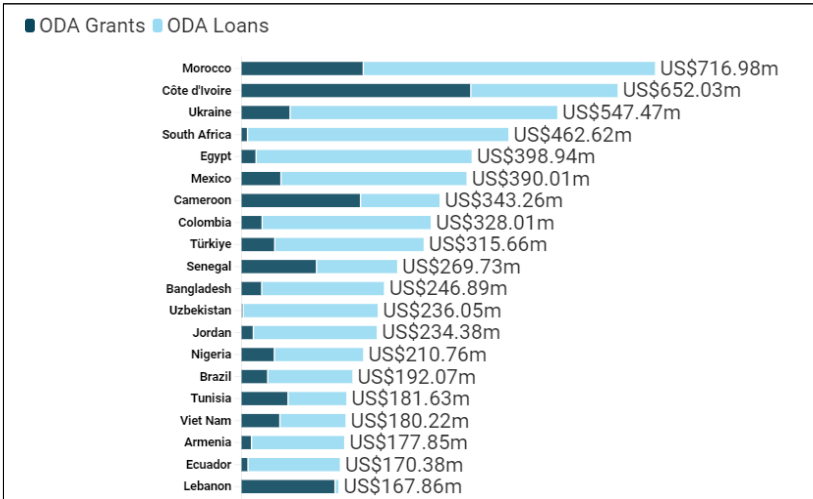
주요 지원 분야로는 정부 및 시민사회에 17억 달러, 유럽 내 난민을 위해 16억 달러, 그리고 교육에 16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수원국의 40% 이상이 중하위소득국(LMIC)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2022년 프랑스는 전체 ODA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46억 8천만 달러를 아프리카에 지원하였다. 또한, 사헬 지역을 우선시함에 따라, 사하라 이남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반면,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대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아메리카에 대한 ODA 규모는 17억 6천만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8억 5천만 달러로 50% 이상 감소하였고, 아시아에 대한 지원 규모도 약 7% 감소하였다.

12) Donor tracker, 2023. At a glance of France.



[그림 6] 2022년 프랑스의 국가별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Donor tracker

### III.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상원조 전략

주요 공여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지리적 중심인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조 다각화 정책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전에 지원을 제안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ODA 정책을 도입하여 여타 공여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양자 프로그램을 넘어, 삼각협력, 소지역협력을 확대하고, 인프라, 녹색에너지, 인도적 지원 그리고 공공재 보호 분야를 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디지털 변환 추세에 따라, 디지털 혁신을 아세안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중추적 원동력이자, 빈곤 완화를 위한 주요 원조 분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량 및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는 농촌지역의 빈곤 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sup>13)</sup> 동남아시아 국가별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로드맵 2021-2024』, 베트남의 『국가 디지털 전환프로그램 2025/2030』, 캄보디아의 『디지털 정부정책 2022-2035』, 필리핀의 『디지털 시티 2025』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아세안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현재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자 또는 다자간 ODA와 같은 국제 공공기후재정, 공공 또는 민간 기후금융으로 정부 지출, 녹색 채권 및 대출 등 금융상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4)</sup>

동남아시아가 디지털 전환을 강화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은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이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재정지원, 녹색금융 지원 등 디지털 전환과 녹색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의 경우, ICT 인프라 구축보다는 디지털 관련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보건(원격 의료 및 진단 도구), 은행(모바일 뱅킹),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화 및 전자정부), 에너지(스마트 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등 부분적인 분야를 지원한다. 녹색 프로젝트는 주로 녹색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로, 최근 일본은 베트남에 홍수관리,

13) ASEAN, 2024. ASEAN Advances Digital Transformation for Poverty Alleviation

14) ADB, 2020. Green Bonds for Financing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 Southeast Asia: A Review of Policies

산림보호, 순환경제 등을 위한 프로젝트로 4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였다.<sup>15)</sup>

## 1. 독일의 분권적 개발협력과 삼각협력

독일 중앙 정부는 주(州)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협력 참여를 늘리고, 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분권적 개발협력(Decentralised development co-operation, DDC)’을 추진 해왔다. DDC는 주로 초국가적(transnational) 또는 소지역(subregion) 단위의 협력 전략으로 이해되며 정확한 정의나 개념은 아직 없지만, OECD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개발협력을 보완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DDC를 개발정책의 중요한 보완책으로 간주하고,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지역 사회의 일상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해외투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sup>16)</sup>

독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프로그램과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는 독일 ODA의 60%를 DDC가 주도하고 있다. BMZ는 매년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개발협력 위원회(BLA-EZ)와 회의를 통해 재정 및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또한, 1993년 설립한 지역개발협력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SKEW(Service Agency Communities in One World)를 설립 하였다.

15) Minh Nguyen, 2023. Japan gives Vietnam biggest-ever ODA package

16) Smith, 2011. Dcentralised development cooperation: European perspective

독일 지방정부는 지자체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육, 환경, 건강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현지에서 SDGs를 실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교육, 기술 교류 등 지식 기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 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인턴십 및 인적자원교류 확대를 위한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 도시 대부분은 폐기물 및 물관리 분야 등 지역 공공시설 개선을 우선시하여, 지방보다는 연방정부와 협력을 선호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sup>17)</sup>

BMZ는 혁신·사회·여성 개발에 중점을 둔 ‘아시아에 대한 개발 전략(German development policy with Asia)’을 수립하고,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이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소지역협력 및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촉진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제3국과의 공동 개발 협력을 합의하였다. 삼각협력은 주로 서구 공여국이 개발협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내 신흥공여국이 부상함에 따라, 공동으로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삼각협력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8)</sup>

또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내세워, 개별 국가보다는 아세안과 양자 프로그램을

17) OECD, 2023. Reshaping Decentralis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Germany

18) GIZ, 2022. Implementing joint development projects with Asian donor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추진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농촌개발과 농업, 지속가능한 인프라,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기후, 환경, 천연자원 관리와 경제발전과 고용 등이다.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아세안에서 기후에 민감한 농업 가치 사슬 촉진(ASEAN AgriTrade)’ 프로그램과 2027년까지 진행 예정인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성과 대화 증진’ 사업 등이 있다.<sup>19)</sup>

## 2. 일본의 제안형 ODA

일본은 아세안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개발, 법치주의, 해양안보, 재해위험 감소, 보건의료 및 평화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상원조를 지원한다.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제도 및 인적자원개발, 무역 촉진과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정책에는 제안형 ODA를 추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유지하고, 개방적인 지역협력과 통합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내세웠다.

일본의 ODA는 지원 대상국의 요청을 받아 움직이는 요청주의가 원칙이다. 반면에 ‘제안형’ ODA는 일본의 강점을 살려 수원국에 매력적인 ODA 협력을 제안한다는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식으로 해석된다. 제안형 ODA 협력은 일본 정부의 FOIP 전략에 따라 ODA를 실행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하고 수원국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sup>20)</sup> 우호적인 조건의 유상원조 확대, 조달 절차 단순화, 시행시간 단축, 외국인 직접

19) GIZ. Regional cooperation.

20) 윤석정, 202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분석 및 함의

투자 제공을 위한 민간 부분 투자 금융 장려 등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제안한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인프라 개발을 위해 ODA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타당성 조사부터 건설까지의 시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sup>21)</sup>

더불어, 민간자금 동원형의 무상자금협력을 새롭게 도입하여 개발도상국 진출을 원하는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이 융합된 ODA를 제안한다.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취약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해양 안보 역량 및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유상원조를 확대하고,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 금융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를 위한 차관지원 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시뮬레이터 등 필요한 훈련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제도 구축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지역개발에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고, 대륙부의 메콩 경제권(GMS)과 해양부 소지역 협력체인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성장지대(BIMP-EAGA)<sup>22)</sup>와의 관계 증대를 위한

2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Part IV Strengthening Partnership with Diverse Actors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22) BIMP-EAGA에 해당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말루쿠, 말레이시아 사라왁, 사바, 라부안, 필리핀 민다나오, 팔라완, 브루나이 전체

경제협력, 투자 세미나, 초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비아크섬에 어항 시설 및 수산시장을 완공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참치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해수부에 'Indonesia : Integrated Fishing Ports and International Fish Markets - Phase 2' 사업을 위한 차관을 지원하여 소지역의 어시장 건설 및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 3. 프랑스의 금융협력 확대

프랑스는 19개 우선순위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국의 프랑스 대사가 지역의 개발 협의회의 의장을 맡아 ODA 조정을 강화하고, 개발 정책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의 역량을 촉진한다.

지역별 전략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전략 2020-2024』를 수립하여 기후 대응을 강화하고 자금조달 방식을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기후 대응 강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sup>23)</sup> 예를 들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송전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는 수력발전소 건설 및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FD는 내부 관행 및 절차를 개선하거나 기후 대응을 위한 신용 한도를 설정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금융서비스청(Otoritas Jasa

23) Southeast Asia Regional strategy 2020-2024.

Keuangan, OJK), 태국의 카시콘 은행(Kasikorn Bank) 등을 지원하여 녹색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 조달을 위해 유럽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AFD는 KfW 및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유럽 개발금융 주체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AFD는 기후 자금조달에 69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 이후 최고 금액이다.

## IV. 한국에 대한 시사점

### 1.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한국 정부는 1987년 유상원조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였다. 2022년 말까지 총 58개 국가의 503개 사업에 대해 총 27조 6,932억 원을 승인하고, 승인 사업에 대해 총 12조 5,519억 원을 집행하였다. 지역별 EDCF 집행 현황에 따르면, 아시아 60.4%(7조 5,859억 원), 아프리카 23.3%(2조 9,218억 원), 중남미 10.5%(1조 3,200억 원) 순으로 나타난다. 주요 분야로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분야의 승인(10조 1,721억 원, 36.7%)과 집행(3조 9,738억 원, 31.7%)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보건, 수자원·위생, 에너지, 공공행정, 통신, 교육 분야도 활발히 지원되었다.

한국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과 ODA 규모 면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우나, 2021년 ODA 규모는 28.7억 달러로 전년(22.5억



달러) 대비 6.2억 달러(27.6%) 증가하여 OECD DAC 가입 후 최대폭으로 증액하였다. 2022년에는 3.0% 감소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DAC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하였다.

[표 8] 2021~22년 우리나라의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	2022	증감률(%)	비중(%)
ODA/GNI(%)		0.16	0.17	0.01	-
ODA		2,872	2,786	△3.0	100.0
양자	총액	2,168	2,189	1.0	78.6
	무상	1,384	1,498	8.2	68.4
	유상	784	691	△11.9	31.6
다자		704	597	△15.3	21.4

출처: 외교부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43.2% 증가한 약 6조 8,421억 원으로, 양자와 다자 원조의 비율이 각 5.7%, 4.2% 증가하였다. 유상협력은 38개국 대상, 256개 사업, 2조 721억 원 규모의 차관 집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기업 진출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되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의 촉진 필요성을 인지하고, 팬데믹 안전성 등을 반영하여 그린·디지털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Silitonga(2024)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심도가 높은 전자상거래,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온라인 교육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개도국 분야별 정책과제의 수립 및 이행의 종합 지원과, 기본약정(F/A) 확대 및 체결(총 171억 달러) 등을 통한 대형프로젝트 발굴이다. 구체적으로는 단편적인 인프라 사업에서 나아가 정책컨설팅, 프로그램 차관, 인프라지원 등 종합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차관 유형과 관련하여, 교통·ICT 등 우리 기업 기술우위 분야를 중심으로는 구축성 원조를,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심으로는 비구축성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은 2018년에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수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신남방국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연계성 증진지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sup>24)</sup>.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지원하였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인정되어, 2021년 실시한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전 세계 39개국에서 총 111건의 프로젝트를 신청하였다. 2022년에는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의 민간 기업들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다. 2022년 LG CNS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KT는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텔콤과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하였다. 또한 2023년에는 삼성물산이 스마트홈, 모듈러,

24) 김익희 외, 2020.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연구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MOC를 체결하였다.

## 2. 시사점

최근 동남아시아가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추진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변화와 개발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개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공여국인 독일, 일본,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순응하여 개발 정책을 재정비하고, 수원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녹색에너지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한국이 주요 공여국과 차별화된 OD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CT 및 디지털 관련 사업 경험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의 수요에 맞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사업이 융합된 스마트 시티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2045년을 목표로 동부 칼리만탄의 세파쿠(Sepaku) 지역에 신수도(누산타라)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340억 규모의 수도 이전과 관련한 건설,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IT, 문화, 인프라 등의 분야에 한국 기업들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요청 중이다. 특히 스마트 시티 분야는 한국의 강점인 건설, 디지털, ICT 기술이 융합되어 있어 한국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2022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수도 개발협력 계획의 제3차 협력은 부산 명지 에코델타 시티, 제4차 협력은 부산 거제도의

침매터널을 모델로 하여 건설할 예정이다.<sup>25)</sup>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 협력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도로, 공항, 경전철(LRT) 사업 등 대형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건설사의 부채 급증으로 인한 건설사 통폐합(9→4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과 일본은 삼각협력 및 소다자(소지역)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소지역 협력은 국가 간 공동 이해관계로 연결된 특정 지역만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국지적 통합의 개발협력 방식이다. 셋 또는 그 이상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으로, 경제·기능적인 영역의 국지적 통합을 시작으로 거시적 통합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도모한다.<sup>26)</sup> 소지역협력은 주로 자유 무역지대, 경제회랑 등의 형태로 무역의 간소화, 낮은 관세, 조세사면 제도 등의 정책을 소지역 협력 국가 간 체결하여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아세안은 1990년대부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소지역협력을 추구하며, 대륙부의 GMS와 해양부의 BIMP- EAGA가 대표적인 협력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KASI 정책에서 소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관련 기금을 배증할 예정이다. GMS 국가는 한국의 중점 ODA 협력국으로, 인프라와 녹색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소지역 협력을 확대하고 신흥공여국과의 삼각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25) Fardah Assegaf, 2022. South Korea agrees to four infrastructure collaborations for IKN

26) 구보경, 2022.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BIMP-EAGA를 중심으로

또한, 관련 정책자금인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BIMP-EAGA 협력기금(BKCF) 등과 차관을 연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 정부가 설립한 BKCF는 소지역의 연계성과 환경 등의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원하며, 우리나라 또는 해양동남아 4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총 21개 사업을 승인하였다. 소지역협력 뿐만 아니라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측면에서도 BKCF와의 협력은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BIMP-EAGA는 인도네시아 신수도가 설립될 보르네오섬을 중심으로 항만, 유료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유상원조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50%에 이르므로, 한국 정부도 일본의 제안형 ODA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만의 차별화된 분야인 수자원과 ICT 분야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따른 자금 조달 현황 및 한국의 유상원조 가능성을 파악하여 수원국 정부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JICA 등 주요 공여기관 간 정책 협의를 확대하여 공동 사업발굴, ODA 전략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구보경 (2020). 아세안 소지역협력의 제도화 과정과 함의 : BIMP-EAGA를 중심으로. 25(2): 185-208. 아시아 연구.
- 기획재정부 (2024). 2024~2026 EDCF 중기운용방향.
- 대외경제협력기금 (2023). EDCF 2022 연차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 박명희 (2023).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윤석정 (2023).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 분석 및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해외문헌

- ADB (2020). Green Bonds for Financing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in Southeast Asia: A Review of Policies.
- BMZ (2021). BMZ 2030 reform strategy.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BMZ (2023). German development policy with Asia: Innovative - social - feminist.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GIZ (2022). Implementing joint development projects with Asian donor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 Hiroaki Shiga (2023). The new dynamic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12(1): 249-263.
- Ministry Foreign Affairs of Japan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Japan's Contribution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Free and Open World.
- OECD (2023). Reshaping Decentralis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Germany.
- Smith Jeremy (2011). Decentralised development cooperation: European perspectives. Platforma development EC.

## 온라인 자료

ASEAN (2024, February 20). ASEAN Advances Digital Transformation for Poverty Alleviation.

<https://asean.org/asean-advances-digital-transformation-for-poverty-alleviation/>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Clara Brettfield & Dorothee Bargstadt (2023, September 26). Germany's 2024 budget: Development funding, challenges, and future. Donor Tracker.

<https://donortracker.org/publications/germanys-2024-budget-development-funding-challenges-and-future-2023>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Donor tracker.

<https://donortracker.org/>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Fardah Assegaf (2022, July 28). South Korea agrees to four infrastructure collaborations for IKN. ANTARA.

<https://en.antaranews.com/news/241769/south-korea-agrees-to-four-infrastructure-collaborations-for-ikn>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FOCUS2030 (2023). CICID 2023: France's new strate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focus2030.org/CICID-2023-France-s-new-strategy-for-international-development-cooperation>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France Diplomacy (2022). A new ambition for French development policy.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development-assistance/a-new-ambition-for-french-development-policy/>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GIZ. Regional cooperation.

<https://www.giz.de/en/worldwide/10107.html>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GMS (2021). East-West Economic corridor.

<https://www.greatermekong.org/projects/projects/east-west-economic-corridor-loan-lao-pdr-4609>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Minh Nguyen (2023 October 18). Japan gives Vietnam biggest-ever ODA package.

<https://hanoitimes.vn/japan-gives-vietnam-biggest-ever-oda-package-325110.html>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20). Part IV Strengthening Partnership with Diverse Actors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on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mofa.go.jp/policy/oda/white/2020/html/honbun/b4/s1\\_1.html](https://www.mofa.go.jp/policy/oda/white/2020/html/honbun/b4/s1_1.html)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OECD.iLibrary.

[https://www.oecd-ilibrary.org/sites/0079f636-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d646dd8-en&\\_csp\\_=2b7277e7e3fbc7fb126dd32921eeb8c&itemIGO=oecd&itemContentType=chapter](https://www.oecd-ilibrary.org/sites/0079f636-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5d646dd8-en&_csp_=2b7277e7e3fbc7fb126dd32921eeb8c&itemIGO=oecd&itemContentType=chapter)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OECD.iLibrary (2021).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Germany 2021.

<https://www.oecd-ilibrary.org/sites/affd482a-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affd482a-en> [검색일: 2024년 6월 14일]

Rio Jon Piter Silitonga & Vu Trong Duc Anh (2024, March 28). How Digital Transformation in ASEAN is Driving Data Centre Efficiency. ASEAN.

<https://aseanenergy.org/post/how-digital-transformation-in-asean-is-driving-data-centre-efficiency/>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Shiga Hiroaki (2023, March 29). Strategic Japan 2023: Japan's Realism Diplomacy.

<https://www.csis.org/events/strategic-japan-2023-japans-realism-diplomacy> [검색일: 2024년 5월 14일]



# OECD DAC,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발표

노영욱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심사역

## 1. OECD DAC, 2023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 전체 DAC 통계 중 ODA 부분만 보고된 잠정치이며, 확정치는 '25.1월에 발표 예정

□ DAC(개발원조위원회)은 2023년 ODA 잠정통계 결과를 발표 ('24.4.11)

○ DAC 회원국은 '23.10월 승인된 민간지원수단(PSI)\*의 ODA 보고기준을 처음 적용하여 2023년 잠정통계를 보고

\*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자본투자 등의 금융수단을 지칭(Private Sector Instruments)

## 2. 2023년 ODA 실적과 주요 특징

□ (규모) DAC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2,237억불로 전년 (2,107억불) 대비 6.2%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주요 증가 원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적 지원, 다자기구 앞 출연·출자금 증가로 분석

\* 우크라이나 지원금액은 200억불(양자 순지출 기준)로 전체 ODA의 9%를 차지

○ 미국(660억불), 독일(367억불), 일본(196억불), 영국(191억불), 프랑스(154억불) 順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

□ (구성) 전체 ODA 중 양자원조는 75%(1,687억불), 다자원조는 25%(550억불)의 비중을 차지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90.3%(1,523억불), 유상원조는 8.0% (134억불), PSI는 1.7%(29억불)를 기록

- (ODA/GNI 비율) DAC 회원국의 전체 ODA/GNI 비율은 0.37%로 전년과 동일
  - 목표 ODA/GNI 비율(0.7%)을 달성한 국가는 노르웨이(1.09%), 룩셈부르크(0.99%), 스웨덴(0.91%), 독일(0.79%), 덴마크(0.74%)로 5개국

### 3.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규모) '23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31.3억불로 전년(28.1억불) 대비 11.4% 증가하여 DAC 회원국 중 14위('22년 15위)를 기록
  -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한 0.18%로 DAC 회원국 중 28위('22년 29위)를 차지

#### 〈 2023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 〉

(백만불)

구 분	2022	2023(잠정)	증감률	비중(%)
■ 전체 ODA (A+B)	2,810	3,131	11.4%	100.0
- 양자 ODA (A)	2,221	2,296	3.4%	73.3
유상원조(EDCF)	691	727	5.1%	(31.6)
무상원조	1,530	1,569	2.6%	(68.4)
- 다자 ODA (B)	589	835	41.9%	26.7

- (양자) 양자원조는 23.0억불을 기록하며 전년(22.2억불) 대비 3.4% 증가
  - 유상원조는 7.3억불로 전년(6.9억불) 대비 5.1%, 무상원조는 15.7억불로 전년(15.3억불) 대비 2.6% 증가

- 아시아 지역 지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48.5%)을 유지하였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順으로 지원 비중이 높음(증여등가액 기준)
- 교육(5.1억불), 보건(4.9억불) 등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17.4억불)와 운송 및 창고(17.0억불)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20.5억불)가 대부분을 차지(약정액 기준)
- 비구속성 비율은 68.6%로 전년(62.0%) 대비 6.6%p 증가(약정액 기준)
  - 유상원조(46.3%→59.3%)와 무상원조(88.0%→89.9%) 모두 증가
- (다자) 다자원조는 8.4억불로 전년(5.9억불) 대비 41.9% 증가하여, 우리나라 ODA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WB 출연·출자금은 4.0억불, ADB·IDB 등 MDB 출연·출자금은 1.3억불로 전년 대비 증가

#### 4.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전세계 ODA 규모는 코로나19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위기 대응으로 최근 5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
  - '19년 대비 '23년 인도적 지원은 37.4% 증가, 공여국내 난민 지원은 184.0% 증가(실질 기준\*) 등으로 전체 ODA 규모가 크게 증가
    - \* 환율과 물가 변동 고려
- PSI는 '23년 전체 ODA의 1.3% 수준(29억불)으로 주로 개발금융 기관(DFI)을 보유한 국가\*들이 큰 비중을 차지
  - \* 캐나다(8.1억불), 영국(3.9억불), 독일(3.7억불), 일본(3.7억불), 프랑스(1.8억불)

- '23.10월에 확정된 PSI ODA 인정기준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개도국 민간지원이 활성화되어 PSI 실적이 점차 증가할 전망
- 다자기구 지원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23년 ODA 실적이 증가하였고, '24년에는 ODA 예산 증가로 더욱 늘어날 전망
- '24년도 ODA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6조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가하였고, 유상원조 예산은 전년 대비 35.2% 증가

자료 : OECD, 'ODA Levels in 2023 - preliminary data'  
국조실,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참고1 OECD DAC 회원국 ODA 실적

순위	국 가	ODA (백만불)		순위	국 가	ODA/GNI (%)	
		2023(잠정)	2022			2023(잠정)	2022
1	미국	66,040	60,522	1	노르웨이	1.09	0.86
2	독일	36,682	35,640	2	룩셈부르크	0.99	1.00
3	일본	19,601	17,500	3	스웨덴	0.91	0.89
4	영국	19,111	15,762	4	독일	0.79	0.85
5	프랑스	15,426	16,014	5	덴마크	0.74	0.67
6	캐나다	8,074	7,836	6	아일랜드	0.67	0.63
7	네덜란드	7,361	6,470	7	네덜란드	0.66	0.67
8	이탈리아	6,014	6,646	8	스위스	0.60	0.56
9	스웨덴	5,606	5,458	9	영국	0.58	0.51
10	노르웨이	5,548	5,161	10	핀란드	0.52	0.57
11	스위스	5,164	4,497	11	프랑스	0.50	0.56
12	스페인	3,833	4,272	12	일본	0.44	0.39
13	호주	3,253	3,046	13	벨기에	0.44	0.45
14	한국	3,131	2,810	14	캐나다	0.38	0.37
15	덴마크	3,083	2,771	15	오스트리아	0.38	0.39
16	벨기에	2,826	2,657	16	아이슬란드	0.36	0.34
17	아일랜드	2,815	2,410	17	폴란드	0.34	0.53
18	폴란드	2,604	3,496	18	뉴질랜드	0.30	0.22
19	오스트리아	1,954	1,847	19	리투아니아	0.28	0.36
20	핀란드	1,570	1,616	20	에스토니아	0.28	0.54
21	체코	789	1,051	21	이탈리아	0.27	0.33
22	뉴질랜드	746	515	22	스페인	0.24	0.30
23	룩셈부르크	580	530	23	체코	0.24	0.38
24	포르투갈	526	523	24	슬로베니아	0.24	0.29
25	그리스	325	360	25	미국	0.24	0.23
26	헝가리	304	371	26	호주	0.19	0.19
27	리투아니아	191	243	27	포르투갈	0.19	0.21
28	슬로바키아	175	172	28	한국	0.18	0.17
29	슬로베니아	163	169	29	헝가리	0.15	0.26
30	아이슬란드	115	94	30	그리스	0.14	0.17
31	에스토니아	109	201	31	슬로바키아	0.14	0.15
DAC 합계		223,721	210,660	DAC 평균		0.37	0.37

참고2 우리나라 원조시행기관별 ODA 실적

(단위: 백만불)

기 관 명	2022년			2023년(잠정)			증감액 (B-A)
	양자간	다자간	총ODA(A)	양자간	다자간	총ODA(B)	
한국수출입은행 (EDCF)	735.29	-	735.29	780.19	-	780.19	44.90
한국국제협력단	622.94	-	622.94	731.52	-	731.52	108.58
기획재정부	67.99	394.44	462.44	15.28	581.34	596.62	134.18
외교부	316.63	151.74	468.36	330.15	203.45	533.60	65.24
농림축산식품부	70.63	12.24	82.87	70.15	14.90	85.05	2.18
교육부	81.98	-	81.98	80.30	-	80.30	△1.69
산업통상자원부	51.39	1.36	52.74	55.24	1.25	56.48	3.74
보건복지부	35.73	8.13	43.86	35.87	10.42	46.29	2.42
농촌진흥청	19.52	0.26	19.78	24.47	0.25	24.72	4.95
기타	218.91	20.37	239.27	172.84	23.50	196.34	△42.93
합계	2,221.01	588.53	2,809.54	2,296.00	835.11	3,131.11	321.56

## OECD DAC, 우리나라 동료검토\* 결과보고서 발간

\* OECD DAC 회원국 간 ODA 정책·집행에 대한 주기적 평가(5~6년)로, 각국은 동료검토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

정승혜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책임심사역

### 1. 발간 배경

□ OECD DAC은 지난 5년간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포함한 동료검토 결과보고서를 발간('24.5월)

\* 한국의 '자체평가 보고서'와 DAC의 '한국 및 수원국 방문' 결과 등을 참고

- 이는 한국에 대한 3번째 동료검토(1차 '12년, 2차 '18년) 보고서로, 지난 2차('18년) 권고사항의 이행을 평가하고 새로운 권고사항을 제시

#### 〈 제3차 동료검토 추진경과 〉

- 국내 관계기관\* T/F 발족('23.3월) → 한국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DAC에 제출('23.9월) → DAC 실사단\*\* 방한 및 우즈벡 방문('23.10월) → 동료검토 최종회의\*\*\*('24.3월, 파리) → 결과보고서 발간('24.5.21)

\*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수출입은행(EDCF), KOICA

\*\* DAC 사무국 및 호주, EU 평가자로 구성

\*\*\* DAC 사무국, DAC 회원국 대표 등 참여하여 보고서 문구 최종 협의

## 2. 동료검토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 ('18년 권고사항 이행평가) '18년 동료검토시 도출되었던 12개 권고사항을 이행완료(2개)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10개)한 것으로 평가

- (이행완료)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부분이행) ODA 시스템 개선, 성과관리·평가 강화, ODA 규모\* 및 비구속성 확대 목표 달성, 정책일관성 제고 등

\* 2030년까지 ODA/GNI 0.3% 달성 목표('24년 예산안 기준 ODA/GNI 0.25%)

□ (한국의 강점)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점, 기후변화 대응 노력,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ODA 규모)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ODA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

\* ODA 예산규모(조원) : ('20) 3.5 → ('21) 3.7 → ('22) 3.9 → ('23) 4.5 → ('24) 6.3

- (기후변화) 그린 ODA 비중(35%)이 DAC 평균(29%)을 상회하였으며, EDCF의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내재화 노력을 모범사례로 소개

\* EDCF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의 기후위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를 도입('21.12월)

- (시민사회)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수립('19년)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

□ (도전과제) 현장이 아닌 국내 본부 위주의 의사결정구조, ODA 전문인력 부족 등을 언급

- (업무권한) 국내에서 사업실행의 제반 의사결정을 관장하므로 협력국의 수요 변화와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움



- (인력부족) 한국 ODA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
- (권고사항) 한국 ODA의 발전을 위해 10개의 권고사항\*(상세내역 참고자료 참조)을 제시
  - \* '18년에 이어 정책일관성 제고, 현장권한 확대, 협력국과의 정책대화 강화, 인력확충이 다시 권고되었으며, 민간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이 새롭게 포함됨
  - (정책일관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년)에 근거, 국내 각 부처의 정책이 개도국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
  - (파트너십 강화) MDB를 포함한 양·다자 개발주체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
  - (기후변화) 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등을 타 기관에 확산하고, 쉼 개발협력 이행 부처·기관에서 기후를 고려할 것
  - (평가결과 활용) 기관역량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ODA 재원 배분시 높은 역량을 갖춘 시행기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 (협력국 수요고려) 협력국의 원조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예산 배분 강조
  - (정책대화) 협력국 고위 당국자와 정례 협의를 좀 더 확대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시민사회) 국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현지주도 개발 촉진
  - (현장권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서 협력국 현지사무소의 권한 강화
  - (인력확충) 범정부적으로 역량이 있는 개발협력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근무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현지인력 고용도 확대
  - (민간지원) 민간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적 지지와 함께 MDB 협력 등을 통한 비구속성 지원 확대, 민간 참여수단 다각화 필요

### 3. 시사점

-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이러한 양적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
  - '30년까지 '19년(3.2조원) 대비 ODA 규모를 2배 확대하겠다는 기존 중합기본계획상의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DAC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그린 ODA 규모 확대는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줌
  - 이러한 양적 확대에 걸맞게 EDCF의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확산을 통한 질적 고도화도 기대됨
- 민간지원 확대 권고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부진했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 가능
  - EDCF도 민간전담팀 신설('24.1월), 관련 규정 개정('24.5월) 등을 통해 민간 지원수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이번 동료검토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선진 공여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 '18년 권고사항 12개 중 미이행된 분야가 없는 것은 그간 한국 개발협력 주체들이 질적인 성장을 거듭했음을 의미함

자료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24

## 참고 2024 한국 동료검토 권고사항

1. Korea should implement its 2022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strengthen Korea's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 a) fully operationalise the National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co-ordin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their effect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b) build on the National Council's mandate to review implementation plans of ministries and consider and address the transboundary effects of domestic policies on developing countries, starting with a few key areas
  - c) leverage the role of the CIDC to bring a development perspective to inter-ministerial policy deliberations.
2. Korea should strengthen strategic partnerships and dialogue with MDBs, other multilateral partners and bilateral providers beyond the current level of engagement, mainly focused on project support, in order to gain more influence and build trust in line with Korea's ambition to scale up ODA.
3. Building on its Green ODA Strategy, Korea should integrate climate considera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across all implementing ministries and agencies, including by accelerating efforts to roll out the EDCF Climate Change Impact Response Framework and the KOICA Climate Result Management Framework.
4. Korea should consider the cross-government capacity review alongside evidence and learning from evaluations to help prioritise increased ODA volumes to implementers with high performance management capacity, in line with the 3rd Mid-term Strategy objectives.
5. The government should allocate ODA increases in line with needs and absorptive capacity of partners by encouraging the full use of existing modalities, including programme-based loans and policy dialogue.
6.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Korea should engage in more upstream and regular policy dialogue with partner country authorities, partners and stakeholders on broader reform processes and the policy environment to help ensu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its programming, using existing co-ordination mechanisms where possible.
7. Korea should strengthen the capacity of Korea's civil society to deliver effectively and incentivise partnering with local civil society to broaden the reach of Korea's programming, strengthen local capacity and foster locally led development.
8. Building on lessons from the CIDC's pilot to create integrated programmes and the work of the grant and loan committees organised by the MoFA and MoEF to bridge and sequence programmes, Korea should delegate more authority to partner country offices to deepen dialogue at country level including by giving them the authority to scope, identify, co-create, manage, and adapt large-scale, integrated programmes.
9. Korea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qualified staff working in development across government to scale up high-quality programming.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find ways to incentivise longer periods between rotatio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posts to help build trust and stronger partnerships, increase the number of staff working in partner countries, and further empower and promote locally hired staff to support a strong country presence.
10. To further expand private sector operations and private finance mobilisation including from local investors in partner countries, Korea should:
  - a) provide high-level political leadership and signal support for implementing agencies to increase their risk appetite for private sector operations
  - b) continue to expand untied aid modalities including co-financing with MDBs and budget support to improve the business enabling environment in partner countries
  - c) further incentivise blended finance pilots including through programmes and facilities that integrate loans, gra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cross-agency knowledge sharing.



PART  
02

---

## 분야별 개발협력 논의동향

---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사업기간 편차와 그 원인 분석

교량분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EDCF



##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사업기간 편차와 그 원인 분석<sup>1)</sup>

### -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

박종규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본부장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목 차 -

##### I. 서론

##### II. 기존 논의 검토

##### III. 개발프로젝트의 사업기간 편차 정도와 요인 분석

1. 차관프로젝트의 절차와 단계 구분
2. 자료 설명
3. 사업기간 편차의 정도
4. 사업 지연 요인 분석

##### IV. 회귀분석을 통한 사업기간 편차 원인 분석

1. 분석 모형
2. 분석 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1) 본 원고는 2023년 12월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제29권 제4호에 게재되었다.

## I. 서론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가리킨다.<sup>2)</sup> 이런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개발원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활용 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 개발프로젝트는 시행 중은 물론이고 시행 전·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계획된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되는지 여부는 프로젝트의 전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계획된 기간보다 지연된다면 당초 사업목적을 적기에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 사업환경 변동 등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초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사업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원조 공여기관에도 계획된 기간과 비용 준수는 중요한 과제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에서도 기간과 비용 준수 여부는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된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설정한 6대 평가기준 중 효율성은 비용효율성과 적기성이 평가요소이다. 개발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평가기준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기간과 비용 준수 여부를 성공 평가의 기준으로 포함한다.

---

2)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대외원조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의 자금 및 기술지원을 받아 원조 수혜국, 즉 수원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간략히 개발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라고 명명한다. 개발프로젝트 중 공여기관의 차관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차관 프로젝트로 명명한다.

3) 이에 관한 연구는 Khan et al.(2000), Kwak(2002), Khang and Moe(2008), Ike et al.(2012), 박복영·안이슬(2017) 등이 있다.



따라서 개발프로젝트의 비용 및 기간 초과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ODA의 효율적 사용, 나아가 개도국의 개발 촉진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하지만 뒤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반적 프로젝트의 지연 원인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많지만,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편이다. 개발프로젝트의 구조 및 이해관계자가 일반 프로젝트에 비해 복잡하고, 사업의 유형도 다양한 것이 연구 부족의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실증 연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단일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이 지원한 단일한 유형의 사업 즉 건설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지연 정도와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4)</sup> 연구는 동 MDB가 대정부 차관(loan)을 지원하여 완료한 건설 분야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컨설턴트, 시공, 기자재 구매 등으로 구성되며, 컨설턴트 고용, 상세설계, 구매계약, 구매 및 시공 등 절차를 거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지질상태, 날씨 영향, 토지보상, 환경문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문제 등 실행과정에서 유사한 위험이 존재한다. 분석대상 프로젝트 사이에 사업구성, 절차, 위험 등에 있어 동질성이 강하면, 회귀분석에서 변수 누락의 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은 MDB의 차관승인 당시 수립된 프로젝트의 단계별 계획기간과 실제 소요기간을 비교하고, 기간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 요인을 정리, 분석한다. 그리고 기간 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프로젝트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수원국 특성과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4) 해당 다자개발은행은 프로젝트 단위에 대한 학문적 분석의 경우 기관명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여기서는 다자개발은행(MDB)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역시 기간 편차가 두 변수 집합들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저자들의 기존 문헌 검토에 따르면 동질적 개발프로젝트의 기간 편차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프로젝트 단계별로 지연 정도와 요인을 정량 분석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II절에서는 프로젝트의 기간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할 것이다. III절에서는 차관프로젝트의 절차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명하고, 사업기간의 계획대비 편차 정도, 편차 발생 요인 등에 대해 분석한다. IV절에서는 사업기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원국 관련 변수와 개별 프로젝트 관련 변수들을 정의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기간 편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기간 관리를 위해 수원국 정부, 공여기관, 수행기관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 II. 기존 논의 검토

프로젝트관리 분야에서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기간 지연은 흔하며 가장 고질적인 분쟁 중 하나가 기간 지연이다(Kraiem and Diekmann, 1987). 기간 지연은 많은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복잡적이기도 하다. Majid and McCaffer(1998)은 건설조직 관련 8개 연구를 분석하여 21개 지연요인을 찾았다.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연요인은 늦은 납품, 손상된 재화, 계획 부실이다. 계획이 부실하면

주문변경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물품 구매를 위한 기간 지연과 비용추가로 이어진다. 프로젝트 담당자에 따라 기간 지연 주요 원인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Kumarasmawy and Chan(1998)에 따르면 계약자는 설계정보제공 및 설계승인의 지연, 부실한 현장관리를 지연요인으로 제시하는 반면, 컨설턴트는 사업현장의 예기치 못한 상황, 계약자의 경험 부족, 부실한 현장관리와 감독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다.

Adam et al.(2015)의 문헌분석을 통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공공건설 프로젝트에서 기간 지연과 비용 초과는 오랫동안 흔했으며, 소통, 관리, 인력, 조직, 기획, 현장 상황, 날씨, 사업의 복잡성, 부실한 절차, 물가상승 등 13개 주요 요인이 있다. 다만 요인의 발생빈도는 관찰의 용이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빈도와 영향이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Habibi et al.(2018)은 건설 프로젝트를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등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간과 비용의 성과와 관련하여 200개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엔지니어링과 건설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구매 단계에서는 자원 부족과 가격 변동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편 개별 국가의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기간과 비용 연구도 다수 있다. Le-Hoai et al.(2008)은 2000년 이후 베트남에서 시행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기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요인으로서는 부실한 현장관리 및 감독, 부실한 사업관리 지원, 발주처의 재정적 어려움, 계약자의 재무적 어려움, 설계변경 등을 제시했다. Al-Hazim et al.(2017)은 요르단의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그리고 Belay et al.(2021)은 에티오피아에서의 빌딩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기간 지연과 비용 초과를 분석했다. Edison and Singla(2020)는 인도의 인프라 사업 기간 지연 원인을 분석했으며, Gbahabo and Ajuwon(2017)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했다.<sup>5)</sup>

일반 프로젝트가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이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 Ahsan and Gunawan(2010)은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태국 등 4개국에 지원한 100개 프로젝트의 기간과 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86%의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계획기간 대비 평균 21개월 (계획 대비 39%) 더 소요되었다. 주요 지연 요인은 계약과 구매, 시공, 토지보상, 컨설팅료 고용, 자연재해, 정부절차 등이었다. Kaimasu et al.(2017)는 ADB와 일본국제협력 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인도네시아에 지원한 사업을 대상으로 기간과 비용을 비교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는 기간 지연은 비용 초과를 초래하지만, 개발프로젝트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이를 “기간 및 비용 초과역설”이라고 불렀다. JICA 지원 사업 중 80% 이상이 지연되었고, 주요 지연 요인은 구매, 토지 보상 등 수원국 정부 관련 사항이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료주의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복영·안이슬(2019)은 세계은행(World Bank) 지원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수원국의 재정 상태가 나쁠수록, 참여 원조 기관이 많을수록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사업 기간이 수원국 거버넌스의 영향을 받음을 확인했다.

---

5) 이 외에도 일반 프로젝트의 사업지연 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지만 최근 연구로는 Durdyev and Hosseini(2020), Asiedu and Adaku(2020), Yap et al.(2021) 등이 있다.

결국 기존 연구에 따르면 건설 프로젝트에서 기간 지연은 매우 빈번히 발행하며, 주요 원인으로 계획 부실, 설계변경, 구매 지연, 계약자 경험 부족, 사업관리자의 역량 부족, 수원국의 관료주의 등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우선 분석 대상을 국제개발 차관 프로젝트에 한정하면서도 동질성이 강한 건설 프로젝트에 한정한다는 점이다. 개발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있는데, 분야별로 프로젝트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누어 지연 정도와 요인을 정량 분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이다.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간 지연을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성적 분석이나 단순 통계 비교 정도에 머물러 있다. 수원국 및 프로젝트 특성 변수를 설정하고, 기간 편차율과의 연관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기간 지연의 직접적 요인은 사업완공보고서를 이용해 확인하고, 그런 요인을 유발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통계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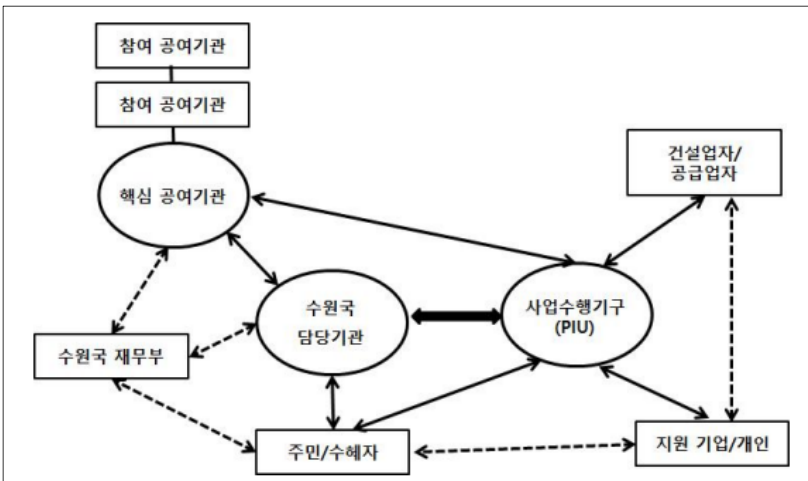
### Ⅲ. 개발프로젝트의 사업기간 편차 정도와 요인 분석

#### 1. 차관프로젝트의 절차와 단계 구분

차관프로젝트는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원조 공여기관에서 차관을 받아 수원국 정부가 실행하는 사업이다. 수원국의 공공사업이지만 수원국의 자체 예산과 함께 차관이 주요

재원이 된다. 공여기관은 재원을 지원하면서 ODA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여기관이 정한 승인, 구매, 자금 집행에 관한 절차, 환경사회가이드라인, 평가기준 등을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차관프로젝트의 주요 이해당사자에는 수원국 정부, 사업의 수혜자, 컨설턴트 및 시공사와 더불어 공여기관도 포함된다. 수원국 정부 내에서도 수원 총괄부처, 사업 담당 부처, 사업수행기구(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 프로젝트 소재 지방정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된다. 각국 정부가 차관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에 따른 절차와 함께 공여기관의 절차도 따라야 하므로, 공여기관과 수원국 절차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림 1>은 개발프로젝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

### 〈그림 1〉 국제 개발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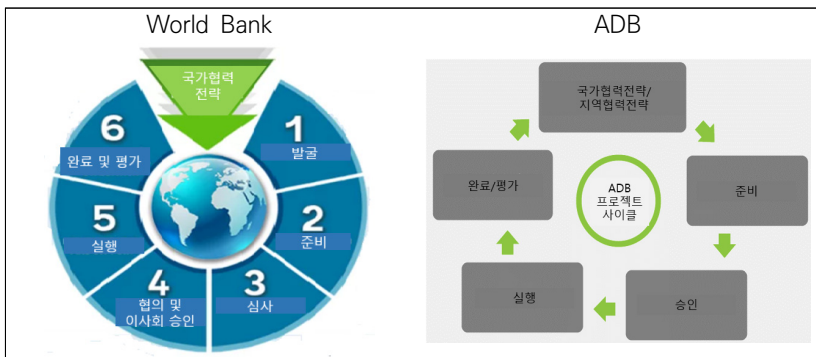


주: 실선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관계를, 점선은 일시적인 협조관계를 의미함.

출처: 박복영 · 안이슬(2019)

본 연구는 MDB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인 World Bank와 ADB의 차관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project cycle)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기관의 프로젝트사이클은 유사하다. 첫 단계로 수원국과 협의하여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한다. 국가협력전략에는 수원국 개발계획, 빈곤감축목표 및 준비사항 등이 포함된다. 그 후 사업발굴 및 준비 단계로 후보사업 발굴과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다. 다음은 MDB의 심사와 승인 및 차관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된다. 차관계약의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 발효되면, 수원국의 사업수행기구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프로젝트 실행과정은 상세설계 및 입찰서류 준비를 위한 컨설턴트 고용, 상세설계, 계약자 선정, 구매 및 시공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MDB는 수원국과 협력하여 사업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한다. 프로젝트사이클의 마지막은 평가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투입 요소(input),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및 영향(impact) 등 실행과정을 담은 사업완공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를 작성한다.

〈그림 2〉 World Bank와 ADB의 프로젝트사이클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 논문에서는 위 절차 중 MDB의 승인부터 차관자금 집행 기간이 종료되기까지를 전체 사업 기간으로 간주한다. 국가협력전략 수립 및 준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실행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원국 정부의 공식 신청에 따라 MDB가 차관을 지원하기로 승인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고, 차관계약 체결 및 발효 이후 컨설턴트 고용 및 계약자 선정 절차를 거쳐 물리적 건설 및 자금 집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차관 종료일, loan closing date)<sup>6)</sup>을 종료 시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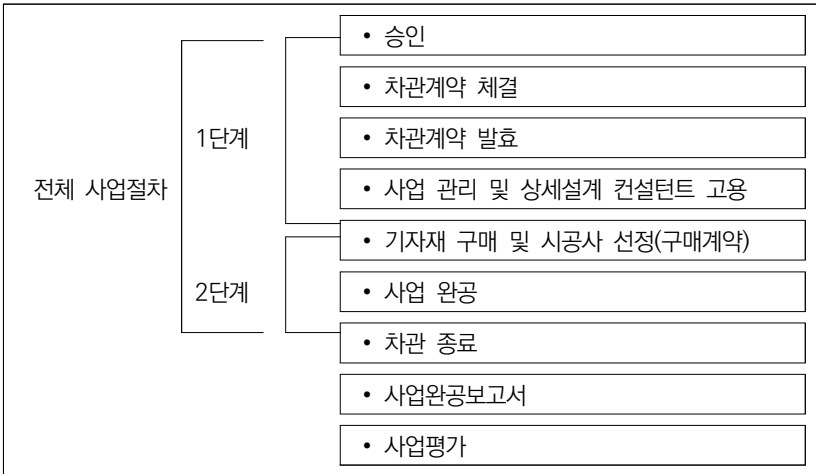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전체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단계별 지연 정도와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 절차에 대한 이해와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 <그림 3>은 차관 승인부터 종료까지 세부 절차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단계별 분석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실행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승인일부터 구매계약일<sup>7)</sup>까지를 1단계로, 구매계약 이후 본격 시공을 거쳐 차관 종료일까지를 2단계로 구분한다.

6) 차관 종료일은 차주가 차관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ADB는 프로젝트의 물리적 완공일로부터 6개월을 더한 시점으로 정하고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7) 구매계약일은 각 프로젝트 사업완공보고서의 사업일정(Project Schedule) 항목에서 시공계약(Civil Works Contract)의 선정일(Date of Award)을 기준으로 했다.



〈그림 3〉 차관 프로젝트의 절차와 단계 구분



자료: 저자 작성

## 2. 자료 설명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대표적인 MDB 중 한 기관이 지원한 19개국 226개 건설분야 차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는 동 MDB의 독립평가국(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이 2021년 발표한 Success Rates Database(SRD)와 각 프로젝트별 Project Completion Report(PCR)에서 추출했다. 동 독립평가국은 매년 평가활동보고서인 평가연보(Annual Evaluation Review)를 발표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젝트의 평가등급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SRD)도 공개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1년 데이터베이스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가되어 평가연보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차관을 추출하고, 그 가운데 사업내용이 컨설턴트, 자재·설비의 구매, 시공 등으로 구성된 건설 프로젝트만을 정리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프로젝트명, 계획사업비, 실제사업비, 승인 일자, 평가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PCR은 차관프로젝트의 설계와 실시과정에서의 교훈을 얻고, 투명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PCR은 프로젝트 종료 후 실행부서(project team)에서 작성하고 독립평가국에서 인증(validate)하며, 프로젝트 개요, 4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차주와 사업수행기구에 대한 평가, 단계별 계획 일정과 실제 일정, 계획 사업비와 실제사업비, 비용 및 기간 편차 발생 요인, 교훈 및 권고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개발프로젝트 관련 연구에서 World Bank 또는 ADB의 이러한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한 경우는 많으며, 여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MDB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수집하기 용이하다. 다음은 일정기간 실행되고 특정 참여자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젝트의 속성상 1차 자료(primary sources)로부터 필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Ahsan and Gunawan, 2010).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응답자의 인식 또는 기억에 의존하는 서베이에 의한 데이터 보다 객관적이다(Calantone and Vickery, 2009). Sun and Meng(2009)은 건설프로젝트 관련 101개 논문을 검토한 결과 완공된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이 49건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완공보고서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독립 평가기구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보고서 별로 품질과 구체성이 균질하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정리, 분석 과정에서도 국가별 PCR마다 서술방식과 구체성이 달라 실제 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둘째, 정성적 평가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 지연 요인이 누락되거나, 각 요인별 중요도가 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공여기관 즉 MDB 자신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지연 요인이 과소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가 갖는 편의를 최소화하고자 단일 MDB의 단일 유형의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MDB의 특성으로 인한 지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사업기간 편차의 정도

사업기간 분석은 차관프로젝트의 승인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계획 대비 실제 기간, 즉 기간편차율(Schedule Deviation Ratio, SDR)을 비교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간편차율이 100%를 초과하면 실제 기간이 계획을 초과해 지연 되었음을, 100% 미만이면 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

$$\text{기간편차율(SDR)} = \frac{\text{실제사업기간}}{\text{계획사업기간}}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표 1〉은 수원국별로 사업의 평균 비용 및 기간, 그리고 기간 편차율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 대상 19개국 226건 중 지연된 사업은 213건으로 전체의 94%이다. 전체 사업기간은 19개 모든 국가에서 계획보다 지연이 발생했다. 승인일부터 종료일까지 실제 소요기간은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235개월까지 다양하다. 계획단계에서는 평균 소요기간이 66.7개월인데 비해, 실제 소요기간은 평균 91.2개월로 계획보다 약 24개월이 지연되었다. 각 사업의 기간편차율의 평균은 138%로서 평균적으로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38% 더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지연사업 수 비중 및 지연 정도는 ADB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Ahsan and Gunawan(2010)과 유사한 수준이다. 분석대상 사업 수가 10개 이상인 국가 가운데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지연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수원국별 사업 기간 및 지연 정도

(단위 : 백만불, 개월)

국가명	사업 수 [A]	실제 사업비 평균	지연 사업 수		국별 계획기간 평균	국별 실제기간			실제기간/ 계획기간 편차율 (SDR)
			[B]	B/A		평균	최소	최대	
아제르바이잔	3	123.5	3	100.0%	59.7	70.7	55	87	121%
방글라데시	22	118.1	22	100.0%	64.4	94.6	41	139	148%
부탄	6	61.3	6	100.0%	67.0	87.2	71	120	129%
캄보디아	14	47.6	14	100.0%	63.8	85.5	60	106	138%
중국	59	942.8	55	93.2%	64.9	82.4	55	129	128%
인도	16	331.3	15	93.8%	66.1	104.5	53	155	157%
인도네시아	12	166.6	9	75.0%	59.2	85.3	36	157	146%
카자흐스탄	3	131.2	3	100.0%	46.7	58.0	49	76	123%
키르기즈	6	51.8	6	100.0%	56.2	82.8	68	107	150%
라오스	11	68.4	10	90.9%	64.4	83.8	48	112	132%
몽골	9	41.8	8	88.9%	67.6	89.2	66	133	132%
네팔	12	73.3	12	100.0%	80.4	104.7	71	165	133%
파키스탄	4	625.1	4	100.0%	88.8	141.3	84	235	155%
필리핀	6	149.7	6	100.0%	72.7	117.0	83	142	165%
스리랑카	10	243.1	10	100.0%	76.2	102.8	61	164	136%
타지키스탄	5	40.6	4	80.0%	68.6	83.2	61	101	123%
태국	2	146.8	2	100.0%	66.0	97.5	85	110	148%
우즈베키스탄	7	106.6	7	100.0%	62.9	92.6	62	127	150%
베트남	19	162.9	17	89.5%	71.7	96.2	67	119	136%
19개국	226		213	94.2%			36	235	
평균		353.1			66.7	91.2			138%
최소값		8.0							
최대값		7,052.6							
표준편차		729.6			14.2	24.7			29.4%

자료: 저자 작성

〈표 2〉는 사업 단계별로 지연 정도를 구분한 것이다. 사업초기인 1단계 기간은 평균 11.9개월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23.1개월로 계획보다 거의 2배가량 소요되었다. 2단계 기간은 평균 55.5개월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68.7개월, 즉 125%가 소요되었다. 전체 사업기간 중 각 단계별 비율을 보면, 승인 시에는 1단계 기간 비중은 18%, 2단계 기간 비중이 82%였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실제 기간의 비중을 보면, 1단계가 25%, 2단계가 75%를 차지했다. 분석대상 사업 중 중국 사업이 59건(26%)으로 다수이고 평균 사업 규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커서 중국과 다른 국가 사업을 분리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이런 현상은 두 그룹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사업기간 중 1단계 기간 비중이 중국은 11%에서 18%로,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25%에서 32%로 커졌다. 결국 사업 지연 비율이 2단계보다 1단계에서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승인 이후 차관계약 체결과 발효 과정, 그리고 컨설턴트 고용, 상세설계 및 구매계약 단계에서 지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표 2〉 사업 단계별 지연 정도

(단위: 개월)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기간			전체 기간 중 1단계 비중	
	계획	실제	편차율	계획	실제	편차율	계획	실제	편차율	계획	실제
전체	11.9	23.1	265%	55.5	68.7	125%	66.7	91.2	138%	18%	25%
중국 제외	13.8	27.1	270%	54.2	67.7	126%	67.3	94.3	141%	25%	32%
중국	6.5	11.7	250%	59.2	71.3	123%	64.9	82.4	128%	11%	18%

자료: 저자 작성

〈표 3〉은 프로젝트의 실행 시기별로 지연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사건이 지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젝트의 승인 시기별로 지연 정도를 구분한 것이다. 최근 프로젝트 그룹일수록 사업규모는 커지지만 사업기간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연 사업 수의 비율과 SDR은 '05년 이전 승인된 3개 그룹은 유사하지만, '06년 이후 승인 프로젝트 그룹은 두 비율이 모두 낮아졌다.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및 '07~'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는 개도국 정부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시기 사업은 지연 정도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두 위기가 포함된 기간의 승인 프로젝트 그룹에서 다른 그룹과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 그룹은 오히려 지연 정도가 작아졌다. 그 사유가 수원국들과 ADB의 프로젝트 실행 경험과 역량이 커져서 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승인 시기별 사업 기간 및 지연 정도

(단위 : 백만불, 개월)

승인시기	사업 수 [A]	실제사업 비 평균	지연 사업 수		계획기간 평균	실제기간 평균	실제기간/ 계획기간 편차율 (SDR)
			[B]	B/A			
'95년 이전	37	136	35	95%	72	103	144%
'96~'00년	56	315	54	96%	65	91	140%
'01~'05년	71	367	69	97%	68	93	141%
'06년 이후	62	501	55	89%	64	82	129%
계	226		213				

\* 분석대상 사업 중 '11년 이후 승인 사업은 7건에 불과하여 '06년 이후 승인 사업으로 통합  
자료: 저자 작성

좀 더 면밀히 비교하기 위해 사업실시기간 중에 금융위기가 발생한 프로젝트들의 평균 SDR을 계산해 보았다. 사업실시기간 중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sup>8)</sup>를 거친 62건의 평균 SDR은 141%였고, '07~'08년 세계 금융위기<sup>9)</sup>가 발생한 95건의 평균 SDR은 134%였다. 금융위기를 거치지 않은 69건의 평균 SDR은 140%이고, 전체 226건의 평균 SDR은 138%이다. 금융위기를 거친 프로젝트와 아닌 프로젝트간 평균 SDR의 크기에 일관성이 없었다. 뒤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 다만,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 중 분석대상 프로젝트가 12건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 중 금융위기가 발생한 6건의 SDR 평균은 164%인데 비해, 그렇지 않은 6건의 SDR 평균은 127%로 차이가 컸다. 또한, 여러 건의 PCR에서 지연 사유로 금융위기를 들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지연 정도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사업 지연 요인 분석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각 프로젝트의 PCR에 기술된 주요 지연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표 4>는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이 사업 지연 요인들을 자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면, 구매계약 지연이 기간 초과 사업 중 가장 많은 48.4%에서 주요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어 계약자의 성과부진(39.4%), 컨설턴트 고용 지연(38.5%), 사업범위 변경(37.6%), 사업수행기구 역량부족(34.3%), 수원국 정부 역량부족 및 정치 불안정

8)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은 Staff, I. M. F. (2000)을 참고하여 '97.7월~'98.12월을 적용했다.

9) 세계 금융위기 기간은 Ramskogler, P. (2015)을 참고하여 '07.8월~'08.12월을 적용했다.

(30.0%), 토지보상·주민이주·환경보호(29.1%), 차관계약 및 발효지연(26.3%), 자연재해(24.9%)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장기 지연사업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sup>10)</sup>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을 초래하여 더욱 장기화하기도 한다. 사업당 평균 4가지의 요인이 작용했으며, 최대 11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업도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요인 중 첫째와 셋째는 구매계약 지연과 컨설턴트 고용 지연이다. 226개 사업 중 각각 103건(46%), 82건(38%)에서 계약자와 컨설턴트 선정과정에서 주요한 지연이 발생했다. 입찰서류 준비, 평가 및 결과 승인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되거나, 소송, 재입찰 등으로 지연되기도 했다. 차관사업은 대부분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수원국 정부와 사업수행기구의 입찰관리 경험 및 역량과도 관련성이 높다.

다음은 정부의 행정역량과 효율성 관련 요인들이 많다. 사업수행기구의 역량 부족(73건), 수원국 정부의 역량부족 및 정치불안정(64건), 차관계약 및 발효 지연(56건), 열악한 인프라 및 유관기관 협조 지연(27건), 수원국 정부의 대응 예산 부족(22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수행기구의 역량 부족은 직원 채용 지연 또는 잦은 변경, 상세설계 승인 장기간 소요, 부실한 행정 등을 유발하며, 사업수행기구로서 의사결정 지연 및 비효율적 사업관리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 정부의 거버넌스도 지연의 요인이 된 것으로 확인

10) 인도네시아의 한 프로젝트는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의 245%가 소요되었다. 2010년 3월 MDB 차관이 승인되어 2012년 11월에 종료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차관계약이 2011년 4월에야 발효되었고 입찰서류 검토 지연, 적격 입찰 참여자 부족에 따른 재입찰 등으로 구매계약이 늦어졌다. 구매계약 이후에는 계약자의 경험 부족, 과업범위 변경,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지연, 시공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은 2016년 4월에 종료되었다.



되었다. 즉 정책변경, 정치 불안정, 정권 교체, 법적 이슈, 시위 등이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또는 변경을 야기하여 사업 진행의 지연을 초래했다. 차관승인 이후 MDB와 수원국 정부 간 차관계약이 체결되고 정부의 법률의견서 등 계약 발효를 위한 서류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관련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실시과정에서 전기연결, 지장물 제거, 인허가 문제 등 유관기관의 적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련 인프라가 열악하여 사업실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업의 일부, 토지보상, 제세공과금 등은 수원국 정부의 예산으로 조달하게 되는데, 대응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sup>11)</sup>

〈표 4〉 사업 지연요인 및 요인별 빈도

(단위 : 건, %)

지연 요인	빈도	지연사업중 비율	전체사업 중 비율
1. 구매계약 지연	103	48.4	45.6
2. 계약자의 성과 부진	84	39.4	37.2
3. 컨설턴트 고용 지연	82	38.5	36.3
4. 사업범위 변경	80	37.6	35.4
5. 사업수행기구 역량 부족	73	34.3	32.3
6. 수원국 정부 역량부족/정치 불안정	64	30.0	28.3
7. 토지보상, 주민이주, 환경보호조치 등	62	29.1	27.4
8. 차관계약 및 발효 지연	56	26.3	24.8
9. 홍수, 가뭄, 질병, 지진 등 자연재해	53	24.9	23.5
10. 설계변경	35	16.4	15.5
11. 기자재 및 노동인력 조달 문제	32	15.0	14.2

11)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주민이주 및 환경보호조치 등도 수원국 정부의 역할인데 보상비의 급격한 상승, 주민 반대, 환경단체의 반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업이 6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연 요인	빈도	자연사업중 비율	전체사업 중 비율
12. 유관기관 협조지연 / 열악한 관련 인프라	27	12.7	11.9
13. 컨설턴트 성과 부진	23	10.8	10.2
14. 수원국 정부 대응예산 부족 또는 배정 지연	22	10.3	9.7
15. 타당성조사 부실, 비현실적 계획 등 사업준비 부족	20	9.4	8.8
16. 지질상태, 지하수, 연약지반 등 예상치 못한 환경	16	7.5	7.1
17. 자금집행 지연	8	3.8	3.5
18. 협조용자 지연	8	3.8	3.5
합 계	848		

주: 한 프로젝트에 복수의 지연요인이 존재하여 빈도 합이 프로젝트의 총수를 초과함.

자료: 저자 작성

사업실시 중 사업범위 변경(82건), 설계변경(35건) 등도 주요 지연 요인이 되었다. 사업실시과정에서 남은 미사용 예산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획 또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사업 범위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변경을 위한 절차와 추가 과업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타당성조사 부실, 비현실적인 사업일정 등 사업준비 부족(20건)도 사업 범위와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사유가 되었다.

사업참여 민간기업 및 수원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요인도 있었다. 계약자의 성과 부진(84건)과 컨설턴트의 성과 부진(23건) 등 계약 체결 이후 참여기업의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차관프로젝트는 통상 국제경쟁입찰로 컨설턴트와 계약자를 선정하는데, 외국기업의 현지 경험 부족, 또는 현지기업의 기술, 재무, 경험 부족 등이 사유가 되었다. 구매계약 체결 후 수원국 내 기자재와 인력 수급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 포기 및 공사 지연 사례(32건)도 있었다.

불가피한 사유도 있다. 예년보다 긴 우기, 홍수, 가뭄, 지진, 팬데믹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53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암반, 연약지반, 지하수 등이 발견되어(16건) 추가 과업 또는 설계변경이 필요해 지연되기도 했다. 기타 요인으로서는 자금집행 지연(8건), 협조용자 지연(8건) 등이 있다.<sup>12)</sup>

지연 사유를 앞에서 설명한 두 단계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표 3>에서 차관계약 및 발효 지연(56건), 컨설턴트 고용 지연(82건), 컨설턴트 성과 부진(23건) 및 구매계약 지연(103건)은 1단계에 발생하는 요인이다. 사업수행기구 역량부족(73건) 중 실시기관 스태프 구성 지연, 구매절차와 국제입찰 경험 부족, 입찰서류 작성 및 승인 지연, 설계 승인 지연 등에 해당하는 33건도 1단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였다. 결론적으로 전체 848건의 요인 중 35%인 297건이 1단계인 승인-계약 단계의 지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결과는 전체 사업기간 중 1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지연 정도가 크다는 앞의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12) 차관자금의 집행은 '계약자의 사업실행 및 신청 → 수원국 정부 검토 후 MDB에 신청 → MDB 집행' 절차를 거치는데 수원국 정부의 내부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공사완료 후 유보금 정산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른 재원 공여기관의 절차 지연 및 취소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IV. 회귀분석을 통한 사업기간 편차 원인 분석

1. 분석 모형

앞 절에서는 사업기간의 계획 대비 편차 정도와 편차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했다. 이 절에서는 수원국 및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지표 중에서 앞서 정리한 요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찾은 후 이 지표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기간 편차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 방법론은 개발프로젝트 성공요인에 관한 기존의 실증분석 방법에서 차용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프로젝트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수원국 요인과 개별 프로젝트 요인으로 구분한다(Denizer et al. 2013; Bulman et al. 2017 등). 수원국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신용등급과 거버넌스 지표 등이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특성으로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사업기간, 사업준비 기간, 모니터링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변수들이 개발프로젝트의 사업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앞의 지연요인과 연관된 수원국 특성 지표를 <표 5>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5> 사업 지연 요인별 수원국 정부 관련 지표

지연 요인	요인별 빈도	관련 지표
1. 구매계약 지연	103	정부 거버넌스, 경제발전수준
2. 계약자의 성과 부진	84	경제발전수준
3. 컨설턴트 고용 지연	82	정부 거버넌스, 경제발전수준
4. 사업범위 변경	80	정부 거버넌스, 경제성장

지연 요인	요인별 빈도	관련 지표
5. 사업수행기구 역량 부족	73	정부 거버넌스
6. 수원국 정부 역량부족 /정치 불안정 등	64	정부 거버넌스
7. 토지보상, 주민이주, 환경보호조치 등	62	정부 거버넌스, 재정상태, 경제성장
8. 차관계약 및 발효 지연	56	정부 거버넌스
9. 자연재해 등	53	불가항력
10. 설계변경	35	정부 거버넌스, 경제성장
11. 기자재 및 노동인력 조달 문제	32	경제발전수준
12. 유관기관 협조지연 / 열악한 관련 인프라	27	정부 거버넌스, 경제발전수준
13. 컨설턴트 성과 부진	23	경제발전수준
14. 수원국 정부 대응예산 부족	22	정부 재정상태
15. F/S 부실 등 사업준비 부족	20	정부 거버넌스, 경제발전수준
16. 지질 / 지하수 / 연약지반 등	16	불가항력
17. 자금집행 지연	8	정부 거버넌스
18. 협조용자 지연	8	-

자료: 저자 작성

지연 요인 중 수원국 정부와 사업수행기구의 역량부족, 차관계약 및 발효 지연, 구매절차 지연, 사업범위 또는 설계변경, 토지보상 지연, 유관기관 협조 미비 등은 수원국 정부의 행정절차 또는 의사결정의 지연, 사업준비 부족 등과 관련되므로 수원국 정부의 거버넌스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 지표가 좋을수록 지연 정도는 줄어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매·컨설턴트 입찰, 계약자·컨설턴트의 역량, 기자재 및 노동력 조달 문제 등은 수원국의 민간 경제환경과 관련되므로 경제발전 수준, 즉 국민소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높으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해 지연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업범위 또는 설계변경, 토지보상 지연 등은 경제성장률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인프라 수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거나, 계획 수립 때 보다 우수한 설계기준을 적용하게 되거나, 대상지역 확대 또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상예산이 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따라서 지연 정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의 대응 예산 부족, 토지보상 지연 등은 정부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재정상태가 좋으면 지연 정도는 줄어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프로젝트 특성 변수로는 계획사업기간, 계획사업비 및 재원조달기관 수를 포함했다. 계획사업기간이 길고 계획사업비가 크면 프로젝트가 복잡하며 리스크도 크므로 사업 기간의 편차도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원조달기관 수는 기관간의 조정비용으로 인해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면 사업의 기간 편차율은 <식 2>과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한다.

$$\text{SDR}_{ij} = f(\text{gdpgrowth}_i, \text{gdppci}_i, \text{govni}_i, \text{fiscali}_i, \text{plan\_duration}_{ij}, \text{Incost}_{ij}, \text{no\_of\_financier}_{ij})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text{SDR}_{ij}$ 은  $i$ 국가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j$ 의 계획 대비 실제 소요기간 비율이다.  $\text{gdpgrowth}_i$ 와  $\text{gdppci}_i$ 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수원국  $i$ 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text{govni}_i$ 는 수원국  $i$ 의 거버넌스 수준,  $\text{fiscali}_i$ 는 수원국  $i$ 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text{plan\_duration}_{ij}$ 은 프로젝트  $j$ 의 계획사업기간,  $\text{Incost}_{ij}$ 은 프로젝트  $j$ 의 계획사업비의

로그값, no\_of\_financierj는 프로젝트 j의 재원공여기관 수를 의미한다. 거버넌스 수준은 세계거버넌스지표(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sup>13)</sup>, 재정상태는 GDP 대비 정부의 순대출/차입 비율을 사용했다.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표 6>과 같으며, 각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표 7>과 같다.

<표 6> 변수 및 변수 설명

구 분	변수명	변수 설명	출처
수원국 특성	경제성장률 (gdpgrowth)	실질 GDP성장률, 사업기간 평균(%)	World Bank
	1인당 GDP (gdppc)	로그 값, 사업기간 평균	World Bank
	거버넌스의 질 (govn)	WGI 거버넌스 점수(-2.5~+2.5), 사업기간 평균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재정상태 (fiscal)	GDP 대비 정부의 순대출(순차입) 비율 (%, 숫자가 클수록 재정 양호), 사업기간 평균	World Bank
프로 젝트 특성	계획 사업기간 (plan_duration)	승인일~차관종료일(년)	
	계획사업비 (Incost)	승인시 계획사업비의 로그 값	ADB 프로젝트 DB
	재원조달기관 수 (no_of_financier)	수원국 정부, 원조 공여기관, 상업은행 등	

자료: 저자 작성

13) WGI는 World Bank가 정부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참여 및 책임성, 정치안정,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 법에 의한 지배, 부패 통제 등 6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지연 사유로 정치불안정, 정권교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안정을 대표 변수로 사용했다.

〈표 7〉 변수 기초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간 편차율(%)	138.2%	29.6%	82.5%	248.0%
계획사업기간(년)	5.5	1.2	2.7	12.8
실제사업기간(년)	7.6	2.1	2.9	19.5
계획사업비(백만달러)	303	491	8	3,753
계획사업비(LN 백만달러)	4.94	1.24	2.10	8.23
재원조달기관 수	2.8	1.1	2.0	11.0
경제성장률(%)	7.1	2.4	1.9	18.8
1인당 GDP(달러)	1,851	1,973	187	12,246
1인당 GDP(LN 달러)	7.1	0.9	5.2	9.4
거버넌스(WGI)	- 0.62	0.65	- 1.93	0.97
재정상태(%)	- 2.37	2.64	- 9.37	7.98

자료: 저자 작성

## 2. 분석 결과

〈표 8〉은 설명변수로 수원국 특성만 포함한 분석 결과이다. 수원국 경제성장률, 1인당 GDP, 거버넌스, 재정상태 변수의 개별 효과를 보면,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즉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가 높고, 거버넌스와 재정상태가 양호한 국가에서 실시될수록 사업기간 지연 정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하나의 모형에 넣으면 1인당 GDP는 유의성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과 거버넌스, 재정상태를 하나의 모형에 넣어 분석하면 재정 상태의 유의성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과 거버넌스의 신뢰수준도 낮아진다.



다음은 통제변수를 추가한 후 수원국 특성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중국 더미를 추가하였다. 중국은 다른 18개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프로젝트의 평균 규모가 월등히 크고, 기간 편차율은 128%로 나머지 국가의 141%보다 낮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이런 중국의 고유한 특성이 미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 더미를 추가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사업범위 추가 여부 더미를 통제했다. 사업범위가 추가되면 기간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설 프로젝트 내부에도 세부 섹터가 있는데 섹터 더미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통제하였다.<sup>14)</sup>

〈표 8〉 기간 편차율 원인 분석 결과 (1) (수원국 특성 변수 모형)

	(1)	(2)	(3)	(4)	(5)	(6)
gdpgrowth	-2.389*** (-2.919)				-0.718 (-0.651)	-0.813 (-0.744)
gdppc		-4.825** (-2.353)				
govn			-8.074*** (-2.699)		-7.951*** (-2.607)	-8.071*** (-2.655)
fiscal				-1.562** (-2.116)	-0.475 (-0.639)	
중국 더미					-9.268 (-1.581)	-9.744* (-1.678)
사업범위 추가					12.198*** (3.100)	12.538*** (3.220)
섹터 더미	X	X	X	X	O	O
관측수	226	226	226	226	226	226
adj. R <sup>2</sup>	0.032	0.020	0.027	0.015	0.129	0.132

주: ( )안의 숫자는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14) 해당 MDB의 섹터분류 기준(2014년)에 따라 11가지로 분류했다. 섹터별 사업 건수를 보면 교통 104건, 물 및 기타 도시인프라 43건, 농업, 자원 및 농촌개발 32건, 에너지 30건, 교육 9건, 보건 4건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물, 농업, 에너지, 기타의 5개 섹터로 나누고, 교통 섹터를 기준 섹터로 하여 각 섹터에 더미를 부여하였다.

이상의 통제변수를 추가하고 수원국 특성 변수들을 조합한 결과, 거버넌스가 일관되게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은 대부분 경우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통제변수의 효과도 있지만 수원국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가 양호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사업 지연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 프로젝트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간 편차율이 약 9% 포인트 낮고, 사업 범위가 추가되면 편차율이 약 1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프로젝트 특성 변수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계획사업기간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를 보여 기간이 길수록 편차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사업비는 섹터의 특징을 통제했을 때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였다.<sup>15)</sup> 즉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기간 편차율이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9〉 기간 편차율 원인 분석 결과 (2) (프로젝트 특성 변수 모형)

	(1)	(2)	(3)	(4)	(5)
plan_duration	-4.566*** (-2.788)			-5.782*** (-3.300)	-5.863*** (-3.308)
lncost		1.084 (0.693)		7.342*** (3.627)	7.374*** (3.631)
no_of_financier			0.602 (0.341)		0.563 (0.335)
중국 더미				-24.835*** (-4.744)	-25.060*** (-4.739)

15) 사업비 규모와 사업 기간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분석대상 프로젝트에서 두 변수 간 실제 상관계수는 -0.06으로 매우 낮아 두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1)	(2)	(3)	(4)	(5)
사업범위 추가				12.565*** (3.324)	12.385*** (3.237)
섹터 더미	X	X	X	O	O
관측 수	226	226	226	226	226
adj. R <sup>2</sup>	0.029	-0.002	-0.004	0.175	0.172

주: <표 7>과 동일

앞의 결과에서 수원국의 특성과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 모두 기간 지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은 수원국과 프로젝트 특성을 모두 포함한 통합모형의 결과이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일관되게 음의 계수를 보이는데, 중국 더미가 포함되면 유의성이 사라진다. 성장지표가 좋으면 지연의 요인들이 대체로 약화하여 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기간 편차율은 2% 포인트 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이 효과는 주로 성장률이 다른 수원국에 비해 높은 중국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sup>16)</sup>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장기간 계획된 사업의 경우, 사업 중에 인프라 수요 또는 대상 지역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보상예산이 증가하는 등 지연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PCR에서 이런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거버넌스 변수는 다른 변수의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부호와 유의성을 유지했다. 국가 안정성과 정부 효율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거버넌스가 양호하면 사업 지연 요인들도 잘 관리됨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가 1 포인트 상승하면, 기간 편차율이 6~7%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상황 계수는 예상대로

16) 중국 59개 프로젝트의 사업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3%, 기타 18개국(169개 사업)의 평균은 6.11%였다.

음의 부호를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10〉 기간 편차율 원인 분석 결과 (3) (통합 모형)

	(1)	(2)	(3)	(4)	(5)	(6)	(7)
gdpgrowth	-2.326** (-2.460)	-0.620 (-0.560)	-2.313** (-2.513)	-2.233** (-2.369)	-0.783 (-0.730)		-0.740 (-0.688)
govn	-6.207** (-1.968)	-5.375* (-1.724)	-7.607** (-2.458)	-6.112* (-1.930)	-6.588** (-2.133)	-7.205** (-2.413)	-6.638** (-2.145)
fiscal	-1.074 (-1.450)	-0.662 (-0.891)	-0.651 (-0.891)	-1.201 (-1.629)	-0.454 (-0.619)		-0.551 (-0.738)
plan_ duration	-5.819*** (-3.589)	-5.615*** (-3.516)	-5.657*** (-3.583)	-6.282*** (-3.417)	-6.287*** (-3.549)	-6.074*** (-3.496)	-6.575*** (-3.608)
Incost	1.717 (1.032)	4.981** (2.493)	2.115 (1.304)	2.073 (1.124)	5.664*** (2.662)	5.906*** (2.828)	5.666*** (2.659)
no_of_ financier	1.792 (1.049)	1.897 (1.128)	0.707 (0.418)	1.056 (0.612)	0.387 (0.230)		0.394 (0.233)
중국 더미		-19.834*** (-2.847)			-17.402** (-2.563)	-21.176*** (-3.925)	-17.532** (-2.578)
사업범위 추가			14.218*** (3.618)		13.166*** (3.406)	13.585*** (3.610)	13.521*** (3.462)
농업 섹터					8.971 (1.354)	8.537 (1.304)	8.818 (1.329)
에너지 섹터					13.320** (2.342)	13.127** (2.369)	13.009** (2.277)
물 섹터					10.355** (2.028)	9.976** (1.970)	10.064* (1.962)
기타 섹터					4.009 (0.512)	3.807 (0.490)	3.846 (0.491)
금융위기 더미							2.845 (0.687)
관측수	226	226	226	226	226	226	226
adj. R <sup>2</sup>	0.097	0.125	0.144	0.122	0.186	0.193	0.183

주: 〈표 8〉과 동일

프로젝트 특성 중에서는 전체 계획사업기간 및 규모가 지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래 기간이 긴 사업은 지연되어도 지연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계획사업기간이 길면 당초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는 전체 기간에 비해 짧을 수 있다. 한편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중국 프로젝트를 통제하면, 대규모 사업일수록 지연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이 대규모이면 대상 지역이 넓고 사업내용이 복잡해 지연 요소도 다양할 가능성이 크다. 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기관 수가 많으면 조정비용으로 지연율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변수는 예상대량의 계수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중국 프로젝트는 예상대로 지연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사업범위가 추가된 프로젝트는 지연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프로젝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섹터별로는 에너지, 물 분야의 지연율이 모두 교통 분야 프로젝트보다 10~13%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야 프로젝트의 지연사유를 보면 사업부지확보 지연이 교통 분야에 비해 많았는데 변전소, 송전탑, 오수처리장 등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가 지연 정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젝트 실시기간 중에 '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또는 '07~'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 터미변수를 추가했다. 분석결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연 정도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국가마다 금융위기의 영향이 다르고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에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V. 결론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은 수원국이나 원조 공여기관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MDB가 지원한 건설분야 차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연 정도와 지연 요인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기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논문은 개발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한 데 반해, 본 연구는 본격적인 시공단계보다 오히려 차관승인 이후 계약자 선정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지연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지연 요인 중 구매계약과 컨설턴트 고용 지연, 계약자 성과 부진, 사업범위 변경, 수원국 정부나 사업수행기구의 역량 부족 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연 요인이 있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연을 더욱 장기화시키기도 한다.

사업 기간 편차율이 수원국 정부 및 프로젝트의 어떤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저자들이 아는 한 새로운 시도이다. 분석 결과 수원국 정부의 거버넌스가 나쁠수록, 계획사업 기간이 짧을수록, 계획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지연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기간은 수원국 정부의 경제 상황보다는 거버넌스, 특히 정치적 안정과 연관성이 있다. 거버넌스가 안정되면 정책변경 가능성이 작고 의사결정도 적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젝트 변수 중 계획사업기간이 길면 기간 편차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당초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이거나 지연이 되어도 그 정도는 전체 기간에 비해 짧기 때문일 것이다.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에서 기간 편차율이 증가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획하거나 도전요인이 많아 관리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실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연 정도와 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수원국과 공여기관에 각 단계에서 빈발하는 지연 리스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수원국 정부와 공여기관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연 요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여기관은 국가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수원국 특성을 고려해 사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프로젝트별 PCR을 분석했지만, PCR이 사후적으로 기술되었다는 점 그리고 PCR마다 기술방식과 구체성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정성분석에서 실제 상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기간 편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 MDB가 지원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차관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분석 범위를 다른 공여기관 및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결과의 보편성이나 지역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복영 · 안이슬(2017), “수원국의 자금투입이 원조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는가?”, 『경제발전연구』 23(2), 133-157.
- 박복영 · 안이슬(2019),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주인의식 가설’과 사업기간 분석”, 『경제발전연구』 25(3), 1-27.
- Adam, A., Josephson, P. E., & Lindahl, G. (2015), “Implications of cost overruns and time delays on maj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Proceedings of the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dvanc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and Real Estate (pp. 747-758),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DB, “2021 Annual Evaluation Review: Suppor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adb.org/documents/2021-annual-evaluation-review-supporting-sustainable-development-goals>, (accessed: September 1, 2023).
- ADB(2023), “Project Administration Instructions, PROJECT COMPLETION REPORT FOR SOVEREIGN OPERATIONS”,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33431/pai-6-07a.pdf>, (accessed: September 1, 2023).
- ADB(2014), “Project Classification System: Final Report”,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42823/project-classification-system-final-report\\_0.pdf](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42823/project-classification-system-final-report_0.pdf), (accessed: September 1, 2023).
- Ahsan, K., & Gunawan, I. (2010), “Analysis of cost and schedul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8(1), 68-78.
- Al-Hazim, N., Salem, Z. A., & Ahmad, H. (2017), “Delay and cost overrun in infrastructure projects in Jordan”, Procedia Engineering, 182, 18-24.
- Asiedu, R. O., & Adaku, E. (2020), “Cost overruns of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jects: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ing Projects in Business, 13(1), 66-84.



- Bulman, D., Kolkma, W., & Kraay, A. (2017), "Good countries or good projects? Comparing macro and micro correlates of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project performance",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 335-363.
- Calantone, R., & Vickery, S. K. (2009), "Special topic forum on using archival and secondary data sources in supply chain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45(3), 68-70.
- Denizer, C., Kaufmann, D., & Kraay, A. (2013), "Good countries or good projects? Macro and micro correlates of World Bank project performa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05, 288-302.
- Durdyev, S., & Hosseini, M. R. (2020), "Causes of delays on construction projects: a comprehensive list",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ing Projects in Business*, 13(1), 20-46.
- Edison, J. C., & Singla, H. K. (2020), "Development of a scale for factors causing delays in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ia", *Construction Economics and Building*, 20(1), 36-55.
- Gbahabo, P., & Samuel, A. O. (2017, January), "Effects of infrastructure project cost overruns and schedule delays in sub-saharan Africa", In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Helsinki* (pp. 20-21).
- Habibi, M., Kermanshachi, S., & Safapour, E. (2018, April),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performance leading indicators: State-of-the-art review", In *Construction Research Congress 2018* (pp. 378-388).
- Ika, L. A., Diallo, A., & Thuillier, D. (2012),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World Bank projec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0(1), 105-116.
- Kaimasu, M., Ao, H., & Taira, Y. (2017), "Project Management for ID Projects: Comparative Study on Japan's ODA and ADB Projects in Indonesia", *Transportation*, 9, 9.
- Khan, Z. A., Thornton, N., & Frazer, M. (2000), "Experience of a financial reforms project in Bangladesh",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0(1), 33-42.

- Khang, D. B., & Moe, T. L. (2008), "Success criteria and facto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 life-cycle-based framework", *Project management journal*, 39(1), 72-84.
- Kraiem, Z. M., & Diekmann, J. E. (1987), "Concurrent delays in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13(4), 591-602.
- Kumaraswamy, M. M., & Chan, D. W. (1998), "Contributors to construction delays", *Construction Management & Economics*, 16(1), 17-29.
- Kwak, Y.H. (2002, September), "Critical success fact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CIB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Construction Innovation & Global Competitiveness", Cincinnati, Ohio.
- Le-Hoai, L., Lee, Y. D., & Lee, J. Y. (2008), "Delay and cost overruns in Vietnam large construction projects: A comparison with other selected countries",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2, 367-377.
- Majid, M. A., & McCaffer, R. (1998), "Factors of non-excusable delays that influence contractors'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14(3), 42-49.
- Belay, S.M., Tilahun, S., Yehualaw, M., Matos, J., Sousa, H., & Workneh, E. T. (2021), "Analysis of cost overrun and schedule delays of infrastructure projects in low income economies: case studies in Ethiopia", *Advances in Civil Engineering*, 2021, 1-15.
- OECD-DAC, Evaluation Criteria, OECD, <https://www.oecd.org/dac/evaluation/daccriteriaforevaluatingdevelopmentassistance.htm>, (accessed: September 1, 2023).
- Ramskogler, P. (2015), "Tracing the origins of the financial crisis", *OECD Journal: Financial Market Trends*, 2014(2), 47-61.
- Staff, I. M. F. (2000), "Recovery from the Asian Crisis and the Role of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un, M., & Meng, X. (2009), "Taxonomy for change causes and effects in construction project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7(6), 560-572.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accessed: September 1, 2023).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https://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accessed: September 1, 2023).

Yap, J. B. H., Goay, P. L., Woon, Y. B., & Skitmore, M. (2021), "Revisiting critical delay factors for construction: Analysing projects in Malaysia", Alexandria Engineering Journal, 60(1), 1717-1729.

## 교량 분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sup>1)</sup>

- EDCF 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 사례를 중심으로 -

문경연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 - 목 차 -

I. 서론

II. OECD DAC 평가기준의 창의적 해석과 정량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

III. EDCF 교량 분야 평가지표 개발 연구

IV. 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 평가 사례

1. 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 주요 평가 결과

2. 창의적 지표로서 EDCF 교량사업의 랜드마크 효과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1) 본고는 저자가 참여한 2023년 “EDCF 교량 분야 평가” 당시 평가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 평가 결과)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고민들을 정리한 것이며, 최종보고서 상의 주요 평가프레임워크 및 결과가 재인용 되었음을 밝힘.

## I. 서론

OECD DAC은 공여국 및 지역·국제기구 간 다양한 원조 관련 원칙과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혼선과 이에 대응하는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공여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평가분야에 있어서도 1980년 선진국 내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원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OECD DAC은 1991년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5대 지표로 구성된 평가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후 2005년에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으로 인해 책무성의 개념이 포함되면서 성과중심 관리 및 증거기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다. 2019년에는 다양한 원조 주체 및 사업 간 일관성 요소를 평가지표에 추가하면서 6대 지표로 발전하였다.

[표 1] OECD DAC의 6대 평가기준

평가지표	내용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가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일치하는가에 대한 평가</li> <li>SDGs, MDGs등 국제적 개발목표 및 공여국의 지원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li> </ul>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에 투입된 비용, 시간, 인력 대비 성과 측정</li> <li>성과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대한 점검</li> </ul>

평가지표	내용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초기 설정 목표 대비 목표치 달성도 측정</li> <li>• 평가대상이 목표한 산출물의 달성여부</li> <li>• 단기/중장기적 목표의 달성 수준 평가</li> </ul>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수행 결과 협력대상국에 사회, 문화, 환경, 경제적으로 미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효과 측정</li> <li>• 프로젝트가 의도한 결과 및 의도치 않은 결과 모두를 포함하여 평가</li> </ul>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종료 이후, 일정기간 효과 유지의 가능성</li> <li>• 지속가능한 효과를 위해 협력국의 주인의식, 프로젝트 참여정도, 협력 대상국의 문화, 제도, 재정적 지원여부</li> </ul>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개발 및 분야별 정책일관성</li> <li>• 유사 ODA 사업 분석 및 ODA 사업간 중복방지/연계가능성 확인 등 전략적 파트너십 검토</li> </ul>

출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2018).

국제사회의 ODA 사업 평가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200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을 제정하였고, 2014년과 2018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EDCF 역시 2012년 ‘EDCF 공동평가 지침서’를 통해 OECD DAC의 평가기준을 도입하였고, 2020년 ‘EDCF 평가매뉴얼’을 수립함으로써 유상원조 사업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23년 수행된 ‘EDCF 교량 분야 평가(주 평가대상: 베트남 밤콩교량, 탄자니아 뉴샬런더교량)’ 역시 ‘EDCF 평가매뉴얼’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팀의 고민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수립된 ‘EDCF 평가매뉴얼’을 준수하되, 수치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최소화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과 EDCF 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표를 고안하는 것이었다.

## II. OECD DAC 평가기준의 창의적 해석과 정량적 지표 개발의 필요성

OECD DAC의 평가기준과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지침 및 통합평가매뉴얼 개정(2018.12월)’을 바탕으로 2020년에 수립된 ‘EDCF 평가매뉴얼’은 평가수행자 및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프레임워크의 창의적인 해석과 개선(modification) 혹은 추가적인 지표 개발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DAC의 6대 평가기준 상의 지표들은 평가목적에 맞게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수행 주체가 6대 평가지표를 하나의 세트로 적용하지 않아도 됨을 밝히고 있다.<sup>2)</sup> 즉, 평가의 목적, 사업의 특징 등을 반영하여 평가자 및 기관이 주체적으로 기존의 평가기준을 선택 및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EDCF 운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교량평가 과업지시서에 베트남과 탄자니아 교량 건설사업이 가진 랜드마크로서의 효과와 그 효과가 공여국인 한국의 이미지(공공외교적 효과) 개선에 미친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였다.<sup>3)</sup>

2) 한국수출입은행, “EDCF 평가매뉴얼”, 2020, p.45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DA Evaluation Guidelines”, 7th Edition, ODA Evaluation Division, 2012, p. 4.

3) 실제로 “EDCF 평가매뉴얼”은 46페이지에서 “1.2. 별도 평가기준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표 2] OECD DAC의 평가기준 적용원칙

품질높은 평가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개별 평가의 맥락과 평가대상,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의 해석과 분석에 있어서, 평가를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기준의 활용은 해당 평가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평가의 맥락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평가 목적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가용성(data availability), 자원의 제한성, 시점 및 방법론 등도 특정 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및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평가매뉴얼”, 2020, p.45(원출처: OECD DAC 평가네트워크)

다음으로, 수치화되지 않은 평가지표를 최소화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본 평가팀의 교량분야 평가사업 협의과정에서 정량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팀은 평가대상 사업의 타당성 조사보고서와 완공보고서(PCR) 상의 성과평가프레임워크에 어떤 성과지표(output, outcome, goal)들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들 지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와 그렇지 못한 지표로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EDCF의 교통분야 사후평가 보고서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정량화 가능한 지표를 파악한 후, OECD DAC의 세부 평가 지표들을 교량분야의 특징에 맞게 개편하였다. 이후, 이들 지표들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에 대한 고도화 과정을 거쳤으며, 평가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어떠한 지표가 타 지표 대비 더 중요한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차별화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일례로, 베트남 밤콩교량 사업은 교량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위한 목적보다는 베트남 광역 고속도로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된 사업(적절성)으로, 교량을 인근 도시지역에서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지역주민의 교량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교통량(효과성)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교량 완공 시점에 운행 중단되었던 페리가 운행을 재개하면서 교량 교통량 지표상의 계획과 실제 간 큰 오차가 발생하여 효과성 평가 점수가 낮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평가팀에서는 적절성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을 반영한 평가라고 판단하여 차별화된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평가기준의 해석 및 평가등급의 부여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본 평가팀은 정량적 지표를 최대한 발굴한다는 고민 하에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복수의 정량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절성 지표에는 ‘교통량 수요 파악의 엄밀성’, 효율성 지표에는 ‘계획 공사 기간 준수 여부’, ‘계획 공사비 준수 여부’, 효과성 지표에는 ‘교통량 증가율’, ‘이동시간 단축률’, ‘통행 거리 단축’, ‘완공여부’, 영향력 지표에는 ‘GRDP(지역내 총생산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환경편익’, 랜드마크 지표에는 ‘랜드마크의 한국 인지도 발생 효과’, ‘랜드마크 효과’를 정량적 지표로 제시하였다.

문제는 각 지표별 평가점수의 배정을 위한 구간 획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교통량 수요 파악의 엄밀성’ 지표에서 오차범위 구간(ex. 오차범위 〇〇%이내 〇점, 〇〇%이내 〇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객관성에 기반한 구간 설정 및 평가점수 부여가 관건이었고, 본 평가팀은 구성원 중 건축, 토목 컨설턴트들의 전문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을 준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개도국 ODA 사업의 특징과 한계, 주요 가정의 충족 여부(Covid-19의 여파), 수원국의 향후 보완/보충계획 등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III. EDCF 교량 분야 평가지표 개발 연구

위의 고민들을 바탕으로 본 평가팀은 EDCF 교량분야 평가를 위해 정량화 지표의 강화를 중점으로 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2021)’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평가매뉴얼(2020)’에 의거하여 OECD DAC 6대 평가기준과 범분야 이슈 관련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교량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량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교통량)가 평가의 핵심 요소인 바, 현지 조사업체를 통해 교통량을 조사하였고 추가적으로 교량의 랜드마크적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수원국 미디어에서의 평가대상 교량의 노출도를 측정하여 랜드마크로서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넷째, 범분야 이슈와 관련하여, 교량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이주 대상 가구의 적절한 이주 여부, 교량 건설 과정과 이후의 환경적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량적 평가지표의 개발을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각 평가 영역별 정량평가 요소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들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표 3] 평가 기준별 정량평가 지표 및 가중치

평가 기준	가중치		정량평가 요소	비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적절성	40%	60%	• 수요 파악의 적절성	
일관성	0%	100%	-	
효율성	70%	30%	• 사업 예산 설정 및 집행의 효율성 • 사업 기간 설정 및 이행의 효율성	
효과성	80%	20%	• 산출물(완공 여부), 산출 결과(교통량 증가, 통행 거리 및 시간 감소) 달성도	
지속 가능성	0%	100%	-	
영향력	50%	50%	• GRDP, 빈곤층 비율 감소, 고용자 수 증가 • 환경편익	
범분야	0%	100%	-	
랜드마크	50%	50%	• 랜드마크 효과 및 랜드마크가 한국 인지도 미친 영향 설문조사 • 평가대상의 미디어 노출 측정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99.

제안된 정량평가 지표에 따르면 일관성, 지속가능성, 범분야 영역에서 정량평가 요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분야의 경우 세부평가 항목인 안전진단 실시여부, 유지보수 재정자원 확보 수준, 인적자원 배치 여부 등을 바탕으로 정량화 가능성이 있으며, 범분야의 경우 관련 데이터 확보 시 취약계층의 이주 및 보상 영역에서 성과나 진척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에, 이는 다음 평가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평가 기준별 세부 평가 질문은 아래와 같다.

[표 4] 평가 기준별 정량평가 세부 질문

평가 기준	평가 질문	
적절성	정량평가 (40%)	✓ EDCF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수원국의 교통 인프라 현황 및 발전 수요에 대한 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효율성	정량평가 (70%)	✓ 사업금액이 적절하게 설정 및 집행되었는가? ✓ 사업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 및 집행되었는가?
효과성	정량평가 (80%)	✓ EDCF 교량분야의 분야 수준 성과(산출물, 산출 결과) 달성 정도는 어떠한가?
영향력	정량평가 (50%)	✓ EDCF 교량 사업이 경제적 영향력이 있었는가? ✓ EDCF 교량 사업이 환경적 영향력(환경오염감소)이 있었는가?
랜드마크	정량평가 (50%)	✓ EDCF 사업이 랜드마크로서 효과가 있었는가? ✓ EDCF 사업이 랜드마크로서 한국 인지도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p. 99~100.

또한 정량평가 지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특징(교량 건설 사업시 일반적으로 준용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과 수원국의 환경적 요소, 사업 계획시 중요한 가정(assumption)들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구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5] 정량지표별 평가 등급표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점	점수
적절성	교통량 수요 파악의 엄밀성	(준공 후 평가 시점까지) 오차범위 00% 이내	4	
		(준공 후 평가 시점까지) 오차범위 00% 이내	3	
		(준공 후 평가 시점까지) 오차범위 00% 이내	2	
		(준공 후 평가 시점까지) 오차범위 00% 이내	1	
효율성	계획 공사 기간 준수 여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	4	
		계획된 기간의 00~00%에 완공	3	
		계획된 기간의 00~00%에 완공	2	
		계획된 기간의 00%를 초과하여 완공	1	
	계획 공사비 준수 여부	계획된 비용 내에 완공	4	
		계획된 비용의 00~00%에 완공	3	
		계획된 비용의 00~00%에 완공	2	
		계획된 비용의 00%를 초과하여 완공	1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점	점수
효과성	교통량 증가율	당초 계획의 00% 이상 달성	4	
		당초 계획의 00~90% 이상 달성	3	
		당초 계획의 00~70% 이상 달성	2	
		당초 계획의 00% 미만 달성	1	
	이동시간 단축률	기존의 00% 이상 감소	4	
		기존의 00% 이상 감소	3	
		기존의 00% 이상 감소	2	
		기존의 00% 이상 감소	1	
	통행 거리 단축률	기존의 00% 이상 감소	4	
		기존의 00~00% 이상 감소	3	
		기존의 00~00% 이상 감소	2	
		기존의 00~00% 이상 감소	1	
	완공 여부	00% 완공	4	
		00% 완공	3	
		00% 완공	2	
		00% 완공	1	
영향력	GRDP	00% 이상 증가	4	
		00% 이상 증가	3	
		00% 이내 증가	2	
		00% 이하 증가	1	
	환경편익	00 백만 달러 이상 편익	4	
		00 백만 달러 이상 편익	3	
		00 백만 달러 이상 편익	2	
		00 백만 달러 이상 편익	1	
랜드마크	랜드마크의 한국 인지도 발생 효과	랜드마크와 한국 대한 인지도 00% 이상	4	
		랜드마크와 한국 대한 인지도 00% 이내	3	
		랜드마크와 한국 대한 인지도 00% 이내	2	
		랜드마크와 한국 대한 인지도 00% 이내	1	
	랜드마크 효과	00건 이상/년	4	
		00-00건/년	3	
		00-00건/년	2	
		00건 미만/년	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102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본 평가팀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교량평가 과업지시서에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건설한 EDCF 교량사업이 랜드마크로서 가지는 효과와 그

효과가 공여국인 한국의 이미지(공공외교적 효과) 개선에 미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랜드마크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 [표 6], [표 7]의 평가프레임워크를 고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소셜미디어에서 탄자니아 뉴셀린더 교량의 노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표 6] 랜드마크 효과평가 항목별 평가 방식 및 가중치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방식	항목별 가중치
랜드마크	사업 선정의 적절성	정성평가	25%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사회문화적 효과(정량평가) 경제적 효과(정량평가) 성공 및 실패 요인(정성평가)	50% (각 10%)
		사업의 한국 이미지 관련 효과(정량평가) 한국 이미지 관련 성공 및 실패 요인 (정성평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성평가	2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185.

[표 7] 정량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점	점수
랜드마크	사회 문화적 효과	온라인 뉴스 게시물 00건 이상/년	4	
		온라인 뉴스 게시물 00~00건/년	3	
		온라인 뉴스 게시물 00~00건/년	2	
		온라인 뉴스 게시물 00건 미만/년	1	
	경제적 효과	방문객 연평균 00% 이상 증가	4	
		방문객 연평균 00% 이상 증가	3	
		방문객 연평균 00% 이상 증가	2	
		방문객 연평균 00% 미만 증가	1	
	한국 이미지 연관 효과	랜드마크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 연계 00% 이상	4	
		랜드마크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 연계 00~00% 이내	3	
		랜드마크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 연계 00~00% 이내	2	
		랜드마크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 연계 00~00% 이내	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186를 바탕으로 재구성.

#### IV. 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 평가 사례

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 사업은 총 사업비 146,522천 달러 중 EDCF가 123,653천 달러<sup>4)</sup>를 지원하여 2018.10월~2021.12월 기간 동안 교량(1.03km)과 연결도로의 신설(0.68km) 및 확장(4.52km, 2차로→4차로)을 완료하였다.

다레살람 시내 중심지로의 진입로 신설을 통한 병목구간 교통체증 완화가 사업의 직접적인 목표로 선정되었으며, 거시적으로 다레살람 남·북부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항구 연결로 제공을 통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동 교량 건설은 ‘탄자니아 발전 비전 2025’의 세부 계획인 ‘국가 5개년 개발계획(2016/2017 - 2020/2021)’에 포함된 사업으로 탄자니아 주요 교통망 구축사업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그림 1] 뉴샬린더교량 전경



4) 2014년 12월 본 용자 91,032천 달러, 2021년 4월 보충 용자 32,621천 달러를 승인



## 1. 탄자니아 뉴셀린더교량 주요 평가 결과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 노력이 반영되어 탄자니아 뉴셀린더교량 사업의 종합성과 평가 점수는 3.72점(4점 만점)이며, 종합적으로 ‘매우 성공적(High Successful)’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OECD DAC의 6대 평가지표 기준, 국내 및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교통 인프라 ODA 지원정책들과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지표에서 최고점수인 4점, 교량 건설로 인한 이동거리 및 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편익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3.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반면에 교량의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 재정·기술적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3.01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8] 뉴샬린더교량 건설사업 세부 종합성과 결과

평가 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점수 (가중치반영)	평가 결과	가중치	평가값
적절성	• 정책적 타당성(50%)	4(2)	적절	20%	3.6
	• 개발 수요(40%)	3(1.2)			
	• 사업설계/변경의 적절성(10%)	4(0.4)			
일관성	• 내적 일관성(50%)	4(2)	매우 일관	20%	4
	• 외적 일관성(50%)	4(2)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70%)	3.5(2.45)	효율적	20%	3.65
	• 운영적 효율성(30%)	4(1.2)			
효과성	• 목표 달성도(80%)	4(3.2)	효과적	20%	3.92
	• 추가적 파급 성과(20%)	3.6(0.72)			
영향력	• 제도적 영향력(50%)	3.6(1.8)	매우 영향	10%	3.8
	• 경제·환경적 영향력(50%)	4(2)			
지속가능성	• 제도적·인적 지속가능성(40%)	4(1.6)	지속가능	10%	3.01
	• 재정적 지속가능성(30%)	3(0.9)			
	• 기술적 지속가능성(30%)	1.7(0.51)			
종합평가 점수			매우 성공적		3.72
등급		평가값			
매우 성공적(High Successful)		3.7 이상			
성공적(Successful)		2.6 이상~3.7 미만			
일부 성공적(Partly Successful)		1.8 이상~2.6 미만			
미흡(Unsuccessful)		1.8 미만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349.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상 OECD DAC 6대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보다는 주요 지표별 평가 결과의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뉴샬린더교량 사업의 주요 성과는 신규 교량 건설과 연결도로의 확장을 통해 지형적 장애를 극복하고, 이로 인해 이동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샬린더교량의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율은 목표 대비 142%로 초과 달성되었으며, 이동시간은 구샬린더교량의 연결도로 확충과 신규 교량 건설로 인한 교통 분산의 효과로 기존에 구샬린더 교량(확장 전 연결도로 포함) 이용시 23.3분에 달하였던 것이 12.1분으로 감소하는 한편, 확충된 연결도로에 직결된 뉴샬린더교량 이용시 7.2분까지 감소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 100%를 충족하였다. 동 구간의 평균 주행속도 향상 지표에서도 기존에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12.6km/h였던 것이 확장된 연결도로를 이용하여 구샬린더교량 통행시 24.3km/h, 확장 연결도로와 뉴샬린더교량 모두 이용시 45.2km/h로 증가하여 목표대비 100%의 달성률을 보였다.

[표 9] 산출 결과

지표 정의	기준연도		기준구간*	신설구간**	
사업 구간 일 이용 교통량 증가(대)	2013(기존)		55,792	-	
	완공 후	2022 지표(목표)	35,145	26,541	
		양 구간 합계			61,686
		2023 조사 결과	71,121	16,751	
		양 구간 합계			87,872
	목표 대비 달성률(%)		202%	63%	
			142%		
사업지역 평균 이동시간 감소(분)	2013(기존)		23.3	-	
	완공 후	2022 지표(목표)	12.7	7.2	
		2023 조사 결과	12.1	7.2	
	목표 대비 달성률(%)		105%	100%	
사업지역 평균 주행속도 향상(km/h)	2013(기존)		12.6	-	
	완공 후	2022 지표(목표)	19.8	45.0	
		2023 조사 결과	24.3	45.2	
	목표 대비 달성률(%)		123%	100%	

\* 기준구간: CBD 지역~Msasani 반도 (Ali Hassan Mwinyi Road/구샬린더 교량 경유)

\*\* 신설구간: CBD 지역~Msasani 반도 (뉴샬린더 교량 경유)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304.

뉴샬린더교량 건설 사업의 경우 효과성과 함께 영향력 평가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교량 건설의 경우 경제발전의 파급 효과가 높은 인프라로 인식되는 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들 시설이 GRDP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영향력 평가에서 대표적인 정량지표로 GRDP를 인용하고 있다. 본 평가에서도 이를 착안하여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다레살람 1인당 GRDP 변화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인당 GRDP가 2013년 1,071달러에서 2022년 2,147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레살람 항구는 탄자니아의 주요 3개 항구 중에서도 중심 항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국제물류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국제무역의 핵심시설로, 탄자니아 정부는 2025/26까지 인접국 화물을 포함하여 수입화물 1,800만 톤, 수출화물 1,000만 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평가팀이 뉴샬린더교량 건설 전과 후의 물동량을 비교한 결과, 다레살람 항구의 물동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화물 처리량 및 선박 이동량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 2013년과 비교하여 2022년 기준 선박 이동량은 약 22%, 화물 처리량은 약 49% 증가하였고, 2026년에는 목표치 2,8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론, 뉴샬린더 교량 건설 및 연결도로의 확장과 다레살람 GRDP 및 물동량 변화 간 인과관계는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평가에서도 해당지표 관련 뉴샬린더교량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적절성 평가에서 뉴샬린더교량 건설사업은 탄자니아 국가 교통정책 및 다레살람 교통시스템개발계획(2008)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적 및 설계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세부 평가지표에

교량 분야의 지원 효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결과(Outcome)에 사업 구간의 일 이용 교통량, 통행시간 및 통행속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장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설정에 있어서 교역량 증가, 방문자 증가 등 교량 건설의 지역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획한 점 또한 적절하였다. 무엇보다도 정량적 평가가 가능했던 교통량 수요 파악의 오차범위가 적절성 측면에서도 20% 이내의 범위<sup>5)</sup>에 들어오면서 기획과 실제 간 차이가 크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6개 평가지표 중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탄자니아 뉴샬린더교량이 이 평가지표에서 최하점을 기록한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단골 어젠다인 ‘개도국 지원 시 공여국이 주체적으로 개도국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혹은 ‘EDCF는 무상이 아닌 차관지원으로 수원국의 니즈가 더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 간 딜레마와 직결되어 있다. 물론 정답은 정책적 판단일 수밖에 없겠으나, 탄자니아는 첨단 공법이 적용된 교량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인적, 재정적, 기술적 역량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첨단 공법이 적용된 EDCF의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확대될 미래 ODA 환경을 고려할 때, 하드웨어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O&M)가 병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5) 오차 발생의 이유는 뉴샬린더교량을 연결하는 부속 연결도로의 추가적 확충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창의적 지표로서 EDCF 교량사업의 랜드마크 효과 평가

뉴샬린더교량은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동부 인도양 연안의 요충지에 자리잡은 탄자니아 다레살람의 교통 중심지에 건설함으로써 탄자니아의 국가 발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또한 고려되었다. 따라서 본 평가팀은 뉴샬린더교량의 랜드마크로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SNS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노출도를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랜드마크 교량을 건설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탄자니아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6점 이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69%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뉴샬린더교량이 한국의 인지도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10점)한 응답자는 전체의 44%를 차지하였으며,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평가(1점 또는 2점)한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평균값 7.4점)에서 뉴샬린더교량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표 10] 한국에 대한 이미지 관련 변수 요약

변수	응답자 수	평균	편차
교량의 한국 인지도 개선에 기여 수준	225	7.40	3.251508
교량의 한국 호감도 개선에 기여 수준	225	6.74	3.204022
교량의 한국 관심도 개선에 기여 수준	225	6.72	3.173408

주: 변수는 1점부터 10점까지 범위를 사용함; 최솟값은 1점이며 최댓값은 10점임.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349.

또한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6점 이상)한 응답자는 전체의 65%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 중 뉴샬린더교량이 한국의 호감도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10점)한 응답자는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6점 이상)한 응답자도 전체의 85%로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뉴샬린더교량 건설 사업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회귀분석 결과

	한국 인지도	한국 호감도	한국 관심도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 인지도 개선에 기여한 수준	0.387	0.532	0.430
	(6.61)**	(11.24)**	(9.43)**
나이	-0.256	-0.219	-0.093
	(1.39)	(1.48)	(0.65)
성별	0.214	-0.009	-0.010
	(0.56)	(0.03)	(0.04)
원조 수원 유무	2.429	0.948	0.900

	한국 인지도	한국 호감도	한국 관심도
	(3.27)**	(1.58)	(1.56)
_cons	3.450	3.638	4.527
	(5.49)**	(7.16)**	(9.26)**
R2	0.22	0.38	0.31
N	225	225	225

주: \*  $p<0.05$  \*\*  $p<0.0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2023, p. 351.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평가팀은 뉴샬린더교량 건설 사업과 한국 공공외교적 효과 간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한국 공공외교적 효과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증감 수준을 측정하였다.<sup>6)</sup> 분석 결과,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가 모두 높았으며,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점 높아질수록,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0.387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뉴샬린더교량 건설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점 높아질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0.532점, 관심도는 0.43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뉴샬린더교량 건설 사업과 같이 한국의 지원으로 수원국의 자부심이 되는 랜드마크형 시설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수원국 국민에게 적절히 홍보할 경우, 한국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를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6) 독립변수는 교량 건설과 한국 간의 관계 인지 수준으로써 뉴샬린더교량이 한국의 인지도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정도로 도입하였다. 이는 평가팀이 뉴샬린더교량 평가와 병행한 베트남 사례 분석과 같이 교량 건설에 한국이 기여했는가에 대한 인지 수준을 독립변수로 도입해야 하나, 탄자니아 설문조사 결과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미완결성으로 인해, 대체 지표를 활용한 것이다.

## V. 결론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 예산(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1.1월)한다는 야심찬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감한 ODA 증액을 추진해 왔다. 작년 ODA 규모의 대대적 증액은 이런 구상의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가운데 EDCF 또한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는 EDCF 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을 수반하였다.

본고는 국제사회의 ODA 평가 가이드라인인 OECD DAC의 6대 평가프레임워크의 확실적인 적용이 아닌 평가기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용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EDCF 운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2023년 수행한 교량분야 평가 과정에서 본 평가팀과 어떠한 고민을 공유하였는지 본고를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민은 많은 정량적 평가지표의 개발과 EDCF 사업이 수원국 내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미친 성과, 즉 공공외교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 뉴셀린더교량의 랜드마크적 효과와, 동 사업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정량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발굴과 함께 사후평가의 양적, 질적 확대도 전망된다. 이에 본



평가팀이 교량 분야 평가에서 가졌던 이러한 고민들이 타 분야의 평가에도 공유 및 활용됨으로써, 앞으로 EDCF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평가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양적 평가방법론과 증거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첫 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한국수출입은행 (2020). EDCF 평가매뉴얼.

한국수출입은행 (2023). EDCF 교량분야 평가용역 최종보고서.

### 해외문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2). ODA Evaluation Guidelines, 7th Edition. ODA Evaluation Division.

### 온라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이트 평가보고서.

<https://www.edcfkorea.go.kr/fe/HPHF090M01?boardtypeid=81&pagesize=10&currentpage=1> [검색일: 2024년 5월 20일]

PART  
03

---

##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EDCF



##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김경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 - 목 차 -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580천 km <sup>2</sup>	5,154만명 (2023 <sup>e</sup> )	대통령 중심제	친서방 정책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1,127.5억 달러 (2023 <sup>e</sup> )	2,188달러 (2023 <sup>e</sup> )	Kenya Shilling(Ksh)	139.90 (2023 <sup>e</sup> )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5,15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23년 케냐 경제는 농업 생산량 회복,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 관광업 성장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0%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케냐 중앙은행은 2023년 12월 기준금리를 11년 만의 최고치인 12.5%로 인상함.
-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10년 37.3% → '20년 67.7%), 루토 행정부의 공공부채 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점진적 감소가 전망됨.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 지역공동체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프리카 내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4. 2. 7 수교 (북한과는 1975. 5. 12)
-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8), 문화협정(1980), 항공협정(198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05), 무상원조협정(2014), 이종과세방지협약(2017), 투자보호협정(2017)

### [ 교역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 출	258,419	456,604	270,014	유기화학제품, 철강제품
수 입	46,846	75,736	53,437	동, 알루미늄, 방직용섬유

-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34건,  
10,515천달러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1	-0.3	7.6	4.8	5.0
소비자물가상승률	5.2	5.3	6.1	7.6	7.7
재정수지/GDP	-7.4	-8.1	-7.2	-5.8	-4.7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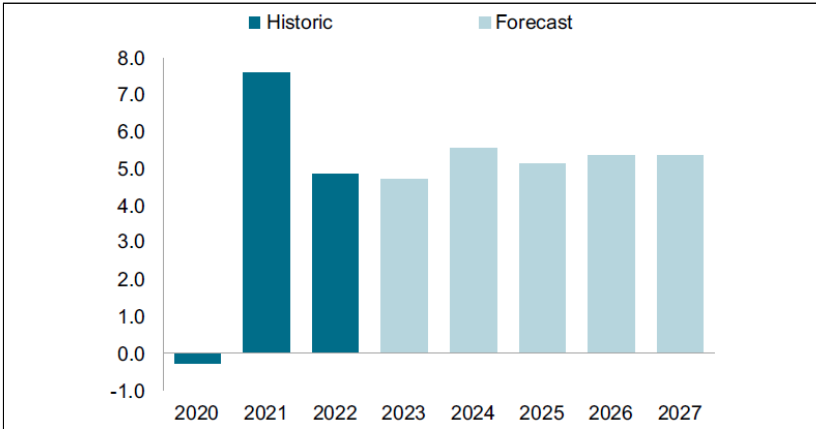
- 2023년 케냐 경제는 농업 및 관광 부문 회복, 민간소비 활성화 등으로 5.0% 성장 추정
  - 케냐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0.3%의 역성장 기록)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민간소비 회복,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2021년 7.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되어 각각 4.8% 및 5.0%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회복, 평화적 정권 교체, 주요 인프라 개발, 국제무역 재개, 전략적 투자유치 등으로 4.8%의 경제성장을 기록함.
  - 2023년에는 농업 생산량 회복에 따른 농업 부문 성장(‘23년 3분기 6.7% 성장), 민간소비 및 투자 증대, 관광업 성장(‘23년 해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18.42%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도 5.3%의 성장이 전망됨.
  - 2019년 광산업 분야 면허 발급 허가 조치 이후 동 분야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024년에는 광업 분야가 케냐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케냐의 연도별 경제성장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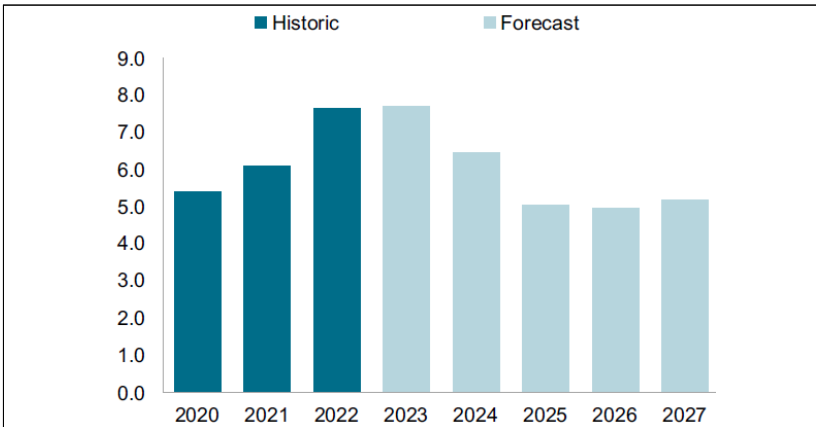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2] 케냐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S&P Global.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5년 만의 최고치 기록 후 2023년에도 다소 상승 추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국제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 달러화 대비 실링화 가치\* 하락 등으로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년 만의 최고치인 7.6%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한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113.0('22.1.2) → 123.5('23.1.3) → 157.4('24.1.1)

\*\* 4.7%('18) → 5.2%('19) → 5.3%('20) → 6.1%('21) → 7.6%('22) → 7.7%('23)

- 케냐 중앙은행(CBK)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2023년 12월 기준 금리를 11년 만의 최고치인 12.5%로 대폭 인상함\*.

\* 7.0%('22.3월) → 7.5%('22.5월) → 8.25%('22.9월) → 8.75%('22.11월) → 12.5%('23.12월)

- 그 결과 2023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6%로 20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의 소폭 하락과 농업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세 둔화도 동 상승률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보다 하락한 6.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링화 약세도 완화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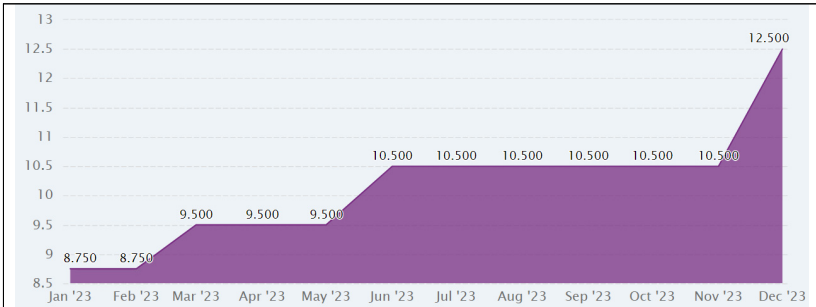
[그림 3] 미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의 환율 변동 추이



자료: Google Finance.

[그림 4] 케냐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CEIC.

- 인프라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지출 확대 이후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에 맞춰 에너지·교통 분야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매년 GDP 대비 -7%대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2020~21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8%대로 악화됨.
  - 이에 루토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적으로 세수기반 확대 및 낭비적 정부지출 억제를 통하여 이전 정부에서 문제 되었던 공적채무 축소 및 채무관리 강화에 주력할 것을 선언하며 보조금 축소 및 세금 인상 정책을 실시함.
  - 그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8%에서 2023년 -4.7%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세금 징수 개선, 루토 행정부의 정부지출 억제 정책,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부수입 증대를 통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27년 이후에는 3%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년간 증가를 지속해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67.7%로 정점에 달한 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2030년에는 50% 미만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 63.7%('22) → 61.0%('23<sup>f</sup>) → 60.4%('24<sup>f</sup>) → 54.2%('27<sup>f</sup>) → 47.8%('30<sup>f</sup>)

- 최근 수년간 정부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된 바, 향후 정부수익 증대 및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2. 대외거래

### [ 주요 대외거래 지표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5,258	-4,792	-5,744	-5,766	-5,132
경상수지/GDP	-5.3	-4.8	-5.2	-5.1	-4.6
상품수지	-10,683	-8,338	-11,065	-11,704	-11,570
상품수출	5,871	6,052	6,789	7,419	7,630
상품수입	16,554	14,390	17,854	19,123	19,200
외환보유액	9,037	8,251	8,785	7,383	8,075
총외채	52,317	70,389	75,497	81,164	85,384
총외채잔액/GDP	52.2	69.8	68.7	71.4	75.7
D.S.R.	34.1	26.7	24.1	23.6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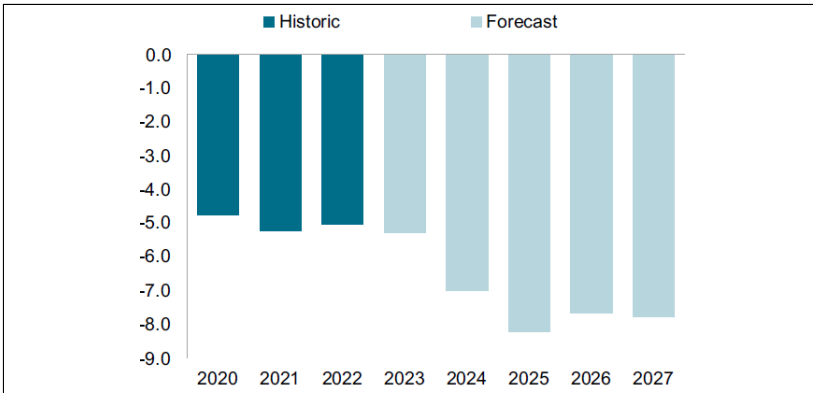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관광 부문 회복, 수입수요 둔화로 2023년 경상수지 적자폭 전년보다 축소 추정
- 2023년 국제유가(전년 대비 10% 하락) 및 상품 수입가격의 전년 대비 하락과 수입수요 둔화 및 관광 부문의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

- 흑자폭의 확대로 202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5.1%에서 -4.6%로 소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69.3%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한 14.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24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가계 소비 및 수입 소비재 수요 증대, 실링화 약세 완화 및 달러 공급 개선으로 인한 자본재 수요 증대로 상품수입이 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연도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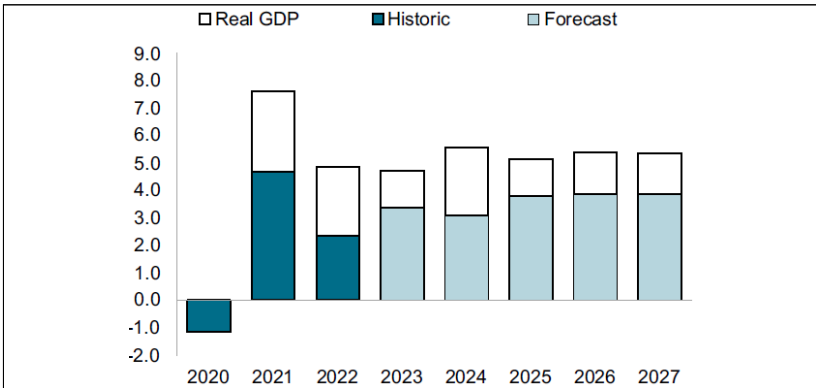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S&P Global.

[그림 6] 민간소비의 실질 GDP 성장을 기여도

(단위: %)



자료: S&P Global.

### 3. 외채상환능력

- GDP 대비 외채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외채상환능력 악화 우려
  - 2023년 말 케냐의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약 5.2% 증가한 854억 달러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약 4.3%p 상승한 75.7%로 추정됨. 케냐는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공공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조세수입 및 FDI 등의 민간자본 공급이 크지 않아 적자 보전을 위한 공공부채 및 총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옴.

\* 총외채(억 달러): 523.2('19) → 703.9('20) → 755.0('21) → 811.6('22) → 853.8('23<sup>e</sup>)

- 2023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총수출액\*의 591.8%, D.S.R.은 전년대비 2.8%p 상승한 26.3%로 추정됨.

\* 총외채잔액/총수출(%): 447.6('19) → 721.0('20) → 635.2('21) → 584.0('22) → 591.8('23<sup>e</sup>)

\*\* D.S.R.(%): 34.1('19) → 26.7('20) → 24.1('21) → 23.6('22) → 26.3('23)

- 2023년 말 케냐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3.7개월분으로 전년(3.4개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연속 3개월대를 유지하는 중임.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5.1('20) → 4.4('21) → 3.4('22) → 3.7('23<sup>9</sup>)

- 주요 원인은 달러화 대비 케냐 실링화 가치의 장기적 하락으로 추정되며, 케냐 중앙은행과 케냐가 속해 있는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EAC)의 목표치인 4개월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케냐 실링화의 지속적 평가절하, 2024년 6월 200억 달러 유로본드 만기 도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인한 대외유동성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관광업 회복에 따른 외화소득 증가, 해외송금 유입액 증가(전년 대비 4% 증가),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로부터의 지원 확보는 대외유동성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2023년 6월 케냐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1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승인 대기 중임을 발표함. 동 지원은 3년에 걸쳐 제공되며, 부채 관리 및 외환유동성 확보 등을 통한 경제구조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 Ⅲ.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전력·수자원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
  - 케냐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141개국 중 종합 9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인프라 부문은 110위를 기록하였음. 교통 인프라는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30에 맞춰 철도·도로 건설 및 보수, 항만 개발, 공항 건설 등 전방위적 투자로 141개국 81위를 차지하며 주변국\*에 비해 양호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관련 인프라\*\*는 115위로 열악한 수준임.

\* 교통 인프라 순위 : 르완다 71위, 우간다 75위, 탄자니아 110위, 에티오피아 12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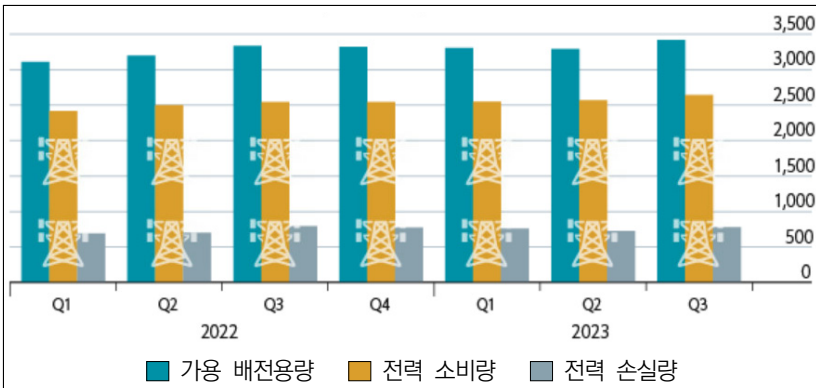
\*\* 세부 구성항목: 전력 보급 112위, 전력공급 품질 114위, 안전한 식수 노출 113위, 물 공급 안전도 116위

- 케냐 정부의 전력 생산 및 송·배전 관련 투자 확대에 가정의 전력 보급률은 2013년 32%에서 2022년 75%로 상승하는 등 유틸리티 인프라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케냐 정부의 3차 중기계획 (MTP-III) 목표인 ‘2022년 말 전력 보급률 100% 달성’에는 미치지 못함.
  - 케냐 정부는 보편적 전력 보급의 달성 시점을 2030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겼으나, 비싼 전력 요금으로 전력소비 증가가 전력공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
- 2023년 4개월간 3차례 발생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전 사태로 국제공항, 병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 동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은 노후화된 송전 시설의 고장으로 신규 발전시설 투자 대비 송전망 시설의 보안 및 유지관리가 경시되면서 2022~23년 정전 빈도가 잦아짐.



- 2023년 1~9월까지 전력 공급량은 2022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수요가 5.7%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력 수입은 619GWh로 전년 동기(217GWh) 대비 급증하며 송전망에 추가적 부담을 가함.
- 동 기간 전력 손실은 가용 배전용량의 22.6%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요 원인인 설비 노후화에 대한 투자가 긴요한 상황임.

[그림 7] 2022~23년 케냐 전력 배전 가능량 및 소비량(Gwh) 추이



자료: EIU

- 한편, UNICEF에 따르면 2020년 케냐의 안전한 식수 공급률은 59%,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률은 29%로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식수와 위생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등으로 산업다각화 필요
- 케냐 경제는 농업 의존적 구조로, USAID에 따르면 농업 부문은 GDP의 약 33%를 차지하며, 총인구의 40% 이상, 농촌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케냐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케냐의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고, 미미한 관개 비율과 인프라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으며, 가뭄, 폭우, 메뚜기 떼 창궐과 같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함.
- 케냐 정부는 농업 기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산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코자 제조업 육성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 제조업 부문의 연간 15% 성장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정책(2012~30년)을 추진 중임.
  - 집중 육성 분야는 ①노동집약적 부문(식품가공업, 섬유·의류, 가죽 및 가죽제품), ②중·상급 기술 부문(철강, 공작기계, 농기계·농구, 의약품), ③첨단 제조기술 부문(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임.
  - 그러나 2016~20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7% 수준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아직 제조업 발전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표 1] 케냐의 연도별 제조업 현황(2017~22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조업 생산(억 달러)	71.7	77.5	79.3	76.5	80.8	88.8
제조업 성장률(%)	1.9	3.6	2.6	-0.3	7.3	2.7
GDP 대비 비중(%)	8.7	8.4	7.9	7.6	7.4	7.8

자료: World Bank DB.

## 2. 성장잠재력

- 지열 및 기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방식 다각화를 통한 전력난 해소 추진
- 케냐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전력 보급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이자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가임.
  - 2012년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력발전 비중\*이 높았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현상의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케냐 정부는 이를 탈피하고자 발전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함.

\*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 비중: 50%('12) → 30.5%('18) → 29.4%('20) → 2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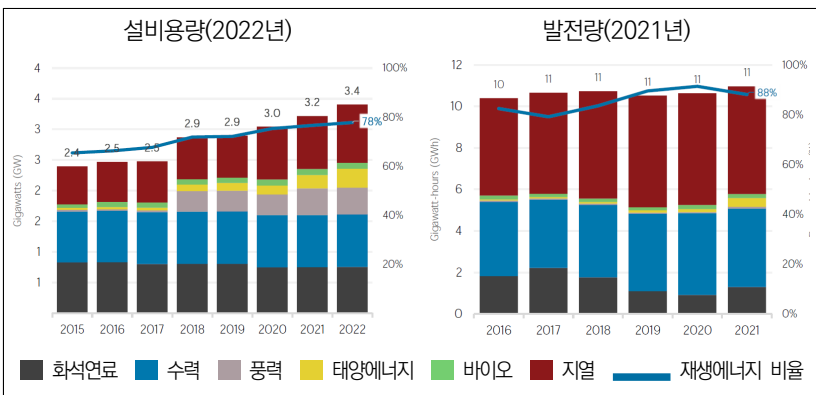
- 정부는 2008년 발표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0'의 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에서 전력 산업을 필수 기간산업으로 지정, 전력 산업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선 건설, 재생에너지 자원 파악 및 자원 지도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그 결과 케냐의 2021년 기준 인구 대비 전력 보급률은 77%로 전년 대비 5%p 이상 증가했으며, 5년 전인 2017년 약 56%와 비교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 및 에너지 보급률 100% 달성, 국가 온실가스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 3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케냐는 지리적으로 지열,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함.
  - 지열의 경우 동아프리카 열곡대(East African Rift System: EARS)<sup>1)</sup>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상당한 발전 잠재력(15GW로 추산)을 보유함.
  - 2021년 케냐의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863MW('23년 974.7MWf)로 아프리카 1위, 세계 8위 수준이며, 케냐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47%를 차지함. 케냐는 2030년까지 지열발전 설비용량을 5GW로

1) EARS는 동부 열곡대(eastern branch)와 서부 열곡대(western branch)로 구성됨. 동부 열곡대는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지부티,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북부를 관통하고 발전에 적합한 고온인 것이 특징이며, 서부 열곡대는 부룬디,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서부, 말라위, 모잠비크, 북부 잠비아를 관통하고 그린하우스, 난방, 농산물 건조 등 직접 이용에 적합한 것이 특징임.

증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세계 4위 지열에너지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케냐는 풍력에너지 개발 잠재력도 높은 편으로, 국토의 73%가 풍속이 초속 6m/s 이상이며(지상으로부터 100m 높이 기준) 특히 북부의 Turkana 호수 주변 지역은 8.0m/s를 초과함. 이러한 입지조건에 힘입어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풍력 프로젝트인 발전용량 310MW급 Turkana 풍력발전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동 발전소는 연간 1,400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연간 16백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수준임.
- 케냐는 총발전량 및 발전설비 용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열 등 비수력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2021년 기준 총발전량(10,965GWh) 중 화석연료(1,301GWh)는 12%, 재생에너지(9,663GWh)는 88%를 차지하였으며, 총발전설비 용량(3,697.7MW)의 경우 2022년 기준 화석연료(813.5MW)는 22%, 재생에너지(2,884.2MW)는 78%를 차지함(그림 8 참고).

[그림 8] 케냐의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율(%)



자료: IRENA.

-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에너지 전환 인덱스(ETI)에 따르면, 케냐의 ETI 점수는 57.8점으로 전체 120개국 중 46위, 아프리카 국가 중 1위를 차지함.
- 현재 다수의 지열 및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프로젝트가 계획 중 혹은 건설 중으로, 향후 지속해서 동아프리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하며 에너지 공급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3. 정책성과

- 루토 대통령, 상향식(Bottom-Up) 경제 전환 아젠다 추진 중
- 루토 대통령은 기존 정부 주도의 산업 및 경제개발 모델인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이 아닌 케냐 국민의 소득 증대를 우선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인 상향식 경제 전환 아젠다(Bottom-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 BETA)를 제시함.
- BETA는 비공식 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으로, 모든 사람이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함.
- BETA의 5대 핵심 분야는 농업, 중소기업(MSME) 경제, 주택 공급, 보건·의료,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digital superhighway) 및 창조경제로 구성됨.
  - 1) 농업: 동 아젠다의 최우선 과제로 농부들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투입물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 2) 중소기업 경제: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에게 자금, 교육, 시장 접근 제공
  - 3)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자가보유율 확대

- 4) 보건·의료: 모든 케냐인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프로그램(UHC) 확대
- 5)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창조경제: 자동 VAT 시스템을 통한 세수 개선,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접근(전국단위), 정부 서비스의 80% 온라인 제공, 통화 및 데이터 비용 감소 등
- 2023년 3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iExim Bank)은 케냐 정부의 하향식 경제 전환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제공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천억 케냐 실링을 제공한다.
- \* 3년간 케냐 정부의 우선 사업인 핵심 상품 생산, 물 수확(water harvesting), 농업 역량 강화, 산업단지 건설,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 2023년 9월 케냐 정부는 케냐에서 활동 중인 모든 NGO와 PBO (Public Benefits Organisation)에게 루토 대통령의 상향식 경제 전환 어젠다와 연계된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함.

#### ■ 우후루 전 행정부의 Vision 2030을 계승하여 추진 중

- 2008년 초 케냐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과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성장전략 ‘Vision 2030’<sup>2)</sup>을 발표, 이를 위해 제1차 중기계획(MTP-I, 2008~12년)과 제2차 중기계획(MTP-II, 2013~17년), 제3차 중기계획(MTP-III, 2018~22년)에 이어 제4차 중기계획(MTP-IV, 2023~27년)을 추진 중임.
- 제3차 중기계획은 주요 분야인 인프라 개발, ICT 육성, 과학·기술·혁신(STI) 촉진, 토지 개혁, 공공분야 개혁, 노동·고용 창출 등을

2) Vision 2030은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2012년부터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 달성, 사회적으로는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한 사회 발전을 통한 공정하고 화합하는 사회 실현, 정치적으로는 인권을 보장하고 일·결과 중심의 정치기반을 통한 민주적인 정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이러한 목표 아래 10대 주요 과제로 거시경제 안정, 거버넌스 개혁, 소득 불평등 개선 및 빈곤층의 부 창출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에너지 개선, 과학·기술·혁신 강화, 토지개혁, 인적자원 개발, 치안 강화, 공공분야 개혁을, 6대 육성 분야로 관광업, 농축산업, 무역, 제조업, 금융, IT를 선정하였음.

포함한 9대 주요 분야의 육성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의 여파로 2022년까지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표 2 참고).

[표 2] 2022년 제3차 중기계획 목표 및 실제 성과

항목	제3차 중기계획 목표(2022년)	2022년 실제 수치
경제성장률	7.0%	4.8%
물가상승률	<5.0%	7.7%
총수출/GDP	19.6%	12.2%
국내총투자/GDP	25.4%	19.2%
공적채무/GDP	42.0%	64.2%

- 이번 제4차 중기계획(MTP-IV)은 상향식 경제전환 아젠다(BETA)와 연계된 핵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제3차와 비교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로 설정함.
  - MTP-IV의 핵심 분야는 BETA의 5대 핵심 분야와 동일한 ①농업, ②중소기업(MSME) 경제, ③주택 공급, ④보건의료, ⑤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창조경제로 구성됨.
  - 주요 목표는 ①연간 물가상승률 5% 미만 달성을 통한 생활비 감소, ②굶주림 타파, ③연간 120만 개의 고용 창출, ④세수 기반 확대(2027/28년까지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18.3% 목표), ⑤수출 촉진을 통한 외화 보유량 개선(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6.1개월분 목표(현재 3.7개월분)), ⑥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성장 달성임.
- 한편, 케냐 정부는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제4차 중기계획과 더불어 전 정부의 핵심 5개년 개발 사업인 4대 국정과제(Big 4)\*를 계승하여 추진 중임.

\* 2018~22년 간 ①제조업 활성화, ②서민주택 공급, ③보건·의료 향상, ④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선정하여 추진

- 루토 정부는 기존 4대 국정과제에 디지털 혁신을 추가하고, 제조업 활성화 분야를 창조경제 육성으로 확대하여 5대 중점 분야 육성으로 5개년 사업을 개편함.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022년 9월 5대 대통령으로 윌리엄 루토 대통령 취임
  - 2022년 8월 실시된 대선에서 윌리엄 루토 전(前) 부통령이 50.5%를 득표하며 48.9%를 득표한 라일라 오딩가 전 총리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되었으나, 예년과 달리 부족 간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됨.
  - 키쿠유족인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 후보(칼렌진족)가 아닌, 수년 간 정적 관계에 있던 오딩가 후보(루오족)를 지지하면서 치열한 선거가 치러짐.
  - 선거 결과 발표 전 7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등 4명이 대선 결과의 불투명함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오딩가 후보 역시 패배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정 공방 끝에 선관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했으며 루토 후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을 선언하였고,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루토 대통령은 9월에 취임함.
- 야당연합(Azimio) 대표인 라일라 오딩가의 주도로 대규모 시위 발생
  - 2023년 3월부터 야당연합(Azimio)의 주도로 2022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고물가, 세금 인상 등을 이유로 매주 두 차례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개최하였고, 3~7월 사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2023년 7월 여당은 야당과 국가대화위원회(National Dialogue Committee, NDC)를 구성, 이견을 해소하고 관련 헌법 및 법률 개혁을 시행할 것에 합의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중단됨.
  - 그러나 루토 대통령이 국고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재정법(Finance Act 2023)\*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Azimio의 주도로 동 법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함.
- \* 주요 내용: 연료에 대한 부가세율을 현 8%에서 16%로 2배 인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기본급의 1.5%(최대 월 5천 실링)를 주택기금으로 납부
- 7월 19일에 발생한 시위에서 케냐 경찰의 최루탄 발포로 6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야권 인사를 포함한 시민 300명 이상이 체포됨.
  - 6월 30일 케냐 고등법원에서 일부 조항의 합헌 여부 판결을 위해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한 달 뒤 해당 조항 개정 후 동 명령이 해제되었으며, 이후 9월 야당 인사들은 효력 정지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으나 대법원에 의해 기각됨.
  - 2023년 12월 Azimio의 오딩가 대표는 국민의 생활고 악화에 유감을 표하며, 재정법을 포함한 각종 세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정부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앞서 루토 대통령은 2022년 9월 취임 후 식품, 연료 및 전기 보조금을 폐지하였고 이에 생활비 인하 등 대선 캠페인 당시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품 및 연료 가격을 높여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한다는 비난을 받음.

## 2. 사회안정

### ■ 소말리아 테러 조직 알샤바브(Al-Shabaab)에 의한 테러 위험 상존

-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샤바브(Al-Shabaab)를 축출하기 위해 조직된 아프리카연합(AU)의 소말리아 평화유지군(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에 케냐 정부가 2011년 10월 군 병력을 파병한 이후 알샤바브는 케냐를 주요 공격 대상국으로 지정, 급조 폭발물에 의한 무차별 테러 공격을 자행하여 케냐의 치안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업·물류업 등 서비스업 위축, 외국인투자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 주요 사건: '13년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테러(67명 사망), '15년 모리 대학교 가리사 캠퍼스 테러(148명 사망), '19년 나이로비 호텔 테러(10명 이상 사망), 케냐-소말리아 국경 인근 북동부 지역 도로 폭탄 매설 테러(10명 이상 사망), '22년 Lamu 지역 테러(6명 사망)

- 최근 소말리아 접경 지역인 케냐 북동부(Mandera, Wajir, Garissa)와 동부(Lamu) 지역에서 테러 공격\*이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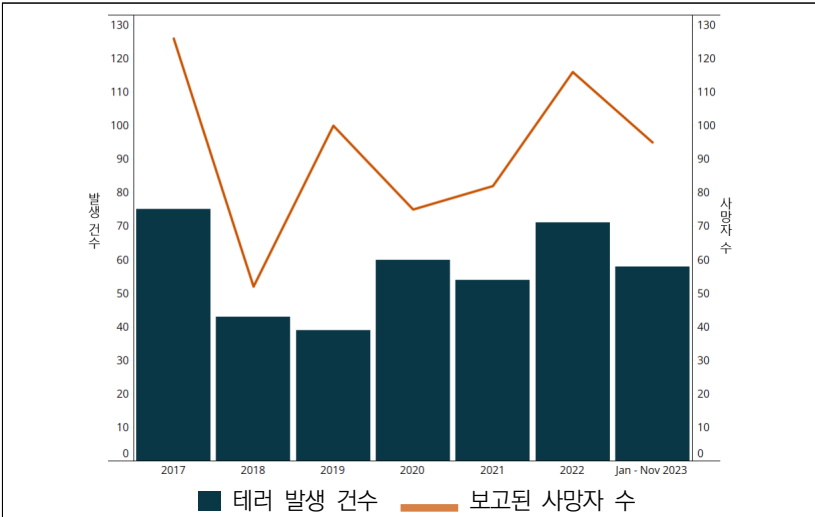
- 2023년 6월부터 알샤바브가 주로 활동하는 4개 주(Mandera, Wajir, Garissa, Lamu)에서 케냐 보안군과 민간인을 타겟으로 한 알샤바브의 공격이 크게 증가했으며, 6~8월 사이 발생한 테러 중 절반 이상이 Mandera 주에서 발생함.

\* 최근 주요 사건: '23.6월 Lamu 지역 2개의 마을을 급습하여 민간인 5명을 참수 및 칼로 살해, Garissa 지역 도로에 매설된 급조폭발물(IED)의 폭발 및 총격으로 총 10명(군인 4명과 예비군 6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 발생, '23.7월 Mandera 지역에서 발생한 알샤바브와의 교전으로 케냐 군인 6명 사망 및 다수의 부상자 발생

-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하는 2022년 글로벌테러지수(GTI)에 따르면 케냐는 총 163개국 중 20위, 동아프리카 국가 중 2위(1위 소말리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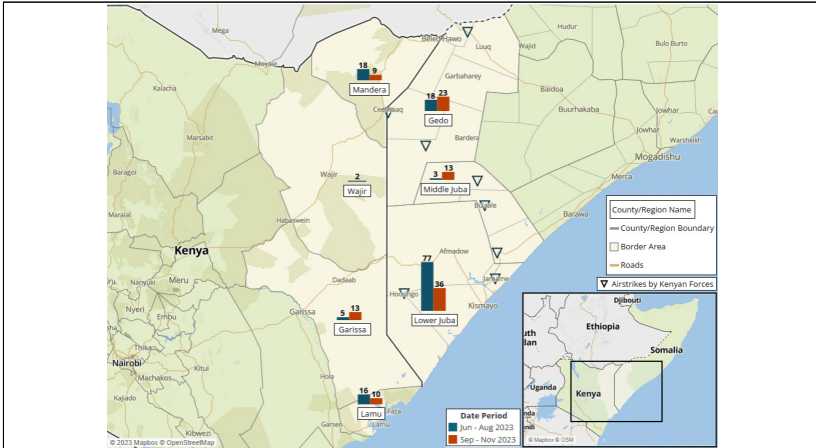
- 2022년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테러 발생이 증가하면서 알샤바브에 의한 테러 사망자 수는 43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함.

[그림 9] 민간인 대상으로 케냐-소말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알샤바브 활동 ('17.1~'23.11월)



자료: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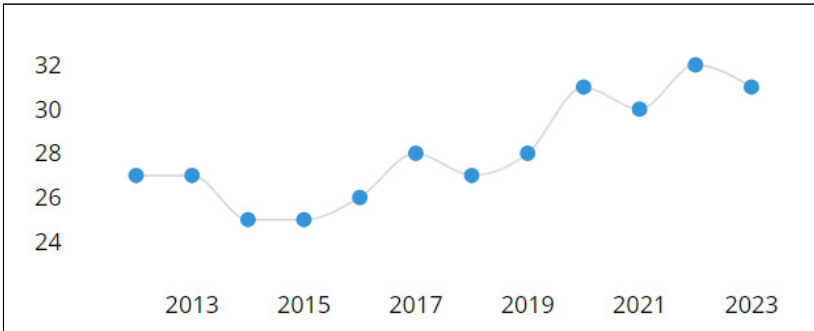
[그림 10] 케냐-소말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알사바브 활동('23.6~12월)



자료: The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ACLED)

- 202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3계단 하락한 126위 기록
-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케냐는 31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26위를 기록하였음. 이는 2022년 123위보다 3단계 하락한 결과로, 루토 행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케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점수 및 순위가 하락한 국가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케냐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요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음.
- \* EAC 회원국들의 2023년 부패인식지수: 르완다(53점, 49위), 탄자니아(40점, 87위), 우간다(26점, 141위), 콩고민주공화국(20점, 162위), 부룬디(20점, 162위), 남수단(13점, 177위)
- 루토 신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관료들의 극심한 부정부패가 공공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부패 혐의 발견 시 즉시 기소 및 처벌하고 있음.

[그림 11] 케냐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추이(2013~23년)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 3. 국제관계

#### ■ 동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내 선도적 역할 수행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맹주국으로서 아프리카 역내 지역통합을 중시하여 지역공동체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케냐는 현재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AfCFTA) 회원국임.
- EAC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의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동맹과 단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역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이 자유로움. 현재 단일통화 도입을 추진 중으로 당초 2024년으로 계획되었으나 2031년으로 연기됨.
- AfCFTA는 2012년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창설된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30일 공식 발효,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함.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4년 1월 기준 케냐를 포함한 47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 AfC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시범운영(Guided Trade Initiative)을 출범하여 운영 중으로, 현재 케냐를 포함한 7개국이 참여 중이며 올해 31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 ■ 서방 및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

- 케냐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전통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왔음.
- 케냐타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C)의 기소<sup>3)</sup> 등으로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이후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국가 순방, AGOA 연장<sup>4)</sup>, Power Africa Initiative(전력·인프라 친환경 에너지사업) 참여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현재 동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3월, 케냐는 영국과 영국산 상품에 대한 영구 면세, 민감품목 보호의 점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영국 수출기업들은 평균세율이 25%에 달하는 케냐의 수입관세 적용에서 면제되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2월에는 EU와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이로 인해 케냐는 EU 시장(케냐 총수출의 21% 차지)에서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EU 상품은 케냐 시장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됨.

3)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놓고 발생한 종족 간 유혈사태 배후를 주도한 혐의로 케냐타 전 대통령이 ICC에 기소되었으나, ICC 공소가 2014년 12월 철회됨.

4)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 시장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특혜무역조치임. 2000년 첫 시행 후 현재 2025년 까지 시효가 연장됨.

- 현재 미국과 전략적 무역 투자 파트너십(STIP)을 추진 중으로, 당초 2023년 12월 협상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연기 후 올해 1분기 중 협상이 재개될 예정임. 기존 AGOA가 2025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 정책으로서 동 파트너십을 추진함.
- 한편, 중국은 케냐의 최대 수입상대국(2020년 기준 상품수입의 21.9%)으로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으며,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로 인프라 투자에 따른 대중국 채무액이 큼.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나 연체액이 증가 추세
  - 케냐는 1994년, 2000년, 2004년, 2021년의 네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을 실시함. 파리클럽의 최신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케냐의 파리클럽 회원국 및 관련 기관 앞에 대한 채무잔액은 총 3,023백만 달러로, ODA 채무잔액은 2,768백만 달러이며 그 외 채무잔액은 255백만 달러임.
  - 202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832.1백만 달러(단기 293.9백만 달러, 중장기 1,538.2백만 달러)이며, 현재 잔액의 약 3%에 해당하는 58.6백만 달러를 연체\* 중임.
- \* 연체액(백만 달러): 10.0('20.9월) → 30.7('21.9월) → 38.6('22.9월) → 58.6('23.9월)
- 2022년 5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 채무연장(리스케줄링)이 없는 점, IMF 및 World Bank에 대한 외채의

연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보이고 있음.

- IMF는 외환보유액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2년 중 케냐에 대해 총 6.82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으며(7월 2.35억 달러, 12월 4.47억 달러), 2024년 6월 예정인 20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만기 도래에 대비하여 2024년 1월 EFF/ECF 협정에 따라 9.412억 달러의 대출 증액을 승인, 이 중 6.245억 달러의 즉시 지급을 결정함.
- 한편, 중국은 세계은행에 이어 케냐의 두 번째로 큰 대외 채권자이며, 지난 10년간 중국으로부터 대출한 자금은 케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됨.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3.06)	7등급 (2022.07)
Moody's	B3 (2023.07)	B3 (2023.05)
Fitch	B (2023.07)	B (2022.12)

- Moody's는 케냐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 OECD는 2022년 6월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의존도 증가, 대선 전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등을 감안하여 케냐의 국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3년 5월 정부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국채 수요 약화 등에 따른 자금 조달 상황의 악화를 근거로 월 케냐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2 → B3) 조정함.



- Fitch는 2022년 12월 쌍둥이 적자의 지속과 높은 부채 수준, 대외유동성 악화, 높은 외부자금 조달 비용 등을 근거로 케냐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 → B) 조정함.

## VI. 종합의견

- 2023년 케냐 경제는 농업 및 관광 분야의 회복과 민간소비 활성화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케냐는 쌍둥이 적자,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및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공공부채 및 외채 규모가 큰 편으로, 루토 행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보조금 폐지 및 재정부 제정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 낭비적 정부지출 억제를 통하여 채무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조업을 육성 중이며 특별경제구역 등을 활용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유틸리티 등 기본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특히 2023년 전국적 규모로 3차례 발생한 정전 사태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 2023년 고물가, 세금 인상 및 세제 도입으로 인한 생활고 악화를 이유로 장기간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2022년 대선 이후 2023년까지 알샤바브에 의한 테러 공격이 크게 증가함.
- Moody's는 정부의 자금 조달 상황 악화를 근거로 케냐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B2 → B3) 조정하였음.

##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박지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 - 목 차 -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1,564천 km <sup>2</sup>	351만 명 (2023 <sup>e</sup> )	의원집정부제	친서방 실리외교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187.8억 달러 (2023 <sup>e</sup> )	5,348달러 (2023 <sup>e</sup> )	Tugrik	3,465.74 (2023 <sup>e</sup> )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51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GDP의 20% 이상 및 총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음. 다만, 3C(China, Copper, Coal)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의존도가 높아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기 변동성이 높음.
- 중국, 러시아에 치중된 정치·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 프랑스와 교역하는 등 외교·경제 다각화를 노력 중임.
-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GoMongolia’ 슬로건 채택, 인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최초의 정유공장 건설, 완료 시 세계 우라늄 생산의 4%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라늄 광산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수교)
-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91), 무역협정('91), 경제·과학·기술협정('91), 문화협정('91), 항공업무협정('91),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1),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약('93), 세관협정('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6), 에너지·광물자원협정('99), 범죄인 인도조약('00), 형사사법공조조약('00), 관광협정('04), 사회보장협정('07), 수형자이송조약('08), 민사·상사사법공조 조약('10), 사증발급간소화협정('12),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3), 기후변화협정('23)

### [ 교역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 출	384,715	426,344	476,439	자동차, 기호식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수 입	24,949	38,240	62,790	기타금속광물, 의류, 금은 및 백금

-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35건, 607,722천 달러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6	-4.6	1.6	5.0	5.5
소비자물가상승률	7.3	3.7	7.4	15.2	12.3
재정수지/GDP	1.0	-9.2	-3.0	0.7	-0.7

자료: IMF, EIU

- 광물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관광업 활성화로 2022~23년 연속 5%대 경제성장 추정
  - 몽골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무역 감소, 특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2020년 -4.6%의 역성장을 기록함. 이후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오유 톨고이 광산 채굴 개시 등에 힘입어 2022년 5.0%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 하였으며, 2023년에는 수출 성장세 지속과 임금 인상 및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5.5%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몽골 통계청의 2023년 GDP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DP에서 광업의 비중은 5.2%p 증가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2.8%p, 0.9%p 감소해 몽골 경제의 광업 의존도가 증가함. 산업별 GDP 성장기여도는 전년 대비 광업이 2.58%p, 운송업이 1.77%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4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서 합의된 몽골의 국제 화물량은 전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한 2,169만 톤임.
  - 2023년 관광업은 광업을 제외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발생시킨 유일한 산업으로, 2023년 입국 관광객 수는 2022년 대비

2.1배 증가한 59만 4,103명임. 몽골 방문의 해(2023~25년) 선포, 무비자 입국 대상국 확대(34개국 → 61개국), 2024년 2분기 발효 예정인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 등에 힘입어 관광업 활성화가 몽골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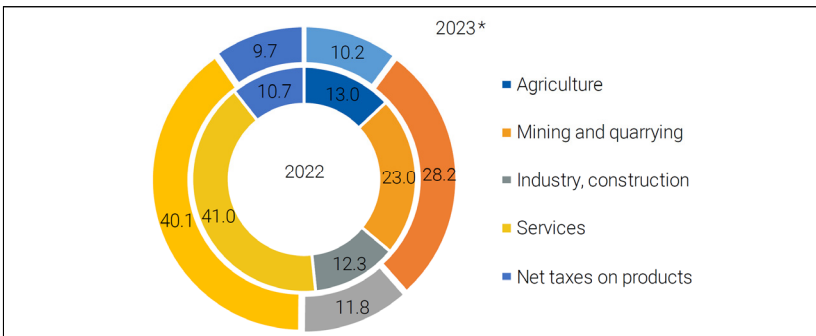
\* 관광객 : 183일 내 범위에서 취업 이외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환경이 아닌 장소를 여행 또는 체류하는 사람

[그림 1] 2018년 이후 몽골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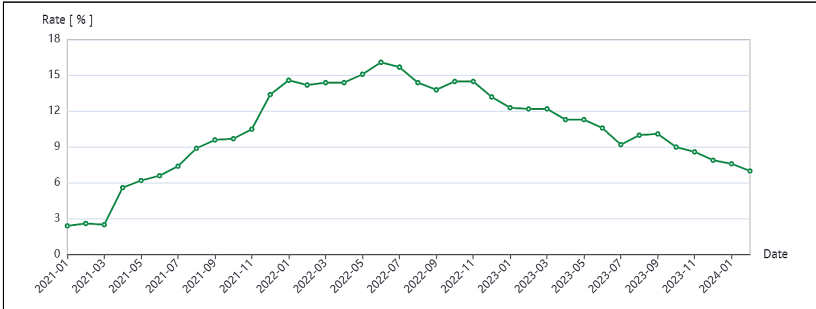
[그림 2] 2023년 몽골 GDP 구성비(%)



자료: 몽골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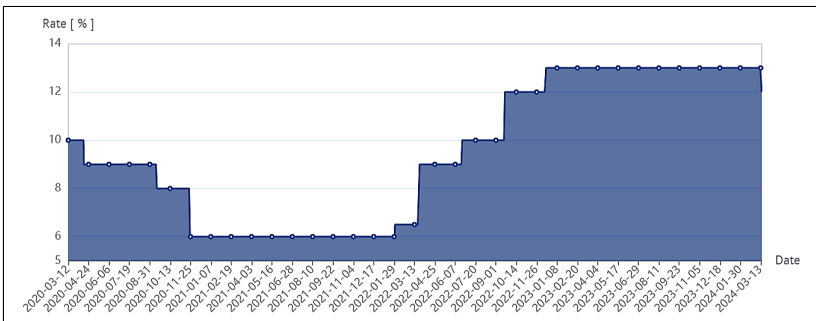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압력은 2024년에도 완화되겠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상회할 전망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15.2%)보다 2.9%p 낮아진 12.3%로 추정되며, 2024년에도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낮아질 것이나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범위(4~8%)를 상회할 전망이다.
- 주요 무역거점인 Zamiin-Uud 내륙항(중국과의 국경에 위치)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폐쇄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이 감소하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초 2% 수준에서 동년 말 11%로 급등하고(연평균 7.4%), 생활 소비재 부족 등으로 2022년 6월(16.9%)까지 상승 후 하락세로 접어들. 2023년 6월 추가경정 예산 통과 후 9월(10.1%)에 다소 반등하여,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3%로 추정됨(IMF).
-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상품가격 안정화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EIU는 이를 반영해 2024년 몽골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0%에서 7.8%로 수정함. 다만 2024년의 확대 예산, 석유가격 급등, 몽골 내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함.
- 2020년 몽골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11% → 6%),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로 기준금리를 인상해(6.5% → 13%)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했음. 2024년 3월 15일 몽골 중앙은행은 중기적 자금조달 여건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p 낮춘 12.0%로 결정함.

[그림 3] 몽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몽골 중앙은행

[그림 4] 몽골 정책금리 변화 추이(%)



\* 2020년 초 정책금리: 11%

- 2024년 재정수지는 확대 예산 편성으로 인해 GDP 대비 -2% 이상 적자 전망
- 2020~21년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인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의 축소로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7%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위한 자본재 지출 증가(2022년 대비 24.5%),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공공분야 임금·연금 인상으로 등의 요인으로 재정수지가 다시 GDP 대비 -0.7%의 적자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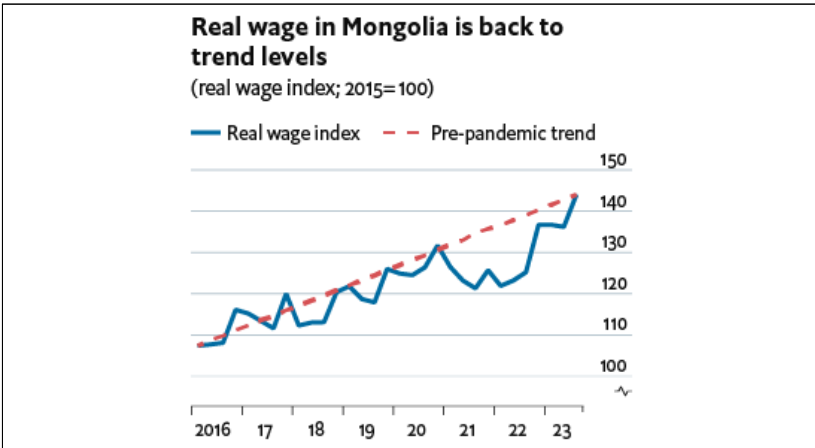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수입은 약 24조 3,100억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으며, 광업 부문의 로열티 및 부가가치세 수취는 재정수입의 중요 원천임. 2024년 확대 예산 편성은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할 전망이며, 중국 경기 침체, 공공 부문 임금 인상, 연금 혜택 증가, 값비싼 자본재 수입은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함. 한편, 몽골 정부는 2024년 경제지표를 경제성장률 7%, 소비자물가상승률 8.5%, GDP 대비 -2%의 재정수지 적자로 전망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 소득수준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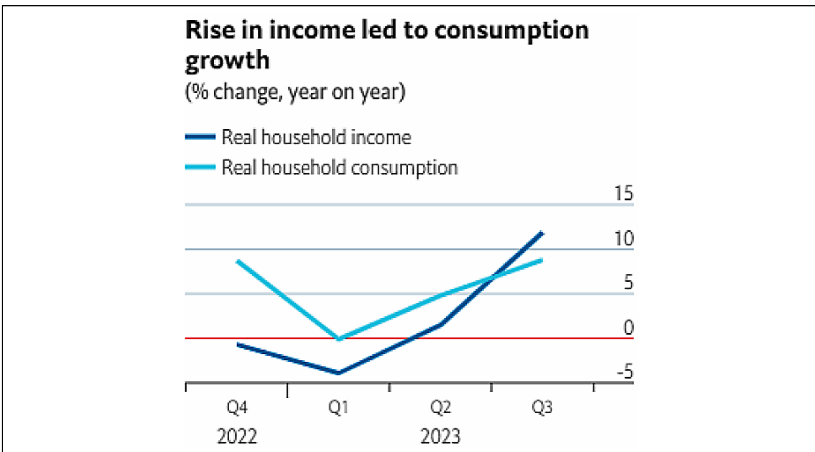
- 2024년 몽골의 월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0% 상승한 66만 투그릭이며, 2023년 6월 통과된 공공 부문 급여 인상(3~40%) 추가경정 예산,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급여·연금 상승 등으로 소득수준 개선이 이루어짐. 몽골의 실질임금은 팬데믹 이전의 추세 수준을 회복했으며, 민간소비 증가는 수출 성장세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 부문 근로자는 몽골 고용인구의 약 25%를 차지하여,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023년 3분기 가계소비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1.3%,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51.6% 증가함. 2024년에도 소득세를 통한 추가적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몽골 실질임금 추이



출처: 몽골 통계청,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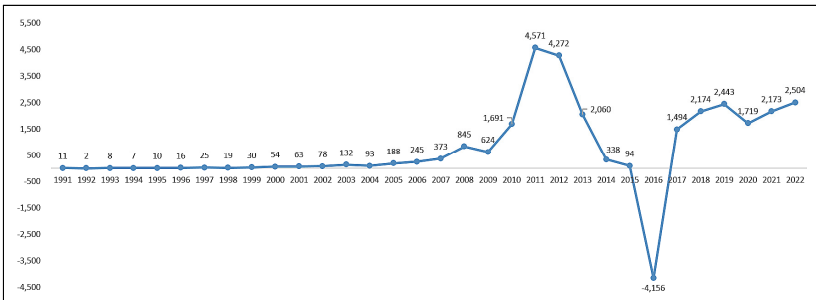
[그림 6] 몽골의 소비 증가 현황



출처: 몽골 통계청, EIU

- UNCTAD에 따르면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곧바로 반등하여 2023년 25억 달러를 기록함. 몽골 통계청은 2010~23년까지의 FDI 총 누적 금액(305억 8,700만 달러) 중 광업 부문 비중을 70.5%로 분석하며, 비광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몽골 정부가 제출한 투자법 개정안이 2023년 보류되었으나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투자법 개정안은 ①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소 투자요건(10만 달러) 삭제, ②투자자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③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함.

[그림 7] 1991~2022년 몽골의 FDI 유입 추이



자료: UNCTAD

## 2. 대외거래

### [ 주요 대외거래 지표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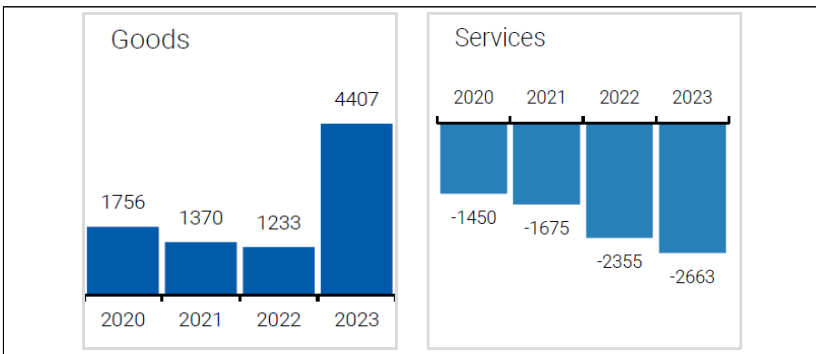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2,162	-675	-2,108	-2,303	245
경상수지/GDP	-15.2	-5.1	-13.8	-13.4	1.3
상품수지	1,158	1,756	1,370	1,233	4,407
상품수출	7,183	6,991	8,136	9,854	13,892
상품수입	6,025	5,235	6,766	8,622	9,485
외환보유액	3,182	3,995	3,671	2,890	4,272
총외채	31,650	32,360	33,940	33,480	38,100
총외채잔액/GDP	222.8	243.1	222.0	195.3	202.9
D.S.R.	42.0	65.5	35.0	36.9	50.9

자료: IMF, EIU

- 광물 수출세 유지와 관광업 회복세 전환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 기대
  -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26.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257.5%) 경상수지는 GDP의 1.3%에 해당하는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Gashuun Sukhait와 Zamiin-Uud 국경을 통한 수출은 각각 전체 수출액의 45.4%, 22.2%를 차지하며 2022년 9월 개통된 타왕 톨고이 탄광-Gashuun Sukhait 연결 철도는 2023년 대 중국 석탄 5,000만 톤 수출에 기여함.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 및 수입 석탄 무관세 정책, 중국 철강업체 마진 축소에 따라 러시아산과 호주산에 비해 값싼 몽골산 석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서비스수출은 전년 대비 477.6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 중 관광업 부문의 증가액은 292.9백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4년에도 관광업 부문의 서비스수지 개선 기여도가 클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2020~23년 몽골 상품수지, 서비스수지(백만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표 1] 몽골 관광객 수 추이

년도	관광객 수(명)	증감율(YOY, %)
2023	594,013	107.5
2023.4분기	107,825	43.3
2023.3분기	259,340	88.8
2023.2분기	148,792	142.2
2023.1분기	78,056	537.9

- 몽골 정부는 2023~25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법 개정안 마련, 몽골-미국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2024년 발효 예정) 등 관광업 활성화 및 지정학적 취약성 보완을 도모함. 2023년 비자 발급건수는 4만 4,831건이며, 전자비자 발급건수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3만 1,242건임. 다만, 전체 입국 관광객 중 러시아, 한국, 중국 관광객 비중이 약 77.6%에 달하고, 러시아 봉쇄에 따른 서구권 관광객의 입국 한계로 인해 상품수지 대비 서비스수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체결한 항공자유화 협정은 몽골-미국 직항 노선 개설, 항공편 개설 단순 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몽골-헝가리 항공서비스에 관한 협정(2024.3월 체결)으로 몽골-헝가리 직항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동유럽국 관광객의 몽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 철도노선 및 내륙항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처리능력 향상

- 광산-시장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에서는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몽골 중부를 통과하는 몽골 횡단 철로와 러시아 국경에서 Choibalsan 까지 이어진 철로를 연결하는 것이 단기적 우선순위임. 해당 프로젝트 완료시 몽골 주요 도시와 광산이 중국 북동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몽골 정부는 내륙항<sup>1)</sup> 추가 건설을 통해 물류 처리능력 향상 및 운송비용 절감으로 물류 병목현상을 완화코자 함.

\* WB LPI(물류생산성지수) 순위: 135위('14) → 109위('16) → 130위('18) → 97위('23)

-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 'Vision 2050'의 첫 단계인 '신부흥정책'에 따라 2022년 9월 타반톨고이 광산-가송소하이트 철도노선이 개통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준바얀-항기, 2023년 2월에 준바얀-타반톨고이 광산의 신호·통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 약 900km의 철도 인프라 구축으로 고비 지역에 위치한 광산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 dry port. 내륙에 큰 강 또는 운하가 길게 뻗어 있어 역내 수상운항이 가능한 곳에 생성된 항구로, 수상운송 또는 육상운송과 수상운송 간 연계를 위해 축조됨. 항구의 위치에 따라 하항(河港), 상류항(上流港), 하구항(河口港), 호항(湖港) 등으로 분류됨.

[그림 9] 몽골 철로 및 내륙항 건설 예정도



자료: EIU

[그림 10] 2022년 이후 개통 철도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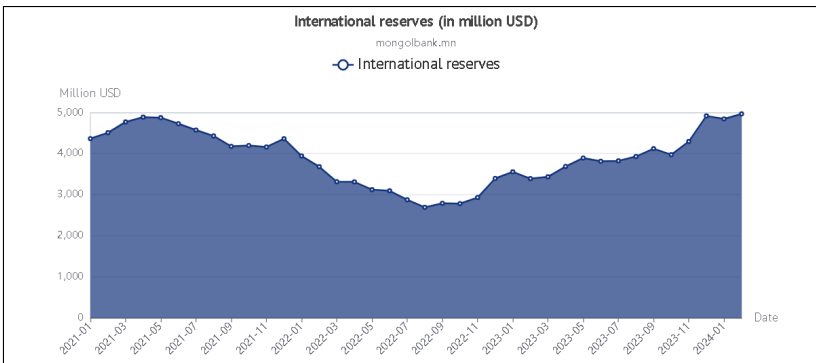


자료: Montsame

### 3. 외채상환능력

- 철도 인프라 개선, 수출 증가로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확보 기대
  - 중국의 리오프닝 및 몽골과의 국경 재개방으로 인한 수주 잔고 정리, 오유 톨고이 광산의 구리 채굴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 27억 달러에서 2024년 2월 50억 달러까지 반등함. 2022년 11월 개통한 길이 227km의 Zuunbayan-Khangai 철도 노선은 몽골의 새로운 수출입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지역개발 및 건설 지원의 해’ 선포에 따른 수송물량 증대로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확보가 기대됨.
  - 몽골 중앙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2021년 4월 49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8월 최저치인 27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22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광산업, 제조업 수출액 증가 추이 고려 시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 몽골 외환보유액 추이(2021.1월~2024.2월)



자료: 몽골 중앙은행



[표 2] 몽골 외환보유액 변동(매월 1일 기준)

년월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증감율(%)	
		전월대비	전년대비
2024-02	4,970.51	2.5	46.42
2023-12	4,921.47	14.47	44.77
2023-06	3,817.83	-2.03	23.26
2022-12	3,399.6	15.82	-22.14
2022-06	3,097.2	-0.93	-34.54
2021-12	4,366.1	4.82	-3.71
2021-06	4,731.8	-3.02	33.07

- 2024년 만기도래 국채의 성공적 차환으로 디폴트 위험 감소
  - 몽골 정부는 2023년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2029년 만기 도래)하고 국채 차환권을 행사해 2024년 만기 도래하는 3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음. 상환된 채권의 금리(8.75%)가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발행된 채권의 금리(7.875%)보다 높아, 정부의 공적채무이자지급액 부담이 다소 감소하였음. 한편, 몽골개발은행(DBM)은 2023년 10월, 12월에 만기 예정이었던 유로본드와 사무라이본드를 전액 상환하였음.
  - IMF에 따르면 몽골의 2023~28년 중 만기 도래 국채는 Gerege bond(5억 1,700만 달러), DBM Eurobond(5억 달러), DBM Samurai bond(300억 엔, 이상 2023년), Khuraldai bond(6억 달러, 2024년), Nomad bond(6억 달러, 2026년), Century Eurobond(5억 달러, 2027년), Century 2 bond(6억 5,000만 달러, 2028년)의 총 7건임.
  - 한편, Moody's는 DBM의 장기신용등급(LLC)을 B3(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독자신용등급(BCA)를 Caa2에서 Caa1으로 상향 조정함. DBM의 신용등급 유지,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만기도래 외채의 성공적인 차환이 가능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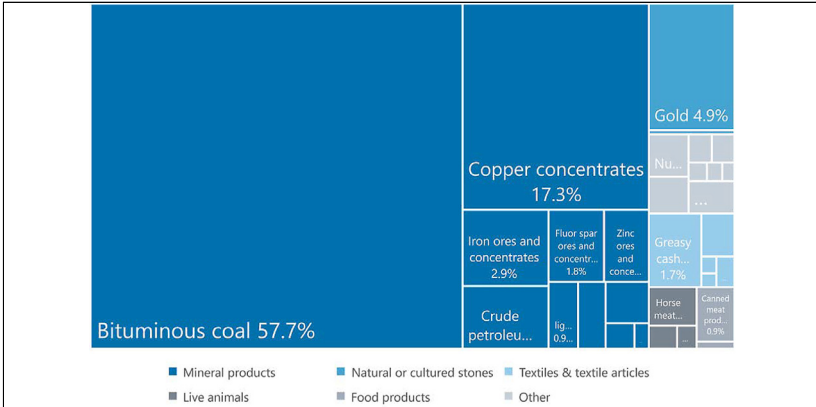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몽골은 내륙국의 특성상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음.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각국 수입 비중은 40.8%, 25.8%, 7.7%에 달함. 대 러시아 수입의 70.9%는 석유제품, 대 일본 수입의 75.3%는 자동차, 대 중국 수입의 9.2%는 트럭이 차지함.
  - 천연가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한편, 대외무역 관련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계 은행들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몽골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낮출 위험이 존재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서방의 러시아 제재 지속 등의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2023년 9월 몽골 의회 의장-러시아 하원 의장 회담, 2024년 2월 연료 수출 미규제 계약 초안 작성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광업에 치우친 경제구조의 다각화 필요
  - 202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수출 비중 1위, 2위는 각각 광석·금속(48.7%)과 원유(32.6%)로 단일산업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 몽골 통계청 또한 2023년 산업분석 리포트에서 광업 부문의 산출량 증가를 언급하며 2.5배 이상 증가한 석탄 및 갈탄 채굴량을 주요 원인으로 봄. 몽골 경제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및 주요 수입국의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중국 지방정부의 건축재정 기조는 몽골의 수출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몽골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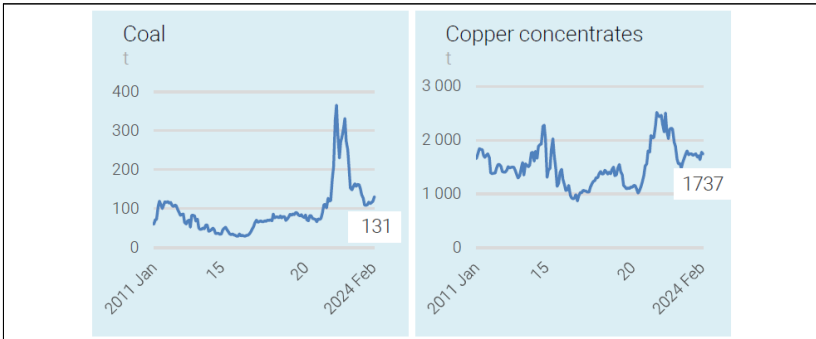
[그림 12] 몽골의 2023년 품목별 상품수출 비중



자료: 몽골 통계청

[그림 13] 몽골의 주요 수출광물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 2. 성장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자원 확보전에서 투자 매력도 증가
  - 몽골은 각각 세계 2위와 4위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와 석탄 외에도 약 80가지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 부국으로, 희토류 역시 전 세계 매장량 중 약 16%가 몽골에 매장되어 있음.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조 9,000억 투그릭으로, 금과 몰리브덴을 제외한 모든 주요 광물의 수출이 증가함.
  - 오유 톨고이 광산은 세계 최대의 구리 매장지 중 하나로 노천 채굴에 이어 2023년 3월 지하 광산 채굴이 개시됨. 노천광 및 지하 광산에서 2023~27년까지 연평균 35만 톤, 2028~36년까지 연평균 5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세계에서 4위 규모의 구리 광산이 될 전망이다.
  - ‘닥터 코퍼’(Dr. Copper)로 불리는 구리 가격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선행지표로,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 선물(3개월물) 가격이 US\$9,083/ton를 기록하는 등(2024.3.18)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경기 활성화 기대, 친환경 정책 강조로 구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며, ‘슈퍼 콘탱고’<sup>2)</sup> 현상이 발생해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주요 투자은행은 연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함.

\* 몽골 정부의 2024년 자원가격 전망: 구리 9,000달러/톤, 원유 85달러/배럴

2) super contango. 상품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현상. 일반적으로 슈퍼 콘탱고는 당장의 불안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 현물을 저장할 재고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선물계약에 반영되는 현물 저장비용이 급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2024년 4월 현재 구리 시장에서의 슈퍼 콘탱고는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미래에 더욱 심해져 구리 가격이 앞으로 몇 개월 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원인임.

- 몽골 정부는 2006년 광물법을 개정하여 광산을 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광산으로 분류하고 생산 규모가 GDP의 5% 이상인 주요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반드시 전략광산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법제화함. 핵심 광물을 둘러싼 국제 공급망 경쟁 심화로 몽골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몽골을 방문해 희토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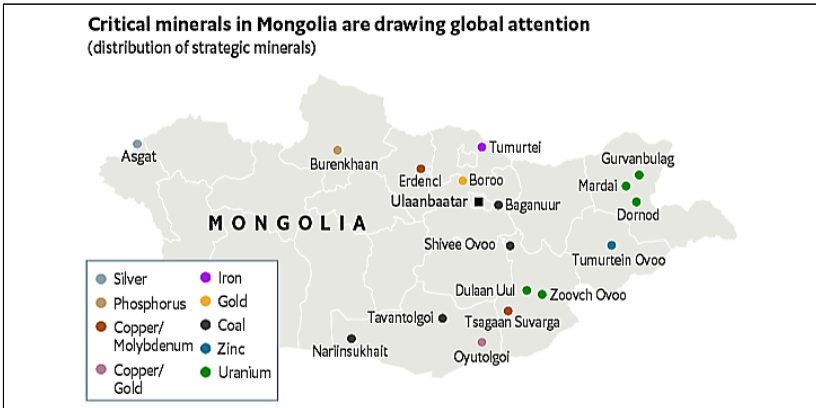
[표 3] 몽골의 2023년 주요 광물 채굴 및 수출 현황

	2023		<u>2023</u> <u>2022</u>	
	Extract	Export	Extract	Export
	thousand tonnes		percent	
Coal, mln.t	81.2	69.6	2.2**	2.2**
Crude oil, mln.barrels	4.9	4.7	90.6	81.5
Molybdenum concentrate	5.6	6.4	-4.6	-1.3
Gold, t	14.9	11.7	-23.4	-40.3
Iron ore, concentrate, mln.t	7.6	5.7	-18.7	20.7
Copper concentrate	1 395.3	1 524.8	17.3	4.9
Fluorspar concentrate	313.0	1 087.8	91.5	2.8**
Zinc concentrate	402.9	150.5	0.7	6.6

\*\*수출물량이 각각 2.2배, 2.8배 증가함

자료: 몽골 통계청

[그림 14] 몽골 핵심광물 분포도



자료: Mineral Resources Authority of Mongolia, Orano, EIU

### 3. 정책성과

- 장기 개발계획 ‘Vision 2050’ 및 중기 정책 ‘New Recovery Policy’ 수립
  - 2020년 몽골 정부는 인간·사회·환경이 고려된 장기 개발계획 ‘Vision 2050’을 발표함. 1992~2018년 기간 동안 추진된 517개의 국가개발정책을 분석해 9개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음. 10년 단위로 목표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GDP 중 제조가공업, 운송업 비중을 각각 2050년까지 27.4%, 11.6%로 확대할 계획임(2018년 기준 10.9%, 4.6%).
  - 2021년 12월 몽골 정부는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6가지 요인을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 정책인 新부흥정책을 수립함. ①국경 통관소 부흥, ②에너지 부흥, ③산업 부흥, ④도농 부흥, ⑤녹색개발 부흥, ⑥행정 생산성 부흥을 목표로 하며 평균

6%의 장기적 경제성장률, 65%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정책 효과로 기대함. 고비 사막 지역의 용수 접근성 개선 사업인 ‘Blue Horse’ 프로젝트, 철도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이 新부흥정책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8.7% 증가함.

[표 4] Vision 2050 장기 개발정책의 9개 목표

 <b>SHARED NATIONAL VALUES</b> 전 국민에 대한 ‘언어, 역사, 문화’ 교육 국민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유가치 개발	 <b>GOVERNANCE</b>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구축 공정한 정의 및 청렴한 국가 보장
 <b>HUMAN DEVELOPMENT</b>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0.9 달성 행복지수(Happiness Index) 상위 10개국 진입	 <b>GREEN DEVELOPMENT</b> 환경 친화적 녹색 개발 촉진 생태계 균형 유지 및 환경지속성 확보
 <b>THE QUALITY OF LIFE AND MIDDLE CLASS</b> 지속적 가계소득 증가 및 중산층 비중 80% 도달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b>SAFE AND SECURE SOCIETY</b> 국방력 강화, 인권·자유 보호, 재난위험 감소를 통한 인간 및 사회 안전 보장
 <b>ECONOMY</b> GDP 777억 달러, 1인당 GDP 15,000달러 달성 제조가공업, 운송업 비중 확대	 <b>REGIONAL AND LOCAL DEVELOPMENT</b> 안정적인 인구 정착 시스템 마련 지역균형발전
	 <b>ULANBAATAR AND SATELLITE CITIES</b> 사람 중심의 안락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시티 개발

자료: New Recovery Policy Accelerator, KOTRA

■ 2023년 정부 재정수입 증가 및 정부부채 감소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재정수입은 2019년 12조 투그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10.4조 투그릭으로 감소한 뒤 점차 회복되어 2023년 24.3조 투그릭을 기록함. 2022년 대비 부동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가율은 각각 67%, 51.6%, 21%이며 소득세의 경우 법인소득세 징수액 증가가 전체 소득세 징수액 증가를 전인하였음(전년 대비 법인소득세 징수액은 59.1%,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37.5% 증가). 광업 부문 로열티 및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수입은 2024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 2023년 정부부채는 30.8조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국내채무, 대외채무, 정부여신보증, 양허성 부채 중 대외채무만 전년 대비 2.4% 증가함. 한편, 총외채는 34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이는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제외), 직접투자(기업간 대출)의 대외채무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 중앙은행 외채는 각각 1.1%, 18.1% 감소함.

\* 2023년 일반정부 부채(단위: 십억 투그릭)

국내채무 234.1, 대외채무 30,319.5, 정부여신보증 30.9, 양허성 부채 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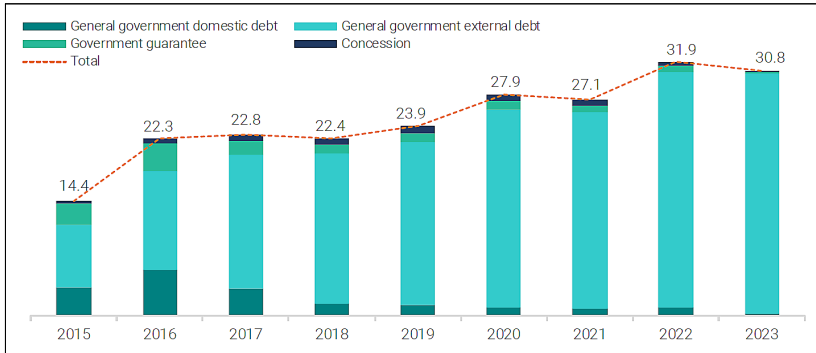
\* 2023년 총외채(단위: 십억 달러)

일반정부 7.9, 중앙은행 1.8,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제외) 1.7, 직접투자(기업간 대출) 14.8, 기타 8.3



[그림 15] 몽골 정부채무 변화 추이

(단위: 조 투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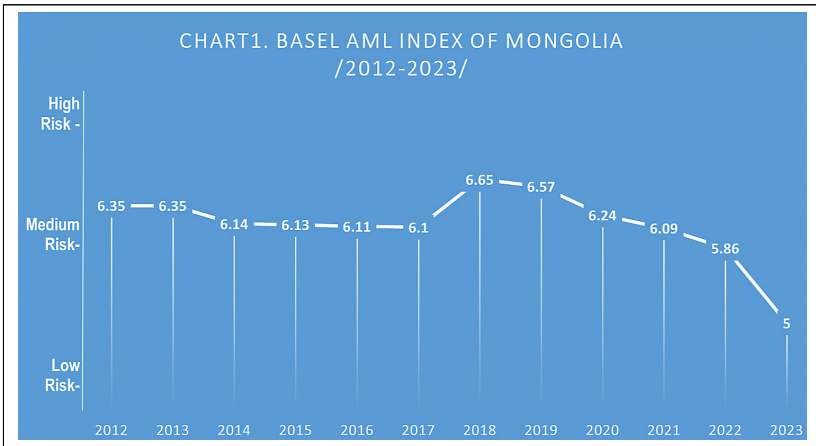
자료: 몽골 통계청

#### ■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정책 노력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Law on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부터 발효됨.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본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경쟁 촉진,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경제개발부는 원스톱 서비스, 승인 불필요, 투자자 권리 보장 등 대 몽골 투자 매력을 홍보하는 몽골 투자가이드를 발간했으며, 투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각각 2023년, 2024년 국회에 제출됨.
-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의 2023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몽골의 바젤 AML 지수는 5로 전년 대비 0.86 감소하였음(152개국 중 83위). 몽골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위험이 낮아졌으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술 권고사항 40개에서 모두 ‘준수’(compliant), ‘대부분 준수’(largely compliant)로 평가되는 등 2019년 FATF 그레이리스트 진입 당시(바젤 AML 지수 20위)와 비교해 개선이 이루어짐.

[그림 16] 몽골 바젤지수 추이



자료: 몽골 중앙은행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현 여당인 몽골인민당(PPP)의 2024년 총선 승리가 예상되나 의석 점유율 증가는 미지수
- 2020년 총선에서 76석 중 6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몽골 인민당(PPP)은 2024년 6월 28일 예정된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전 총리)과 룽상남스라이 어용에르텐 총리 모두 PPP 소속으로 정치적 교착위험이 낮고 총선 이후에도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기대됨. 다만, 국민의 정부신뢰 하락과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오는 6월의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는 불확실함.

- 국영 광산회사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의 경영진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22년 12월 울란바토르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일명 ‘석탄 마피아 스캔들’을 계기로 2023년 5월 헌법이 개정되어 의석은 76석에서 126석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78명은 다수대표제, 48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혼합선거제도가 도입됨.
- 8번의 총선(1992~2020년)에서 PPP가 6번, 민주당이 2번(1996년, 2012년) 승리했으며, 제3당의 원내진입은 거의 불가능함. 2012년 총선에서 76명 중 48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혼합선거제를 채택하였으나, 위헌 결정으로 도입이 보류되어 왔음. 국민의 약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의석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24석이 수도 지역 선거구에 할당되어 투표 가치의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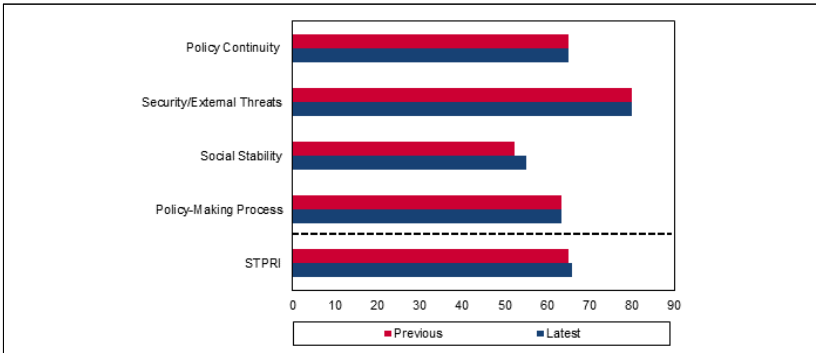
#### ■ 정치위험 감소와 선거제도 공고화

- FitchSolutions는 인플레이션 완화, 중국과의 관계 강화, 내수경기 회복을 고려해 몽골의 단기 정치위험 지수를 65.2점에서 65.8점으로 상향하고, 헌법 개정으로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울란바토르의 과소대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아 장기 정치위험 지수를 68.7점에서 69.1점으로 상향함(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낮음). 다만 2021년 대선 투표율은 59%에 불과해 국민의 정부신뢰 및 정치참여가 하락함.

- 몽골은 EIU가 발표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 6.48점을 받아 167개국 중 59위이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평가됨. 프리덤하우스는 2023년 몽골 국가리포트에서 선거법이 선거 직전에 빈번히 개정되나 전반적으로 공정하며 2021년 6월 대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GED)의 선거 관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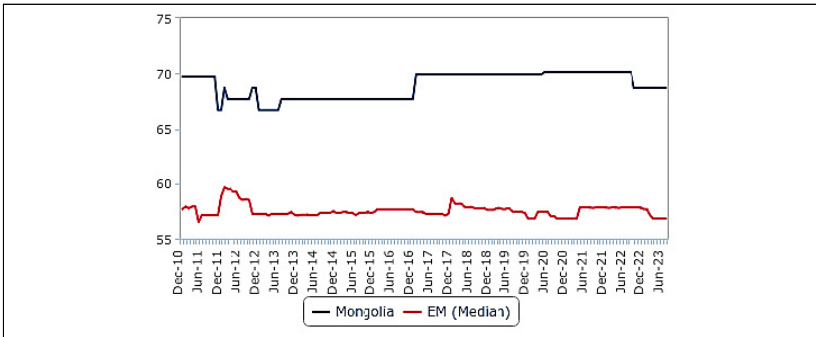
\* 민주주의 지수 추이: 6.50('19) → 6.48('20) → 6.42('21) → 6.35('22) → 6.48('23)

[그림 17] 2023년 몽골의 단기정치위험지수(STPRI)



자료: FitchSolutions

[그림 18] 2023년 몽골의 장기정치위험지수(LTPRI)



## 2. 사회안정

### ■ ‘석탄 마피아 스캔들’ 이후 반부패 노력 강화

- 2024년 1월 몽골 정부는 증권거래소(MSE)의 석탄 전자 거래 성과를 발표함. 2023년 석탄 거래량은 1,510만 톤, 거래금액은 7조 4천억 투그릭이었으며 등록된 석탄 매수기업 수는 전자거래 도입 직후 45개에서 발표 시점 244개로 증가함. 석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광산물거래소법(Law on Mining Products Exchange)에 따라 거래정보가 모두 공개됨.
- 몽골 정부는 2023~24년을 ‘부패 척결의 해’로 선포했으며, 2023년 4월 몽골 반부패청(IAAC)는 ‘5Sh’ 정책을 보완하는 2030 국가 전략을 공개함. ‘5Sh’ 정책은 고발 및 신고자 보호(Shugel), 청탁을 통한 불법이익 수취 근절(Shuur), 해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인도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Shuvuu), 투명성 강화(Shilen), 불법 자산 몰수(Shiljuulen avah)를 운영 방향으로 함.

\* 5W Operation: Whistleblowing, Wiping-out, Wasp, Wide-Open, Wealth

### ■ 조드, 사막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불안정 존재

- UN은 몽골의 조드(dzud)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으며, 2024년 2월 몽골 정부는 심각한 조드로 인해 5월 15일까지 대비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한국 정부는 2024년 3월 몽골 내 지속 중인 조드 피해 대응에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함.

\* 조드: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 폐사를 유발하는 자연재해

- 몽골의 사막화로 모래폭풍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캐시미어 직물 생산을 위한 염소 방목으로 황폐화가 가속됨. ADB,

몽골 정부, 녹색기후기금의 공동 자금으로 추진되는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인 ASDIP은 초원 보호와 녹색성장을 지원하며, 2024년 2월 유럽투자은행(EIB)은 5,440만 유로의 첫 번째 트랑셰(tranche) 계약에 서명함.

- Moody's는 몽골의 ESG Credit Impact Score에 대해 CIS-4로 평가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되며 하위 평가항목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구성됨. 몽골은 환경, 지배구조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ESG 신용영향점수는 4등급(Highly Negative)에 해당함.
  - (환경) 석탄 기반 경제, 도시화 진행으로 대기를 포함한 환경오염 정도가 높으며 탄소 전환위험에 취약함. 또한 광물 채굴, 과도한 방목, 삼림벌채 및 국토의 사막화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몽골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소득 불평등과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층 인구 비율(30세 미만 인구 비중 52% 이상) 간 균형이 성립하여 몽골의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구조개혁에 있어 허약한 집행기관과 낮은 정책효율성 문제가 존재함. 낮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 및 경기순응적 정책 경향은 경제 침체기의 환경, 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 능력을 제약해 몽골의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3. 국제관계

-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경제회랑의 중심지로 기능
  -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은 일대일로 경로 상의 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한다는 중국 정부의 구상으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경제회랑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음. 2024년 착공 예정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PoS2)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몽골 내륙 960km를 경유하게 되며, 몽골의 천연가스 수송료 수입 확보 및 대기환경 개선이 기대됨.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10~23년 FDI 유입 총누적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의 대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함. 몽골과 외국 정부 간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통해 지정학적 취약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몽골 최초의 정유공장 및 530km 길이의 송유관 완공 시(2025년 예정) 러시아 원유 수입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한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몽골은 인접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 따른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 중임. 2023년 4월 미국 경제개발처(USAID)는 5개년 몽골 전략 프레임워크(2023~28년)를 발표했으며, 몽골의 민주주의 제도 강화, 국가 주권 확립 및 경제 다각화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 몽골과 북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 대해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내 몽골의 대북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프랑스는 최대 우라늄 수입국인 니제르의 쿠데타 상황 하에서 우라늄 수입 다변화를 추구해 몽골과 경제 다각화 동기를 공유함. 2023년 10월 몽골-프랑스 협정 서명으로 프랑스는 몽골 내 리튬 탐사에 4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몽골-보츠와나 수교가 합의됨에 따라 몽골은 UN 192개 회원국과 모두 국교 관계를 수립함.

[그림 19] 몽골 무역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 추이



자료: Haver Analytics; EIU

[표 5] 제3의 이웃 정책

Country	Level of partnership relationship
Japan	Strategic partnership ('10)
India	Strategic partnership ('15)
US	Strategic partnership ('19)
Turkey	Comprehensive partnership ('04)
Germany	Comprehensive partnership ('08)
South Korea	Comprehensive partnership ('11)
Canada	Expanded partnership ('04)
Australia	Expanded partnership ('07)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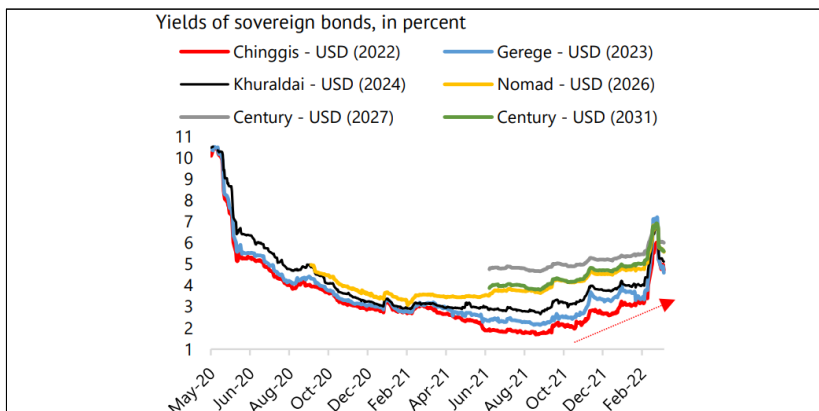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외채상환 압박 존재
- 2023년 9월 말 기준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8백만 달러(단기 0.6백만 달러, 중장기 65.2백만 달러) 감소한 1,464.3백만 달러(단기 47.4백만 달러, 중장기 1416.9백만 달러)이며, 이 중 6.9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체비율은 0.4%로 낮은 편임.
- 한편, 몽골은 1990년 이후 IMF로부터 6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19년 55억 달러 규모의 확대 신용자금(EFF)을 지원받은 바 있음. 높은 외채 및 수출입 의존도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특성으로 구조화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남. IMF는 2023년 10월 보도 자료에서 몽골에 대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부패 해결 등을 통해 FDI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강화된 투자법의 제정 및 시행, 광물법 정비의 가속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였음.

[그림 20] 몽골 국고채 금리 추이(2020.5월~2022.2월)



자료: Bloomberg, 세계은행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3.06)	7등급 (2022.07)
Moody's	B3 (2023.02)	B3 (2021.03)
Fitch	B (2024.02)	B (2023.05)

- OECD 및 국제신용평가3사는 몽골의 신용도등급 유지
  - OECD는 몽골이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외채부담이 과중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OECD는 2020년 6월 이러한 불안정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만연한 부정부패, 소득불평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몽골의 국별위험도 평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 중임.

- 반면,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Fitch는 IMF의 지원을 통한 재정 및 외부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이유로 2018년 몽골의 국가신용도등급\*을 상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 : Caa1 → B3 / Fitch : B- → B

## VI. 종합의견

- 몽골은 2016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뒤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며 2019년까지 5~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외환보유액을 2016년 대비 2배 가량 확충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지며 몽골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나,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22년 5.0% 및 2023년 5.5%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4년에도 운송 인프라 개선 및 오유 톨고이 광산 채굴 증산에 따른 수출 증가, 구리 가격 상승, 관광업 회복 등으로 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의 정치·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몽골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이며 70%에 불과한 위생시설 접근율(2022년 기준), 제조업 기반의 부실 및 부정부패는 몽골 내부의 위험 요인에 해당함.

##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 목 차 -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447천 km <sup>2</sup>	3,603만 명 (2023 <sup>e</sup> )	대통령중심제	서방 및 중국과 관계 강화, 러시아와 협력 지속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909억 달러 (2023 <sup>e</sup> )	2,523달러 (2023 <sup>e</sup> )	Som	11,734 (2023)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가장 많은 3,603만 명 (2023년 추정)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0.8조 m<sup>3</sup>), 원유(6억 배럴) 등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금 등의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금, 면화, 천연가스 등 자원·에너지 부문이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을 위주로 한 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7월 87%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정치·경제 개혁과 WTO 가입 등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와 천연가스 부문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전기 자동차 생산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1. 29 수교 (북한과는 1992. 2. 7)
- 주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98, '20 개정),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4), 사회보장협정('06, '15 개정),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09), 근로활동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이상 '12), 관광협력협정('13), 대외경제협력기금기본약정('14) 무상원조기본 약정('14)

[ 교역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 출	1,879,455	2,183,539	2,369,872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수 입	22,053	27,932	90,299	우라늄, 제자원료, 기호식품

-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65건, 8억 78,786달러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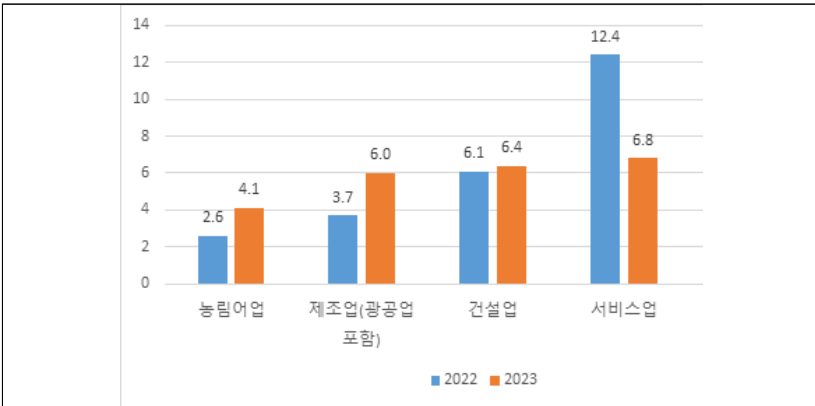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sup>e</sup>
경제성장률	6.0	2.0	7.4	5.7	6.0
소비자물가상승률	14.5	12.9	10.8	11.4	10.0
재정수지/GDP	-0.3	-3.3	-4.6	-4.3	-4.9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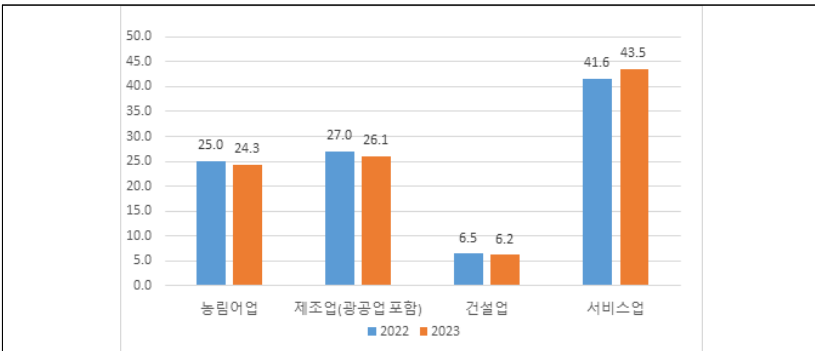
- 2023년 경제는 생산, 투자, 민간소비, 수출 등의 고른 증가에 힘입어 6.0% 성장 추정
- 2022년 5.7% 성장을 시현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3년에도 생산, 투자, 민간소비, 수출 등이 고르게 증가한 결과 6.0%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22.1%,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은 금속, 자동차, 섬유, 식료품 부문의 주도로 6.7%,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교육, 금융 부문의 주도로 6.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건설업도 6.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별 성장률(%)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2]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별 생산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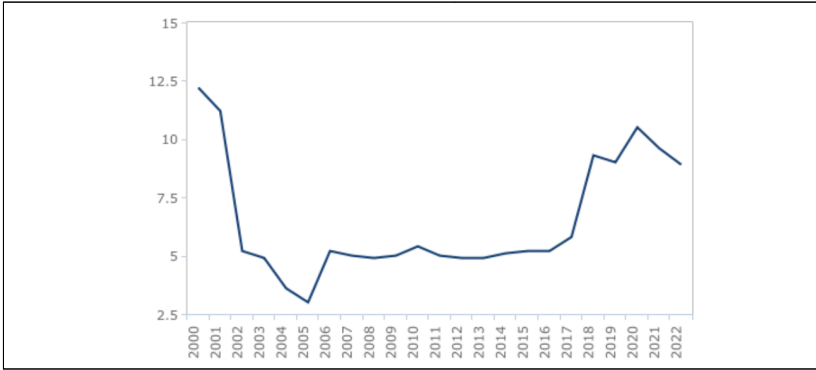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정부의 고용 안정정책으로 실업률은 2020년 10.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8.4%를 기록함('21년 9.6%, '22년 8.9%). 한편, 노동수요 증가와 함께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평균 임금은 2023년 7.8% 상승하였음.



[그림 3] 우즈베키스탄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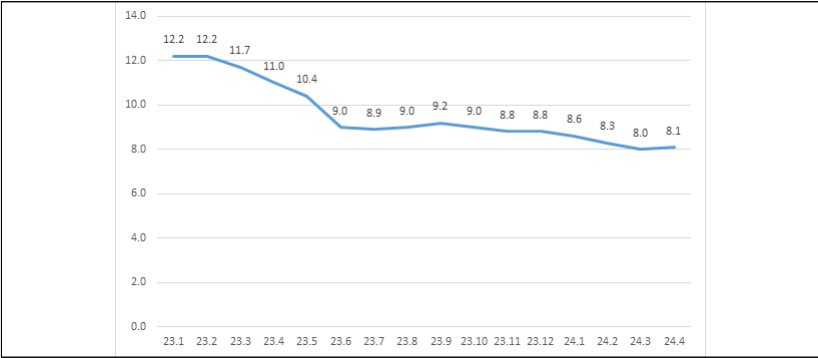
자료: BMI

- 주요 기관들은 2024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산업생산 및 투자 증대를 바탕으로 5%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MF는 5.2%, ADB와 세계은행은 5.5%, EBRD는 6.5%의 경제 성장을 각각 전망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2023년보다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데, 이는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및 주요 교역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전망 등에 따른 것임.
  -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IMF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올해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의 안정에 따라 점차 하락 추세
- 2018년 17.5%를 기록한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2023년까지 계속 10%대를 지속해 왔음. 다만 2023년에는 중앙은행의 높은 기준금리 유지,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전년(11.4%)

보다 하락한 10.0%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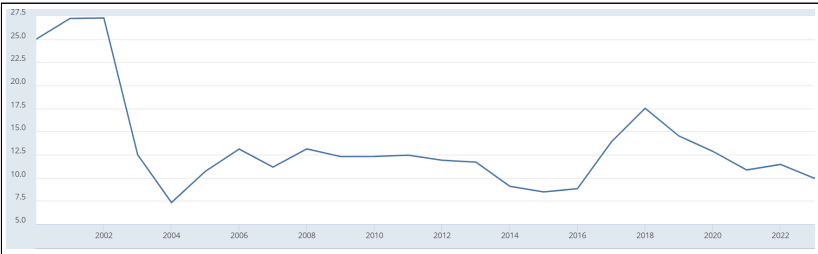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상승률 구성 바스켓에서는 식료품이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식료품 가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그림 4] 최근 16개월 간 우즈베키스탄의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023.1월~2024.4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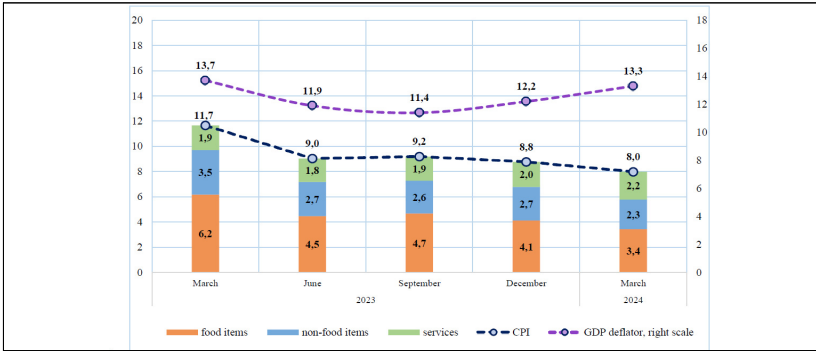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그림 5] 최근 23년 간 우즈베키스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2001~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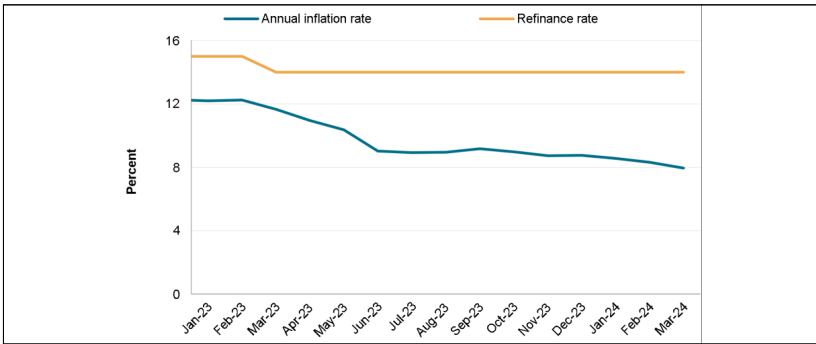
자료: IMF

[그림 6] 우즈베키스탄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품목별 물가상승률 추이  
(2023.3월~2024.3월, %)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그림 7] 우즈베키스탄의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 변동 추이  
(2023.1월~2024.3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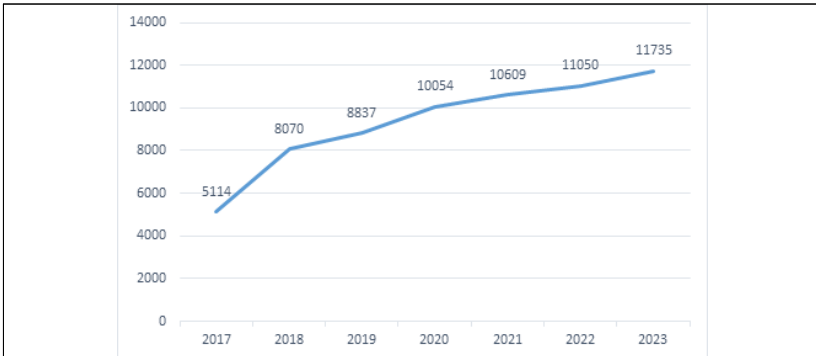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응하여 2023년 3월 이후 14%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3월 러시아 루블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숨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자,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환율 및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17%까지 대폭 인상했음.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2022년 6월 16%, 2022년 7월 15%, 2023년 3월 14%로 각각 인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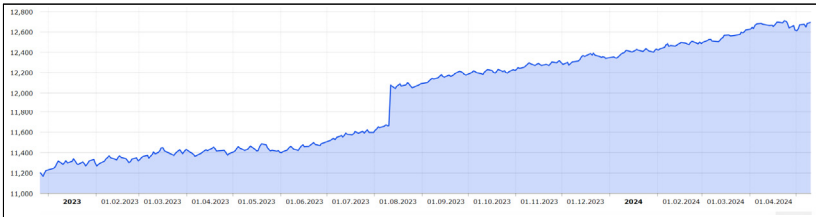
- 솜화 환율은 2017년 외환자유화 조치로 급등한 이후 상승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 솜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연평균 환율은 2022년 11,050에서 2023년에는 11,735로 6.2% 상승했음. 이는 2022년의 평균 환율 상승률인 4.2%를 상회하는 수치로, 동년 8월 초 솜화 환율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러시아 루블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급상승한 여파임.
  - 솜화 환율은 외환자유화 조치가 실시된 2017년의 달러당 5,114 솜에서 2018년 달러당 8,070솜으로 급등한 바 있으며,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8] 솜화의 미 달러화 대비 연도별 평균환율 변동 추이(2017~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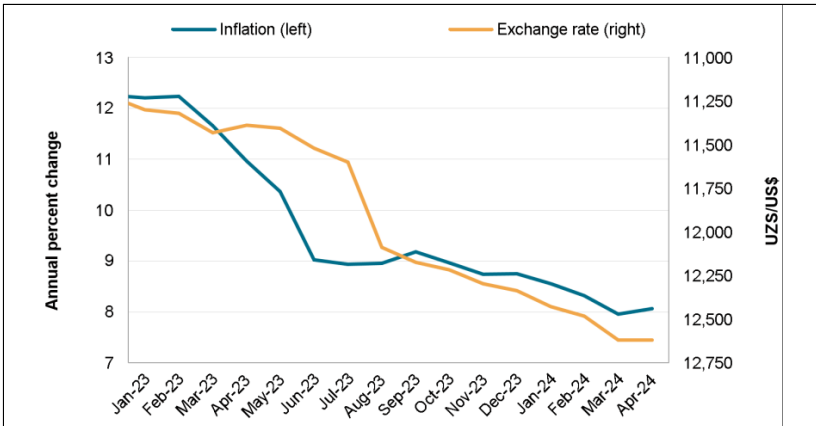
자료: IFS

[그림 9] 숨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2023.1~2024.4)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그림 10] 숨화 환율과 인플레이션 변동 추이(2023.1월~ 2024.3월)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 재정수지는 정부의 보조금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 지속
  - 재정수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3.3%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출 증가 등으로 적자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의 -4.3%에서 2023년 -4.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의 재정수지 적자 증가는 겨울철 난방을 위한 가스 구매 지원, 임금 인상, 사회복지 및 난방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출 확대, 에너지 및 광물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 부문 투자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2024년 1~3월에도 정부의 보조금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GDP 대비 -3.0%의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되어 있었으나, 정부지출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3년 12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GDP 대비 -5.5%의 재정수지 적자를 목표로 예산안을 수정한 바 있음. 한편, 2024년 예산안에는 GDP 대비 -4.0%의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되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도시 지역 인구가 증가하며 주요 도시의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2020~2022년에 도시화를 위해 12.3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30년까지 아파트, 학교, 유치원 등 건물과 상하수도, 가스관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2022년 현재 도시화율이 50.8%이며, 2030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에는 도시의 녹색지대를 현재의 8.3%에서 30%로 확대하고, 공공운수의 범위를 65%에서 95%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 대외거래

### [ 주요 대외거래 지표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sup>e</sup>
경상수지	-3,371	-3,028	-4,898	-618	-7,788
경상수지/GDP	-5.6	-5.0	-7.0	-0.8	-8.6
상품수지	-7,291	-6,216	-8,767	-11,199	-15,057
상품수출	13,899	12,832	14,142	17,110	19,419
상품수입	21,190	19,048	22,909	28,309	34,476
외환보유액	12,475	14,304	13,078	11,645	9,370
총외채	25,967	35,930	42,329	50,820	54,715
총외채잔액/GDP	43.1	59.7	60.8	62.6	60.2
D.S.R.	13.5	20.7	30.7	25.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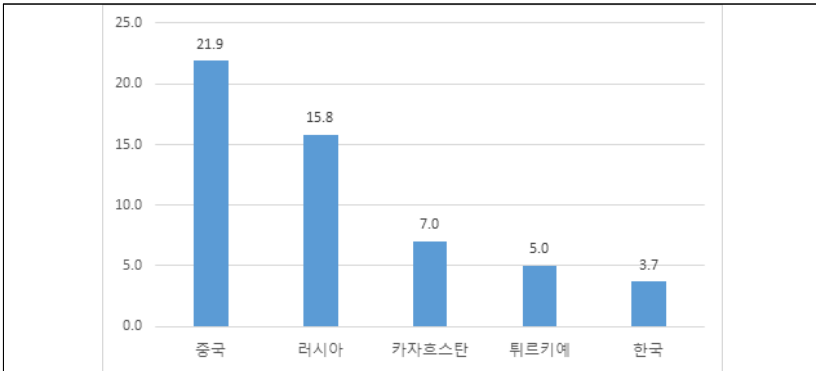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2023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 급증
  - 최근 수년 동안 투자와 소비의 동반 증가에 따른 중간재,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23년에는 상품수출액과 상품수입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수입액 증가분(61.7억 달러, 21.8% 증가)이 수출액 증가분(23.1억 달러, 13.5% 증가)의 약 2.7배에 달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6.2억 달러)의 무려 12.6배인 77.9억 달러(GDP의 8.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상품수입액 증가에는 2023년에 새로 설립된 지역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그 외에는 기호품, 육류 등 식료품과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비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수출의 경우 금, 야채 및 과일, 곡물, 자동차 등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음.

-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한국이 주요 5대 교역국
  - 주요 5대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한국이며,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 최대 수입국은 중국임.
  - 2022년 우즈베키스탄 교역액의 17.9%를 점유하며 러시아(18.6%)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제2의 교역상대국이었던 중국은, 2023년에는 21.9%의 점유율로 러시아(15.8%)를 제치고 우즈베키스탄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함.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으로, 주요 수출품목은 천연자원과 자동차 등임.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으로,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설비, 에너지 자원, 화학제품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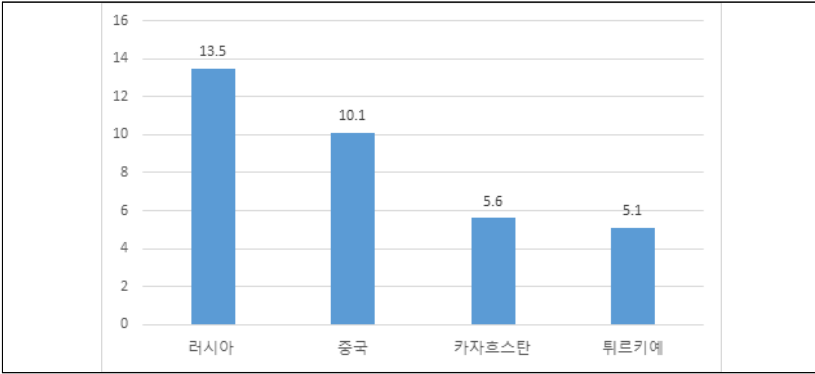
[그림 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국과 교역비중(%)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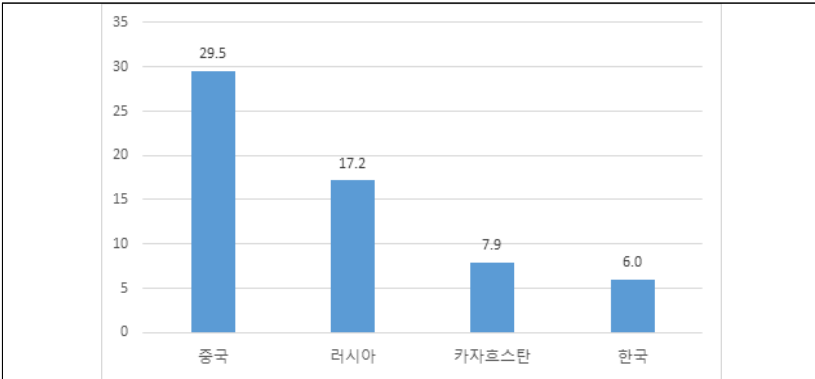


[그림 1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국과 수출비중(%)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13]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국과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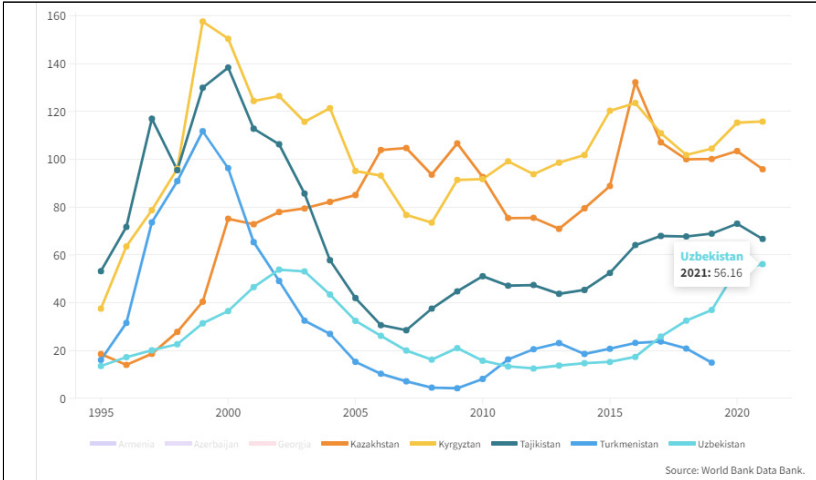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3. 외채상환능력

-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외채 관련 지표는 다소 악화
  - 200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해온 총외채잔액 규모는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출까지 겹쳐 더욱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대외차입으로 충당하면서 2019년 259.7억 달러에서 2023년 547.1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일부 외채상환능력 지표가 다소 악화됨.
  - 2023년 말 외환보유액은 93.7억 달러로 전년(116.4억 달러)보다 다소 감소하였음.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러시아 루블화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이주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액 감소 등으로 분석됨.
  - 외환보유액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말 단기외채잔액의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은 전년(37.4%)보다 악화된 52.1%로 추정됨. 아울러 수입액 증가까지 더해져 외환보유액의 월평균수입액 환산분은 2.4개월분으로 IMF 권고치인 3개월분에 미달하며 전년(3.6개월분)에 비해 악화되었음.

[그림 1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채잔액 추이(1995~2021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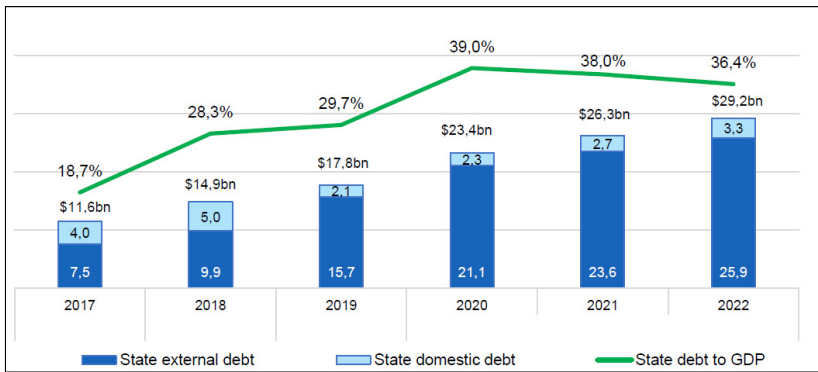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비교적 낮은 수준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채무는 2022년 말 292억 달러(GDP 대비 36.4%)에서 2023년 7월 말 315억 달러(GDP 대비 36.8%)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20년(39.0%)보다 하락한 것임. 국가채무 중 대외채무는 259억 달러, 대내채무는 56억 달러로 집계됨.
-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부채법’에 따르면 정부부채 및 국가보증채무는 GDP의 60%를 상회할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 국가채무의 주요 채권국은 중국(38억 달러), 일본(21억 달러), 한국(9억 달러) 등이며, 국제기구들로는 ADB(62억 달러), 세계은행(56억 달러), 이슬람개발은행(9억 달러) 등이 주요 채권자들임.

- 2024년 도입 예정인 신규 대외채무액은 5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중 25억 달러는 정부 재정지원에, 나머지 25억 달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각각 사용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4년에는 37%, 2025년에는 37.4%, 2026년에는 37.9%로 점차 상승할 전망이다.<sup>1)</sup>

[그림 15] 우즈베키스탄 국가채무 추이(2017~2022년)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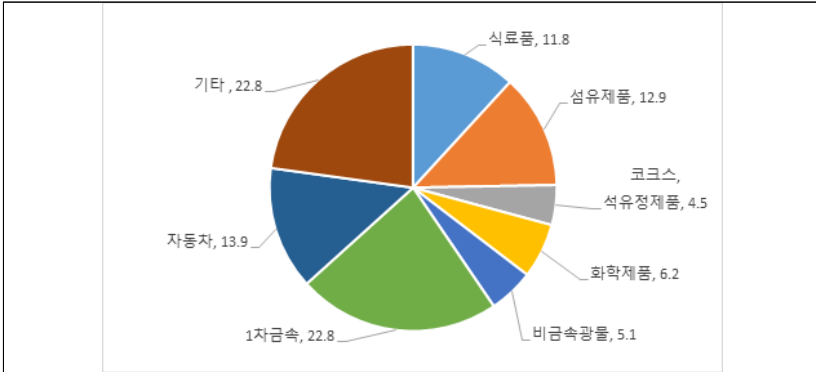
1) <https://kun.uz>

### Ⅲ.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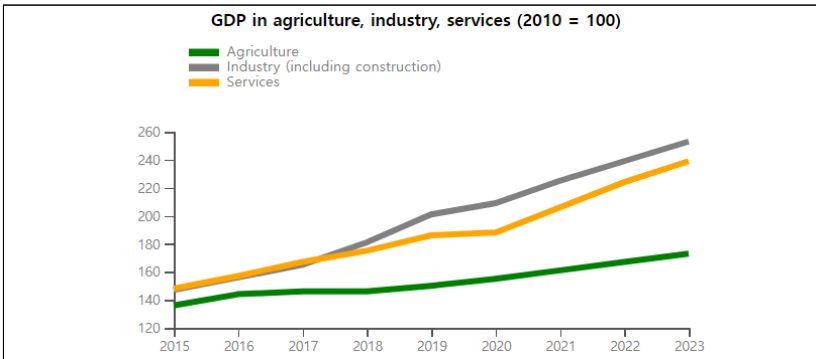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자동차, 섬유 등 일부 품목에 편중
  - 산업생산에서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GDP의 24.3%), 제조업 및 광업(26.1%)과 서비스업(43.5%)의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세계 주요 50대 국가에서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며, 농업은 대체로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만, 2015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부문별 비중은 1차금속(22.8%), 자동차(13.9%), 섬유(12.9%), 식료품(11.8%)의 4개 부문이 61.4%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산업다변화를 위한 제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책의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
  - “2018~20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정책을 통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경제 지대를 운영하고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위주의 제조업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한국, 독일 등으로부터 기계 및 설비와 생필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6] 202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부문별 생산 비중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17]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성장 추이(2015~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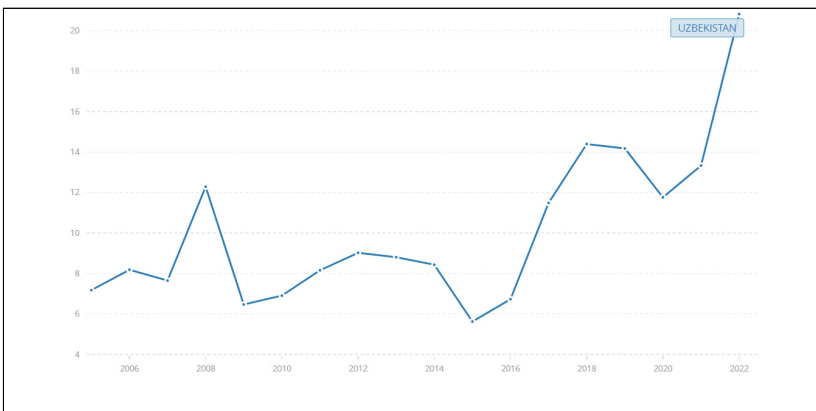
자료: <https://w3.unece.org> UNECE

- 해외이주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노동가능인구의 취업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다수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러시아,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송금액은 우즈베키스탄의 GDP 및 외환보유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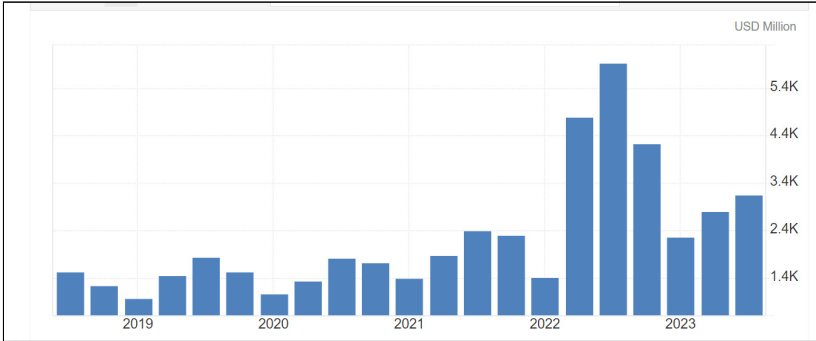
- 세계은행에 따르면 해외 거주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자국 앞 송금액은 2022년 167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61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해외송금액 비중도 2022년 21%에서 2023년에는 17.8%로 하락하였음. 이러한 감소는 러시아 거주 우즈베키스탄인의 감소, 러시아 루블화 환율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됨.
- 해외송금액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9~20년 약 50%에서 2022년에는 87%로 크게 상승했다가 2023년에는 78%로 하락하였음. 반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송금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일자리 부족 상황을 반영하는 다수의 해외 이주노동자와 GDP 대비 높은 송금액 비중으로 인해, 러시아 등 주요 해외취업 대상국의 경제상황은 우즈베키스탄의 GDP와 환율, 외환보유액, 외채상환능력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그림 18] 우즈베키스탄 GDP 대비 해외송금 비중 추이(2005~22년, %)



자료: 세계은행

[그림 19] 우즈베키스탄 해외송금 규모 추이(2019~23년, 백만 달러)



자료: tradingeconomics.com

## 2.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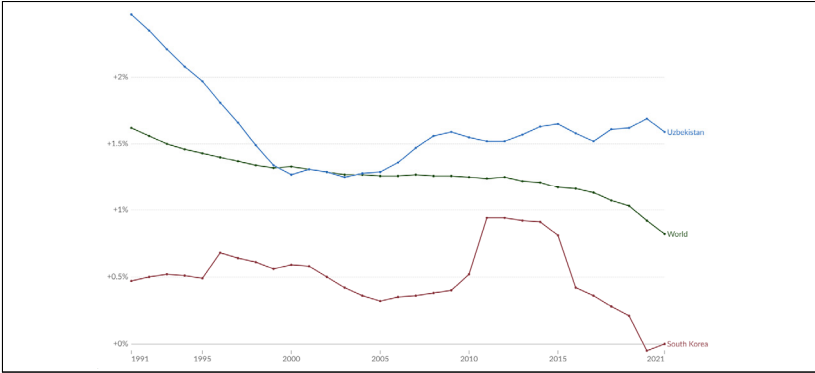
-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구나 높은 인구증가율로 풍부한 인적자원 보유
  -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인구증가율 및 청년층 비중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인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3,603만 명으로, 2019년의 3,390만 명보다 2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수치임.
    - 2019년 이후 1.9~2.2%의 인구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동 기간 세계 평균인 0.8~1.0%를 상회하는 수치임.
    - 2024년 초 기준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26.5%,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8.8%,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로 집계됨.<sup>2)</sup>
    - 또한 2021년 기준 평균 연령이 26.6세로 젊은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경제성장 지속을 뒷받침하는

2) [https://countrysmeters.info/ru/Uzbekistan#population\\_2024](https://countrysmeters.info/ru/Uzbekistan#population_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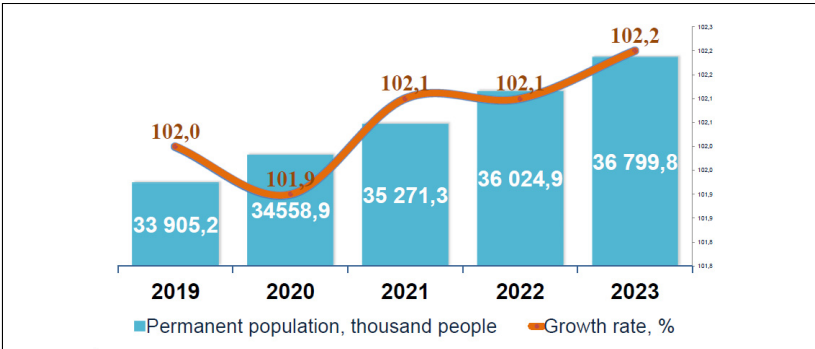
잠재력의 근원이 될 것으로 평가됨.<sup>3)</sup>

[그림 20] 우즈베키스탄의 인구증가율(청색) :  
세계 평균(녹색) 및 한국(적색)과 비교(1991~23년, %)



자료: <https://ourworldindata.org/population-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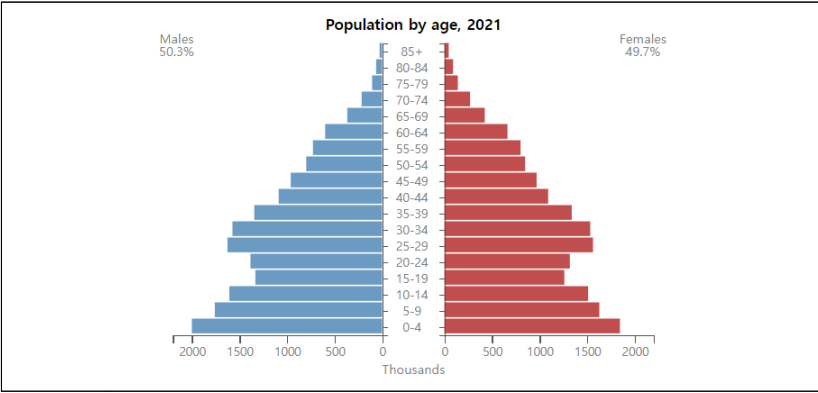
[그림 21]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증가 추이(2019~23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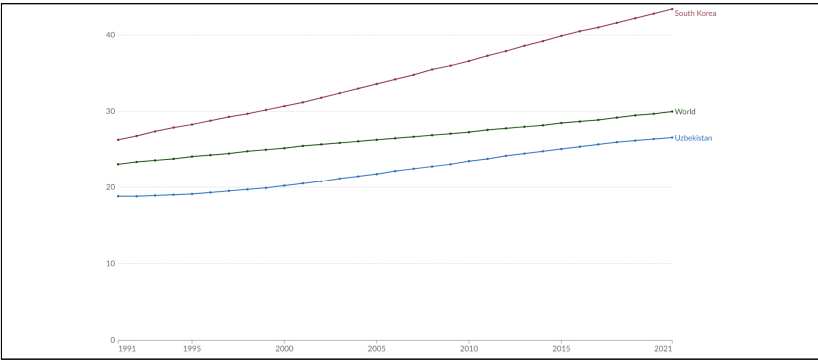
3) <https://ourworldindata.org/population-growth>

[그림 22]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구조(2021년)



자료: <https://w3.unece.org> UNECE

[그림 23]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평균 연령(청색) :  
세계 평균(녹색) 및 한국(적색)과 비교



자료: <https://ourworldindata.org/population-growth>

-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2022년 기준 천연가스 0.8조㎥(전 세계 매장량의 약 0.4%),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과 금, 우라늄 등을 비롯한 각종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생산 및 가공, 수출이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2022년 기준 천연가스 생산량은 489억㎥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2%에 해당함. 2012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망이 구축되었으며, 이 노선을 통해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대부분(25억㎥)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음.
- 원유는 2022년 기준 일평균 6.3만 배럴, 연간 280만 톤(전 세계 생산량의 약 0.1%)을 생산하였음.
- 최대 수출품인 금의 2022년 수출액은 51.3억 달러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30% 비중을 점유하였음. 2022년 기준 주요 수출국과 수출비중은 스위스 82.5%, 영국 12%, UAE 2.61%, 중국 2.18%임.

### 3. 정책성과

-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코자 2022년부터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제1회 포럼에서는 총 78억 달러, 2023년 제2회 포럼에서는 총 110억 달러의 외국기업 투자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
-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공보실은 2024년 4월 개최된 제3회 포럼에 93개국에서 2,5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총액 26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 투자국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총액 109.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본 포럼을 통해 캄바라타 수력발전소와 자바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소개 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WTO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투자법, 국제상사법원의 설립,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 임대기간의 2배 연장 등이 제시되었음.

[표 1] 2024년 제3회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에서 체결된 주요 계약

투자국	투자기업	투자계약액 (백만 달러)	투자내용	투자지역
사우디아라비아	Data Volt	1,000	도시 인프라 건설	타슈켄트
		3,000	녹색기술 기반 데이터센터 설립	타슈켄트
	Acwa Power	6,200	풍력발전 단지 건설(5GW 규모)	카라칼파크스탄
	Saudi Tabrid	750	난방 시스템 현대화 사업	누쿠스, 페르가나 등
아랍에미리트	Amea Power	1,100	풍력발전단지 건설(1,000MW 규모)	카라칼파크스탄
이집트	Nil Shugar	500	사탕무 재배, 설탕 생산	지작 주
중국	Shanghai Knud International	205	섬유 및 의류 제품 생산	나망간
싱가포르	Wilmar International	200	식품(주로 과자류) 생산	타슈켄트

\* 이외에도 Orascom Investment(이집트), Bonafarm Group(헝가리), Sayar(미국), Goldwind, Sinoma(중국), Sam Yapi(터키), Pasha Development(아제르바이잔), Lasselsberger (오스트리아) 및 Petrosat Chexelsoton(이란)과 총 66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됨.

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 ■ 자동차 산업의 발전 전망은 밝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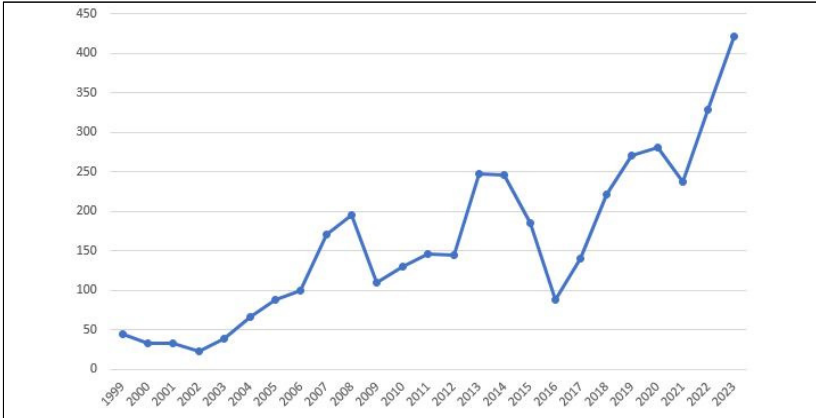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자동차 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23년 자동차 생산 대수는 425,876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음. 이중 승용차가 395,828대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하였으며, 버스는 921대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하였음.<sup>4)</sup>
- 자동차 생산 대수 증가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2024년 1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4년에 약 45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자동차 생산기업인 UzAuto Motors(舊 대우자동차)는 Cobalt, Gentra, Damas, Tracker 모델의 승용차를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점차 완성차의 생산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부터 지작(Jizzakh) 주에서 우즈베키스탄 UzAuto사와 중국 BYD사의 합작으로 전기자동차 공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생산 초기에 연 5만 대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 연 30만 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이 전기자동차들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판매되는 한편 러시아로의 수출도 계획되고 있음.
-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4년 1월 중국산 전기버스 100대 도입과 전기버스 운영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50곳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함.

4) Eurasian Research Institute: <https://www.intellinews.com>

[그림 24]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 대수 추이(1999~2023년, 천 대)



자료: Eurasian Research Institute

#### ■ 외국기업의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30년 우즈베키스탄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과 “2022~26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30년 우즈베키스탄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10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축, 에너지 효율성지수 향상, 화석연료 사용 비중 감축, 2030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로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2022~26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서는 2026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나보이, 사마르칸트, 지작 등의 주요 도시들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UAE Masdar, 프랑스 Total Eren 등이 투자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 따라 2021년, 2022년에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총발전가능량이 크게 증대되었음.

[표 2]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연도	지역	생산용량(MW)	전력공급 기간	사업자
2020년	나보이(카마나)	100	각각 25년	UAE Masdar
2021년	사마르칸트	100		Total Eren
	나보이(누라타)	200		Phanes Group
	사마르칸트	220		UAE Masdar
	지작	220		
	수르한다리아(쉐라바드)	457		

자료: IEA. Uzbekistan 2022 Energy Policy Review.

[표 3] 우즈베키스탄 풍력 및 태양광 총발전가능량(MW)

발전 부문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풍력	1	1	1	1	1	1
태양광	3	4	4	4	104	253

자료: IRENA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높은 지지율로 재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 전망
  - 2023년 7월 조기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87%의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여 2030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음.
    - 2023년 4월 90.2%의 지지율로 신헌법을 채택한 데 이어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미르지요예프 행정부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3년 9월 발표한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을 통해 경제, 산업, 투자, 재생에너지, 디지털 경제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30년까지 GDP 2배 증대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 지하경제 규모 축소 등의 경제발전 및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주요 수출품인 금, 구리, 은, 우라늄 등의 광물자원 생산 증대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등의 산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대중교통의 친환경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2030 전략” 추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ADB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5억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재선에 성공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내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발전과 우호적인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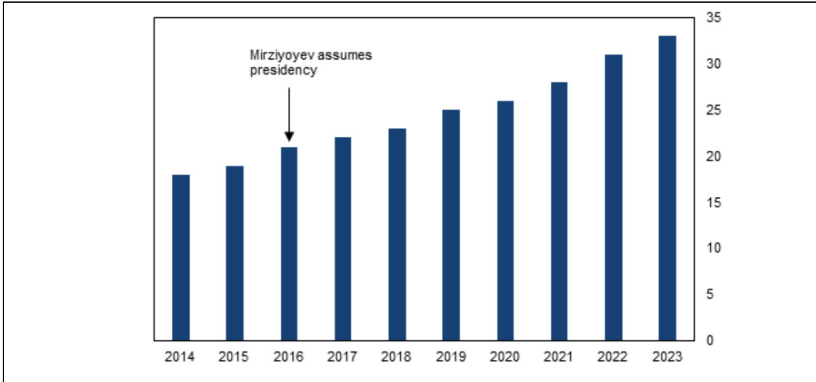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중동, EU 등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정치 및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 사회안정

- 사회 전반의 부패 해소 및 언론 자유 증진 등의 성과는 미흡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2026 발전전략” 등을 통해 자유로운 시민사회 건설, 정부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사회의 평가기준인 부패인식 지수와 언론자유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보고서(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2023년 세계 180개국 중 121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부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동 순위는 2014년 이후 개선 추세를 지속하여 2022년 126위, 2023년 121위로 다소 상승하였음.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에서는 2024년 180개국 중 148위를 기록하여 언론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25] 우즈베키스탄의 부패인식지수(2014~23년)



자료: BMI

### 3. 국제관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확대
  -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가스 동맹에 참여하여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서방의 에너지 제재로 인해 대 EU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되자, 러시아는 이에 맞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한 가스관을 통해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증대코자 함.
    -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소비량은 증가하여 겨울철에 난방용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합의하였음.
    - 2023년 9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연 28억

m³의 천연가스를 공급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였음. 러시아는 2026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가스 수출량을 연 110억 m³로 증대할 계획임.

[그림 26] 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가스관



자료: [www.intellinews.com](http://www.intellinews.com)

#### ■ 중국과의 정치, 경제 협력 확대

- 중국은 2023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유경제지대에 투자하여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지작 주에서는 BYD사가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이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 양국 간 정치 및 경제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친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규정되며, 이전보다 협력관계가 한 단계 격상된 것으로 평가됨. 앞서 2022년 9월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운명공동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참여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2013년부터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서도 적극 협력하며,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음.

#### ■ WTO 가입 추진 등 서방과의 협력 확대도 병행 추진

- 우즈베키스탄은 WTO 설립이 추진되던 1994년에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가입 협상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대외 경제개방 정책에 따라 가입협상을 재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4년 2월 기준 이스라엘, 일본, 도미니카 등 11개 국가와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WTO 가입을 위한 제8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음.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황태도

####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황태도는 양호한 수준

- 2022년 9월 말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잔액은 총 40억 8,590만 달러(단기 2억 5,870만 달러, 중장기

38억 2,720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20만 달러(단기 80만 달러, 중장기 40만 달러)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4.2)	5등급 (2023.1)
Moody's	Ba3 (2023.1)	B1 (2021.7)
Fitch	BB- (2024.2)	BB- (2022.9)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과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3사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후 Fitch는 기존의 등급(BB-)을 유지하고 있고, Moody's는 2023년 1월 등급을 상향조정(B1 → Ba3)한 바 있음.
  - 국제신용평가3사는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안정적 외채 지표 등 경제상황과 정부의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Fitch는 2024년 2월 우즈베키스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존의 BB-등급을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음.

## VI. 종합의견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투자와 수출의 감소 등으로 1995년(-0.9%) 이후 가장 낮은 성장(2.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21년 7.4%, 2022년 5.7%, 2023년 6.0%의 고성장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음.
- 경제 전반에 대한 투자 증대에 따라 대외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외채 관련 지표들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인구증가율과 높은 청년층의 비율, 금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유 등으로 향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제조업의 부진이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자동차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발전을 통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23년 7월 조기 대선에서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집권 1기에 시작하였던 개혁 및 개방 정책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지혁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 목 차 -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2. 대외거래
  - 3. 외채상환능력
- III.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2. 성장잠재력
  - 3. 정책성과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 사회안정
  - 3. 국제관계
- 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 국제시장평가
- VI. 종합의견

## I. 국가개황

### 1.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1,904천 km <sup>2</sup>	2.7억 명 (2023 <sup>e</sup> )	대통령중심제	비동맹중립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13,712억 달러 (2023 <sup>e</sup> )	4,942달러 (2023 <sup>e</sup> )	Rupiah (IDR)	15,236.89 (2023)

- 적도에 위치하며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세계 16위) 및 최대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
-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부존자원과 팜오일, 고무, 커피 등 농산물이 풍부하고, 2.7억 명의 인구 중 약 40%가 24세 이하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산업의 다운스트림 부문에 투자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음.
- 2019년 연임에 성공한 Joko Widodo 대통령은 2024년 10월 임기가 종료되고, 2024년 2월의 대선에서 승리한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당선인이 10월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임. 프라보워 당선인은 후보 시절 조코위 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71년), 임업협정('87년), 이종과세방지협정('89년), 항공협정('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7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14년), 국방협력협정('18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20년)

### [ 교역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 출	8,550,335	10,215,899	9,140,239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수 입	10,725,095	15,734,850	12,145,901	석탄, 천연가스, 의류

-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598건, 18,730,880천 달러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0	-2.1	3.7	5.3	5.0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0	1.6	4.1	3.7
재정수지/GDP	-2.1	-6.1	-4.4	-2.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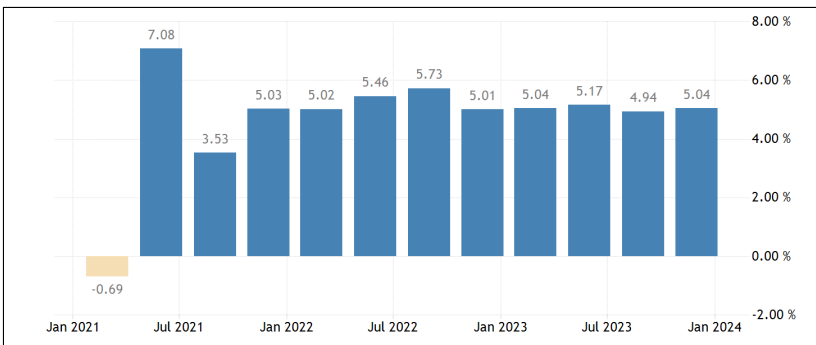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2023년 경제는 견조한 내수가 수출 둔화를 상쇄한 결과 5.0% 성장 추정
  -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석탄,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니켈), 농업 자원(팜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관광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특히 광물자원의 수출 관련 제조업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 광업 부문의 발달이 장기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3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이 상품수출 부진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성장에 힘입어 2022년(5.3%)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인 5.0%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2000~19년) 간 연평균 5.3%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2.1%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1년 2분기부터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인프라 개발 사업 재개, GDP의 약 52%(2022년 기준)에 달하는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5.0%보다 약간 높은 5.3%를

기록함.

- 202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농산물 수확량 증가, 루피아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비용 하락 등으로 둔화된 소비자물가상승률(2022년 4.1% → 2023년 3.7% 추정)이 민간소비를 장려하였음.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전년 대비 4.92% 성장한 가계소비가 수출 부진을 상쇄한 결과 5.0%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하였음.

[그림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2021년 1월~2024년 1월)



자료: Statistics Indonesia, Trading Economics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 FDI\* 유입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473억 달러(744조 루피아)를 기록했음. 118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니켈 가공 산업이 FDI 유입 증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FDI가 많이 유입된 주요 산업으로는 광업, 운송, 창고업, 통신, 화학 및 제약, 펄프 및 제지 등이 있음. 2023년 대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중국, 홍콩 등임.

\* 금융,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투자부 집계에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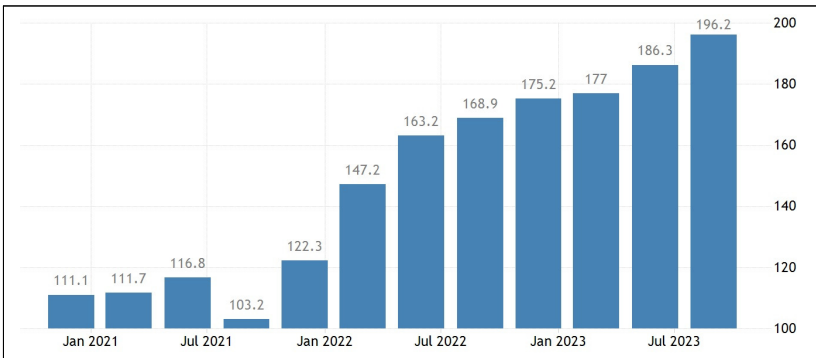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업 부문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 원석·원광의

수출을 금지하여 제련과 관련한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에 따라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부가가치 창출과 투자 유치 목적으로 광물 수출업체들의 제련소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수출을 금지한 니켈 원광에 이어 2023년 6월부터는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했음.

[그림 2] 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2021년 1분기~2023년 3분기)

(단위: 조 루피아)



자료: BKPM, Trading Economics

- 2024년 경제는 견고한 가계소비 등에 힘입어 전년대와 유사한 5%대 성장을 유지할 전망
- 2024년에도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예상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4.7~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24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동력으로는 견고한 가계소비, 2월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 따른 물품 조달 수요 및 소비 증가, 국가전략사업(National Strategic Project) 및 신수도 건설 등이 꼽히고 있음.

-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상품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기관별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4.04)	ADB (‘23.12)	세계은행 (‘23.12)	EIU (‘24.04)	FitchSolutions (‘24.0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3.11)
2024년	5.0	5.0	4.9	5.1	4.9	4.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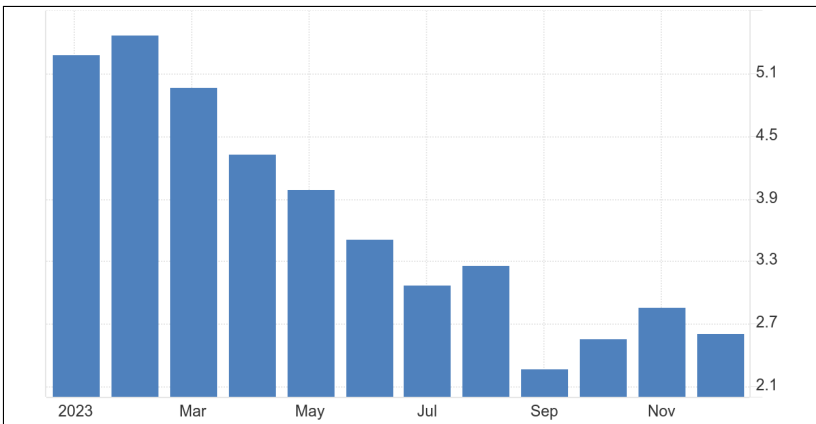
- 지난 2월의 선거에서 조코위(Jokowi)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현 국방부 장관)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선거로 인해 투자를 유보하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는 대선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2위 후보가 다시 2차투표를 치르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 FitchRatings는 금년 10월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조코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었던 신수도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 상품의 다운스트림화, 2차 전지 및 전기차 제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함.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에서 통제
- IMF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목표치 범위인 2~4%의 상단인 3.7%를 기록하여 전년(5.5%) 대비 안정됨. 2023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 하였으나, 4월을 기점으로 3%대에 진입하고 8월부터는 2%대까지 하락하여 2023년 하반기 이후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전년 보다 0.5% 낮은 1.5~3.5%로 발표함.
- EIU는 2023년 말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농작물 작황에 피해를 줌으로써 올해 초반 식량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분기부터는 식량 및 연료 국제가격의 안정, 2023년 단행한 긴축 통화정책의 지연된 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 인도네시아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Statistics Indonesia,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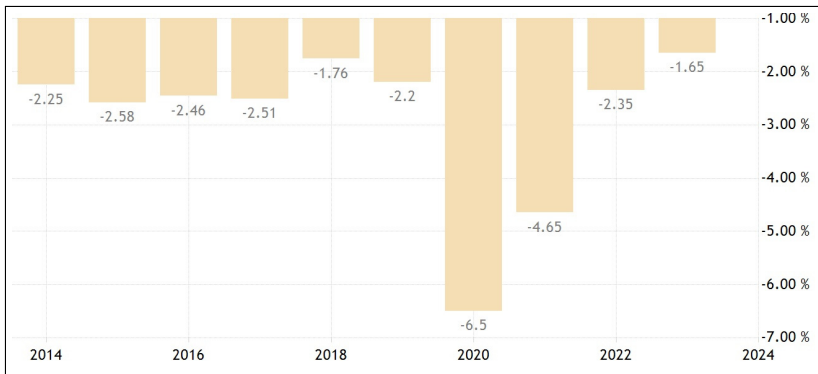
-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인상 압력에 대응코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250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하였으며, 이후 8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4년 4월 25bp 인상을 단행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한동안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3.5%로 유지했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총 225bp)을 단행하였음.

- 이후 8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후 2023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고 올 3월까지 6.0%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강달러 현상 지속에 따른 루피아 가치하락으로 4월 다시 0.25%p 인상을 단행하였음.
- 2023년 재정수지 적자는 세입 증가로 12년래 가장 낮은 GDP 대비 -1%대 기록 추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상한(GDP의 -3%)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연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해당 법령의 적용을 3년 간(2020~22년) 유예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2003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 2020년 3월 국가재정법이 정한 재정수지 적자 상한선을 최대 3년 동안 초과할 수 있다는 새 법안을 제정하였음. 동 법안은 별도의 특별법이 추가로 제정되지 않는 한 202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3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1.65%로, 최초 설정한 목표인 -2.84%와 추경예산의 -2.27%를 모두 하회하는 1%대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이는 12년래 가장 적은 적자 규모임.
  -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입은 2022년 대비 5.3% 증가한 2,774조 3천억 루피아이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4.5% 축소된 347조 6천억 루피아임.
  - IMF와 EIU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 증가, 새롭게 부과되는 전자담배세로 인한 추가 세원 확보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의 202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2.2% 및 -2.4%로 전망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1월부터 전자담배 흡연 억제를 위해 기존의 전자담배 소비세에 더하여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EIU는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1%에서 12%로 인상됨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28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2%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4]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Trading Economics



## 2. 대외거래

### [ 주요 대외거래 지표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30,279	-4,433	3,511	13,215	-1,567
경상수지/GDP	-2.7	-0.4	0.3	1.0	-0.1
상품수지	3,508	28,301	43,806	62,672	46,347
상품수출	168,455	163,402	232,835	292,538	259,468
상품수입	164,948	135,101	189,029	229,866	213,121
외환보유액	122,707	128,398	131,405	124,178	132,621
총외채	402,106	417,046	416,471	399,256	401,525
총외채잔액/GDP	35.9	39.4	35.1	30.3	29.3
D.S.R.	12.6	18.4	14.5	8.4	10.7

자료: IMF, EIU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와 상품 수출가격 하락으로 2023년 경상수지는 GDP의 -0.1% 규모의 적자로 전환
- 2022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상품수출액을 기록했던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와 상품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2022년 GDP 대비 1.0%의 흑자에서 2023년 GDP 대비 -0.1%의 적자로 전환됨.
- 2023년 인도네시아의 상품수출액은 2,594.7억 달러(2022년 2,925.4억 달러보다 11.3% 감소), 수입액은 2,131.2억 달러(2022년 2,298.7억 달러보다 7.3% 감소)로 상품수지는 463.5억 달러의 흑자(2022년 626.7억 달러보다 26.0% 감소)를 기록하였음. 석탄, 팜유, 니켈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상품 가격 하락이 상품수지 흑자 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큰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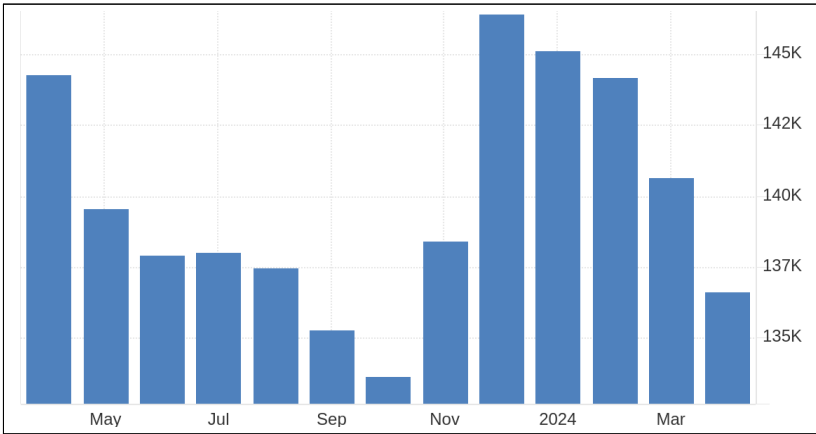
미칩.

-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지속하고 있는 서비스수지는 관광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적자 규모가 전년(199.6억 달러)보다 10.2% 감소한 179.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3. 외채상환능력

- 국제 적정성 기준을 상회하는 외환보유액 유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2024년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1,362억 달러로 3월 말(1,404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2023년 12월부터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대외부채 상황과 루피아 안정을 위한 환율 방어에 따른 결과임.
  - 4월 말 외환보유액은 수입 6.1개월 혹은 수입 6.0개월 자금 조달 및 정부 외채 상황에 해당하여 수입 3개월의 국제 적정성 기준을 상회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 2019년부터 정부령(PP No. 1/2019)을 통해 천연자원 수출업체는 외화로 결제대금을 받을 시 국내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3년 8월부터는 수출업자들의 수출대금 일부를 국내에 우선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발효하였음.
  - 천연자원은 광업, 작물재배업, 임업, 어업 분야의 생산물을 포함하며,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대금을 외환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2023년 8월 1일부터 수출 수익금(DHE)의 최소 30%를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에 3개월 이상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림 5]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 추이(백만 달러)



자료: Trading Economics; Bank Indonesia

-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비교적 양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3%로 설정함으로써 낮은 공공 채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하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4%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안정세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으로 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23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0% 아래로 축소됨.

### Ⅲ. 경제구조 및 정책

#### 1. 구조적 취약성

- 원자재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출구조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팜유, 니켈 등은 세계경기 동향과 국제 정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2024년 석탄 수출은 전 세계적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23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3년 석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5.5억 톤이었으나, 석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590억 달러에 그침 (수출량은 2022년 대비 13% 증가).
  -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2024년 팜유 수출이 2023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BPS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 총수출의 11.71%를 차지한 팜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액은 284억 달러로 전년(약 351억 달러) 대비 19% 감소하였음.
  - 2024년 1월 22일 기준 니켈 가격(London Metal Exchange, 현물)은 톤당 1만 5,785달러로 2023년 최고가(3만 344달러) 대비 절반 수준임.\* 주요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니켈 국제가격 하락은 전 세계 니켈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공급량 급증에서 기인함. 전 세계 니켈 생산량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77만 톤)를 기록한 뒤 2021년 38.1%(104만 톤), 2022년 44.8%(160만 톤)로 증가세를 지속 했으며, 2023년에는 47%(175만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5월 7일 현물 가격은 18,755달러임.

## ■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인프라 개발

-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과 낙후된 인프라는 국가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했으며, 실제로 그의 재임 동안 많은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아울러 2019년 재선에 성공하고 국가적 숙원사업이었던 수도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공적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수도 건설의 경우 예산 규모가 466조 루피아(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 예산의 19.2%만 재정지출로 충당하고, 54.4%는 PPP로 조달하며, 26.4%는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이 담당할 계획임.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과 국유지(자카르타 및 동부 칼리만탄)의 상업화가 고려되고 있음.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일본, 이란,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 투자를 제안했으나, 자금 조달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 성장잠재력

### ■ 풍부한 천연자원 및 노동인구 보유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원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 대두, 경제안보 측면에서 자원 확보의 중요성 강화 등 최근의 세계경제 상황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생산량 세계 1위인 팜오일을 비롯하여 고무, 카카오, 커피 등 풍부한 농산물과 2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니켈(전 세계 매장량의 22% 보유),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 핵심 전략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함.
-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총인구(2023년 말 2.7억 명)의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해당됨.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202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 53%에서 2020년 70%로 증가했고, 향후 해마다 270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0.6%,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23.9%로,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15년 간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 비중이 약 7%에서 20%(세계은행 추산 5,200만 명)로 증가하는 등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내수시장 발달이 진행되고 있음.

\*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증가하는 현상

###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

- Google·Temasek·Bain&Company의 ‘e-Conomy SEA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3년 820억

달러(거래액 기준, Gross Merchandise Volume)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해 1,090억 달러에 이르고, 2030년에는 2,100~3,6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성장동력으로는 큰 규모의 내수시장,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가 다수인 인구구조, 외국자본 유입, 국가의 육성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확산된 재택근무·온라인 학습 등을 꼽을 수 있음.

- 디지털 경제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ICT 인프라와 낮은 금융 포용성 등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최근 인프라 구축과 전자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이러한 문제가 일부 개선되고 있음.

### 3.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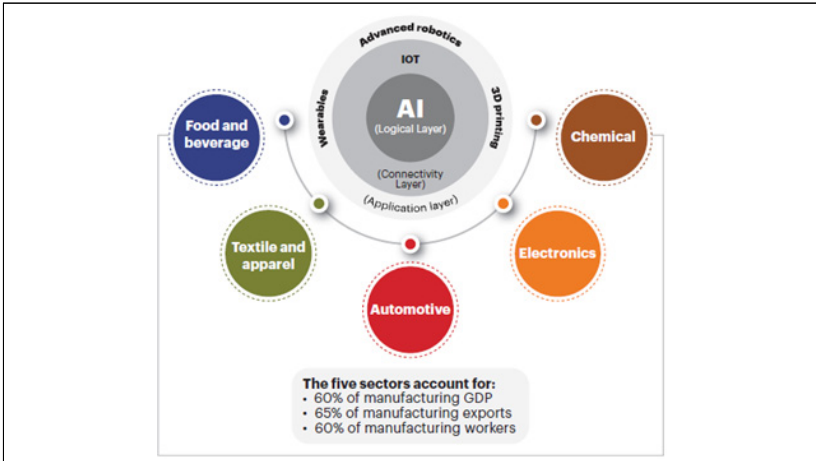
- “Making Indonesia 4.0”을 통한 제조업 육성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 계획인 “Making Indonesia 4.0”에 기반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 세계 16위인 경제규모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핵심 전략 방안으로 제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꼽았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기여도, 수출잠재력을 고려한 산업매력도, “인더스트리 4.0\*”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식·음료, 화학, 섬유·봉제, 전자, 자동차를 5대 우선 육성산업으로 선정함.

\*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생산 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노동력, 큰 내수시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동시에 인프라 부족은 물론 산업 내 전-후방 연계 가치사슬 취약, 디지털

플랫폼 부족, 정부 재원 및 혁신 주도 역량 부족, 숙련 노동력 부족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취약 등 선결 과제가 상존함.

[그림 5] Making Indonesia 4.0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원광 수출 금지 등 광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 노력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광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을 위해 니켈을 포함한 핵심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제련해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겠다고 발표함. 단순 원자재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국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외국 기업이 원자재를 채굴해 바로 수출하는 대신 이를 제품 형태로 가공해 수출토록 유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8년 국내가공요구사항(domestic processing requirements, DPR)을 도입하여 모든 기업이 니켈 광석을 수출 전 국내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2022년 초에는 석탄과 팜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했으며, 2023년 6월부터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원래 보크사이트뿐 아니라 구리, 철, 아연, 납 등도 원광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 광산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 건설을 요구하였으나, 구리와 철, 아연, 납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2024년 5월까지 원광 수출 금지를 유예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재무장관 규정 제71/2023호에 따라 제련소 공정률 50% 이상의 업체에 한해 구리 정광(精鑛) 수출을 허용하되, 수출관세율을 5~10%로 인상함.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철, 아연, 납의 수출관세율도 공정률에 따라 2.5~7.5%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4년 1월부터 공정률에 따라 수출관세율을 구리는 7.5~15%, 철, 아연, 납은 5~10% 범위에서 인상함.
- 수도 이전계획의 중단 없는 추진
- 조코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현 수도인 자카르타가 당면한 문제(교통체증, 지반침하, 환경오염 등)를 완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칼리만탄 섬 동부 지역을 신수도 부지로 선정했으며, 2022년에는 신수도의 이름을 누산타라(Nusantara)로 명명하고 '신수도 건설법'을 통과시켰음.
  -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것을 방지코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10월 20일 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기를 희망함. 조코위 정부는 2024년 독립기념일(8월 17일)

행사를 누산타라에 건설 중인 새 대통령궁에서 개최하고 올 연말까지 수천 명의 공무원을 이주시킬 계획임.

\* 1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 등 정부 핵심시설을 옮기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6개 위성도시 포함 교육, 의료, 상업 지구 등을 개발하는 것이며,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전체 수도 이전은 인도네시아 건국 100주년인 2045년에 완성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4년 3월 ‘자카르타 특별지역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 동 법은 누산타라가 대통령령으로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면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의 특별지역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내에 누산타라를 공식 수도로 지정할 계획임.
- 올 10월 20일 취임할 예정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ibianto) 대통령 당선인도 수도 이전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Gibran Rakabuming Raka)이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수도 이전을 포함한 현 정권하에서 추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사실상 실패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

-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후 해마다 약 300조 루피아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료 및 전력 보조금 및 보상금\*을 개혁하여, 보조금에 할당되었던 예산을 인프라 건설, 보건, 교육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Pertamina)가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는 연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삭감 등 일부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 재선을 앞두고 삭감되었던 보조금이 다시 회복되었음. 집권 2기 동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보조금 및 보상금이 오히려 증가, 2022년에는 정부 예산 할당량의 3배인 551조 루피아를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음(GDP의 10%).

- 에너지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부담을 느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9월 연료(가솔린 및 디젤) 가격을 약 30%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에너지 보조금으로 약 210조 루피아를 지출하였음.
-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에너지 보조금 지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상충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의 지원을 받아 2030년까지 전력 믹스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4%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7개국(G7), 노르웨이, 덴마크 등 선진 9개국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이들 국가와 다자간 은행, 민간 대출기관의 지분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 에너지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개도국에 보조금 및 양허성 차관 형태로 지원함.

## IV. 정치·사회안정

### 1. 정치안정

- 2024년 2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 당선
  - 2024년 2월 14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전국구 국회의원(Dewan Perwakilan Rakyat, DPR)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Dewan Perwakilan Daerah, DPD),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DPRD)을 선출하는 총선이 함께 치러짐.
  - 2월 14일 정-부통령, 580명의 국회의원, 152명의 지역대표 의원, 2,372명의 주(provinsi) 의회 의원, 17,510명의 시-도(kabupaten/kota)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음.
  -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후보 없이 3명의 후보군(정-부통령)이 참여했던 대선은 첫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할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2차 투표)에서 대통령이 확정될 것이라는 초반의 예상을 뒤집고 프라보워(현 국방장관)-기브란(수라카르타 시장, 조코위 대통령 장남) 후보가 59%를 득표하여 당선됨.

[그림 6]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정·부통령 후보

기호 1	기호 2(☆당선)	기호 3
<b>PRESIDENTIAL CANDIDATE</b> 	<b>PRESIDENTIAL CANDIDATE</b> 	<b>PRESIDENTIAL CANDIDATE</b> 
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17~'22) 교육부 장관('14~'16) Paramadina 대학 총장('07~'15)	Prabowo Subianto 국방부장관('19~현재) Gerindra당 대표('14~현재) 육군 장성('95~'98)	Ganjar Pranowo 중부 자바 주지사('13~'23)
기호 1	기호 2(☆당선)	기호 3번
<b>VICE PRESIDENTIAL CANDIDATE</b> 	<b>VICE PRESIDENTIAL CANDIDATE</b> 	<b>VICE PRESIDENTIAL CANDIDATE</b> 
Muhaimin Iskandar 국회부의장('19~현재) PKB당 당대표('20~현재) 노동부 장관('09~'14)	Gibran Rakabuming Raka 수라카르타 시장('21~현재)	Mahfud MD 정치·경제·법 조정장관('19~'24) 대법원 판사('08~'13) 법무부 장관('21) 국방부 장관('00~'01)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 대선 결과에 불복한 낙선 후보들

-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여당(PDI-P)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전의 두 차례 대선(2014년, 2019년)에서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했으며, 피선거권 연령 제한으로 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었던 기브란이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있었음.

- 3월 20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두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대선 결과 불복청원)하는 등 대선 결과에 불복하였음.
- 낙선한 후보가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은 부통령으로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임.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23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경험이 있는 후보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주었음.
-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법재판소장이 기피신청을 내지 않고 판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란이 되어 결국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기브란은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낙선한 후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의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유지해야 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프라보워-기브란 후보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후반 대통령도 개인의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음.
- 헌법재판소는 4월 22일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낙선한 두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음.

- 정권 교체 후에도 주요 정책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프라보워 당선인이 후보 시절 조코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던 점과 부통령으로 당선된 기브란이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점을 고려하면 조코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도 이전, 대규모 인프라 건설,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 광업의 다운스트림 부문 육성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 프라보워가 취임 후 조코위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음.

## 2. 사회안정

- 시행이 연기된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 규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여행자를 통한 소비재 수입의 규제를 목적으로 2023년 11월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ng) 제36호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입국자의 수하물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고(90일 유예)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하였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규정의 모호성으로 7일 만에 시행을 연기하였음.
  - 동 규정에 따르면 입국자는 전자기기, 신발, 직물, 가방, 휴대용 전자기기(핸드폰 등), 음식료품에 관하여 수량 제한을 적용받음. 최대 반입 가능 수량은 입국자 1인당 신발 2켤레, 가방 2개, 직물 5벌, 휴대용 전자기기 5개까지이며, 음식료품은 5kg까지 허용됨.

[표 2]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관련 규정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시행 시기	2024년 3월 10일(연기)	
대표적인 제한 물품		
품명	제한(인당)	상세 내용
휴대용 전자기기	2대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등
신발	2켤레	신발 완제품(HS64.01~64.05)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가방	2개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HS42.02)
화장품	20개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섬유류	5개	모포, 커튼 등(HS63.01~63.08), 중고의류는 제한대상 아님
전자기기류	5개(1,500달러 이내)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HS84 및 85 일부 제품)
음식료품	5kg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총량 기준

자료: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인도네시아 대중은 새로운 규정이 국내 소매 시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관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적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귀국하는 자국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점, 출국 시 반출된 물건과 해외에서 새롭게 구매한 물건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명확한 설명과 지침의 부족 등을 거론하며 시행을 반대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함.

#### ■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기간은 2024년 10월 종료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할랄 제품 보장법(정부령 2014년 33호)을 제정하고 2017년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 인증청(BPJPH)를 설립했으며,



2019년과 2021년 할랄 제품 보장법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강력한 할랄법을 제정하고 5년 간의 유예기간 후 2019년 10월부터 시행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제도 준비 미흡으로 5년의 추가 유예시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국민의 상당수는 할랄 인증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으며, 2014년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할랄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10월까지 식음료 기업에 BPJPH의 할랄 인증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품 유통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
- 2021년 정부령 제39호(GR39/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음식료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 용품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표 3] 할랄 인증의 주요 적용 대상 제품 및 제품별 계도기간

적용 대상 제품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 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 2026.10.17
의약외품(OTC)	
향정신성의약품 제외 의약품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의료기기(A등급)	
의료기기(B등급)	
의료기기(C등급)	

자료: 2021년 정부령 제39호

- 동 정부령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된 하람(haram)\*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람 재료가 포함된 제품들을 비할랄 제품으로 분류하고 비할랄이라고 표기 후 할랄 제품과 별개로 관리·유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할랄은 근본적으로 '허용된 것'을 의미하고, 할랄의 반대되는 개념인 하람은 '부정한 것'을 의미함. 할랄과 하람은 음식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임.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체계와 할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올 2014년 할랄 제품 보장법의 핵심 내용은 ①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②할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할랄이 아님(non-Halal)을 명시해야 하며, ③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의 할랄 여부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할랄 인증 대상에 포함되고, ④제품 생산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무슬림이어야 함.

### 3. 국제관계

- 비동맹 중립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적극적인(bebas-aktif) 외교노선 고수
- 인도네시아의 역대 행정부는 '자유롭고(독립적)-적극적'이라는 의미의 'bebas-aktif'라는 외교원칙을 계승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어로 'bebas'는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세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aktif'는 국제적 사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함.
- 1948년 당시 인도네시아 부통령이었던 하타(Mohammad Hatta)는 미국과 소련이 두 진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교 원칙으로 'bebas-aktif'를 처음 언급했으며, 이후 모든 정권이 각자의 방식대로 'bebas-aktif'를 실천하고 있음.

- 2022년 동남아 국가로서는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처음으로 G20 의장국을 수행한 인도네시아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개된 서구와 러시아 간 갈등 속에서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외교적 자율성을 추구했음.

#### ■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외교관계 모색

-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올 4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일본과의 외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말레이시아와 양국의 협력 강화와 국방에 관해 논의하였음.
- 프라보워는 낙선 후보들의 선거 불복으로 방문 시점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정상외 방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자신의 첫 해외 특별 방문을 주변국들이 자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줌과 동시에, 조코위 행정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할 것임을 주변국들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친중국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보워가 중국 방문에 이어 바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인도네시아 외교가 한쪽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함.

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구제금융·채무재조정 이후 원리금 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SDR111억(157.1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외채상환 부담 증가로 채무상환을 2010년까지 유예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2006년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한편,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8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5건\*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8~2002년 중 체결된 채무재조정 3건에 대한 원리금은 안정적으로 상환 중임.
- \* 1966·67·68·70년 및 2005년, 총 53.9억 달러 상당
- 재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르면 1998년과 2000년 체결 건은 ODA 잔액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체결 건도 상환 시작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표 4] 인도네시아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약 개요(상환 진행 건만 포함)

체결연도	대상 건	대상금액 (억 달러)	상환기간(거치기간)	
			ODA	비(非)ODA
1998	1998~2000년 중 만기 도래분	41.8	20년(n.a.)	11년(n.a.)
2000	2000~2002년 중 만기 도래분	54.5	20년(7년)	15년(3년)
2002	2002~2003년 중 만기 도래분	54.7	20년(10년)	18년(5년)

자료: Paris Club

- 2023년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 161억 9,530만 달러(단기 31억 3,590만 달러, 중장기

130억 5,940만 달러) 중 연체액은 1,000만 달러(단기 760만 달러, 중장기 240만 달러)로, 연체비율(0.06%)이 낮고 재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연체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등 상환태도는 대체로 양호함.

\* 주요 ECA 여신잔액(2023.9월 말, 억 달러): 일본(32.3), 한국(36.4), 프랑스(44.2), 독일(7.7) 등

- 미 수은, 영국 UKEF, 독일 Hermes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UKEF는 중장기 인수자금에 대해서는 현지화 취급도 가능하나, 종교·인종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시 프로젝트 소재지에 따라 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표명함.

\* 마영독 ECA의 여신잔액(2023.9월 말, 억 달러) : 미국 0.7, 영국 2.5, 독일 7.7

## 2. 국제시장평가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06)	3등급 (2022.06)
Moody's	Baa2 (2024.04)	Baa2 (2022.02)
Fitch	BBB (2024.03)	BBB (2023.09)

-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12년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Moody's와 Fitch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전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양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부담이

동일한 신용등급의 타 국가 대비 낮은 편이며, 세계 16위의 GDP 규모, 인구 4위의 내수시장 등 거대 경제규모가 대외충격 흡수 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음.

- Fitch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상한선 적용(GDP의 -3%)이 공공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단, 낮은 재정수입(GDP 대비 15%, 2023년 추정)으로 인한 공적채무 상환능력 저하, 외자 유출 및 환리스크에 노출된 채무구조, 재정관리법 적용 유예로 인한 공적채무 증가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음.

## VI. 종합의견

-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에 힘입어 정부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5.0%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금년 2월의 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선거로 인해 투자를 유보하던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프라보워 당선인이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시사하며 국가 재정적자 상한선(GDP의 -3%)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인프라 구축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대외차입 등으로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간 3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2023년 9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 161.9억 달러 중 연체액은 1천만 달러로, 연체비율(0.06%)이 미미하여 채무상환 태도는 양호한 편임.

##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휴먼명조 13pt., 줄간격 160%)
-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shjung@koreaexim.go.kr / jiyeseo@koreaexim.go.kr

Tel : 02-6255-5674 / 02-3779-6576

- 기고 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는 제반 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